매년 온·오프라인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해온 24년 전통의 국감전문 모니터단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보 도 자 료
국정감사 종합평가
2023.1.6.(319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우.0850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코오롱애스턴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상시 정책청문회 등 365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尹(5개월)~文정권(5개년) 교체기 국감 종합평가 "팬덤 정쟁 D학점"

정쟁국감을 탄식하는 유권자들이 국회해산을 절규하기도 했음

▣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온갖 재난에 민생국감은 실종되고, 연일 쏘아대는 북의 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이상의 안보불안을 떨쳐낼 정책국감커녕, 감사 일시는 축소, 피감 기관수는 증가하며, 형식적인 '때우기 국감' 일쑤!

▣ 하루10개 이상 피감기관을 동시감사 : 한마디도 묻지 않으면서 한번에 수십개 기관 불러놓고 하루종일 대기시켜 // 하루에 53개 피감기관 감사한 과방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 // 3년간(21-1,2,3.) 하루에 10개 이상 피감기관 동시감사- 부실감사

▣ 막말파동으로 소란, 파행속출, 감사기간 의원징계안만 8건 제출 등 여야갈등 심각

- ▲ 김의겸 의원(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 ▲ 이재명 의원(국방위원이 방위사업체 주식보유)
- ▲ 김교흥 의원(거짓말정부, 버르장머리 등 비속어)
- ▲ 정진석 의원(식민사관논란 페이스북글 관련)
- ▲ 노웅래 의원(김문수 위원장 모욕)
- ▲ 윤창현 의원(채용비리의혹 동료의원 실명거론)
- ▲ 권성동 의원(혀를 깨물고 죽지 인신공격 논란)
- ▲ 주철현 의원(고 이대준씨와 유가족 명에 실추)

《국감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 : 2023. 1. 6.(금) 16:00, 국회박물관 2층 대강당》

- ▲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한 상대당(의원) 비난/헐뜯기 등 국감 파행유도(?) 난무-- (법사위, 교육위, 외통위, 환노위) / 피감기관앞 추태
- ▲ 26조 5천억대출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질책 이어져(정무, 농해수, 행안, 산업위까지 전방위)
- ▲ 서울시 예산(국민의 혈세)으로 운영하는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무려 3099개/ 1년 동안 한번도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도 681개(행안위 서울시 국감)
- ▲ 월급줄 돈이 없다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헐값에 팔아(복지위 공공조직은행 국감에서) --- 한해 혈액 3만명분 폐기,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의 오염된 3000명분의 혈액은 버젓이 유통된다고,(복지위 적십자사 국감---국민건강 방치 ---경악/분노)
- ▲ 초과세수 61조 걷히자 세금 체납액 28조 8천억원을 '안 갚아도 된다' 면서 결손처리 (국민혈세 낭비---기재위 국세청 국감)
- ▲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 대한민국 - 국가/국민적 대책시급 (법사위, 행안위, 복지위, 농해수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마약관련 질의/질타)

1. [평가개요] 지난 24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우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외 22인)은 2022년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를 전방위 비대면 모니터하여 국감을 종합평가합니다.

2. [국감성적] 제21대 국회 3년차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5년째 국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를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지난 10월 14일 중간평가에서 밝힌 그대로 **D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가. 중간평가 이후 환경노동위의 경사노위 파행 등과, 더불어민주당사에 있는 대표 측근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19일 오후 5시 넘어 민주당의 국감 중단선언으로 국정감사가 중지되었고, 20일에는 국감 보이콧 여부 의원총회 후 감사가 진행되었으며(법사위는 반쪽 국감), 24일 종합감사 오전 파행 등 귀중한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의 시간인 국정감사 시간을 파행으로 진행하여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 **지난해** 국정감사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손팻말 전투로 시작해, 윤석열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후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승리자)에 대한 **후보검증(대선전초전)**으로 끝났는데,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적폐(?)와 비리를 방어**하는 데 몰두하였고,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논란**을 차단하는 데 여념이 없었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정감사가 연기까지 되었음에도 이의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네탓’ 논란**만 야기해 눈살을 치푸리게 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16개 상임위 99개 국감장에서 **2,404회**나 ‘북한’이 언급되었습니다.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하고도 **845회**나 되었으며, 법사위와 농림위의 경우 주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관련이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의 10월 14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공사내에 설치된 2018년 7월 북한자료실 관련 임이자 의원의 질타성 질의와 진성준 의원의 옹호성 확인질의로 북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육위의 10월 19일 서울대 국감에서는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자료실 설치(조경태 의원)가 질타되었습니다.

3. [국감행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나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여,야가 바뀐 국정감사

가. 제21대 국회 세번째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일답’이 많이 사라져 피감기관장의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어 떼우기식 국감이되었으며,**

나. 코로나가 진정국면이기는 하지만 무려 783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해 10개 이상 피감기관 동시감사만도 26회가 되었으며,

다.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1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145일로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고,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였습니다.**

라. **태부족한 감사시간에 여야간의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여야간 경쟁하듯 여야당 당대표 등 윤리위 제소)하였습니다. ≪국회가 국감이 부활한 지 35년간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 적정한 피감기관선정, 일반인 증인과 기관증인과의 중요성 정도를 알 수 없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113명의 증인과 101명의 참고인이 출석함(국회회의록 기준)≫

마. 총 국정감사 시간은 **1240시간 38분**(국회공보기준)**이었으나 실제 감사질의응답시간은 643시간 56분 52초**(외통위 재외공관국감, 영상없는 일부 위원회 제외)에 불과했으며, 위원회별 국정감사 첫날 질의응답횟수는 **700**회였는데, 질의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 중단된 횟수는 **358**회로, 마이크 중단율은 **58.18%**나 되어 소리없는 국감을 하였습니다.(위원회별 국정감사 마지막인 종합감사일에는 **57.12%**)

바. **2시간에도 못 미치는 국정감사**를 한 국정감사장은 13곳으로 외교통일위 아주반, 행정안전의 지방 국정감사와 기재위 지방2반 등 주로 지방과 해외에서 한 국정감사였으며, **오후 6시 이전에 종기 감사종료**한 국정감사장은 모두 **15곳**으로 늘었습니다.(민주당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중단된 10월 19일 4개 위원회 포함)

사. **꼴불견 파행도 19건**이나 목격되었는 데, 모니터들이 지적한 실망스러운 국정감사장 1위는 **여가위의 10월 25일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이외에 10월 24일 10개 상임위의 지연파행 종합국정감사, 10월 19일 검찰의 압수수색관련 교육위 등 4개 상임위 국감 중단, 10월 6일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 - 낙탄사고, 미사일 발사에도 '깡통안보' 막말 파행, 10월 20일 법사위, 대검찰청 반쪽 국정감사, 11월 8일 국회운영위의 '웃기고 있네' 메모파동 국정감사, 10월 4일 외교통일위, '장관 퇴장요구' 파행 국정감사, 10월 12일 환노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퇴장' 파행 국정감사 등이었습니다.

4. **[의원평가]** 제21대 **국회의 세번째 국정감사는 팬덤 정쟁국감으로 치우친 점이 크지만,**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 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선의 **서병수, 안민석, 이상민** 의원 등 중진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원의 25%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가. 기본적으로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본질의+ 보충질의+추가질의 합산횟수 평균), **질의내용 전체를 종합 수집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예산집행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내역 점검여부를** 5단계(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과 해당사항없음 1점)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질의 횟수 이상 질의, 대안 또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은 가점하고, 중복질의**(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 질의한 경우) **질의 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질의시간 안지키기, 상대당 의원 비난)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짓) **국정감사 방해**(파행유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국감방해) **등은 감점하였고, 추천 및 지적의 경우에는 ① 적시성(필요성), ② 실효성(논리성), ③ 충실성, ④ 국익/공익성, ⑤ 공정성** 등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의 경우 시민단체, 52개 대학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

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하였고(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니터단에서 모니터·분석·확보한 자료와 맞는지 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국감선정 원칙대로 국감기간 중 국감과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하고, 국감불참 2일 이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감우수의원(국리민복상)은 **각 상임위별 상위 25%내**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겸임 상임위의 경우**에는 본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여가위는 최악의 국정감사로 우수의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으로, 최다선 6선이면서도 정확한 자료와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질의로 국감의 생기를 불어 넣은 **박병석** 의원(외교위), 심야까지 꾸준히 참석해 전문성있는 감사를 행한 5선의 **변재일** 의원(과방위)과 국회내 의원논문표절 심사위 설치, 1000원 학식 등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조경태** 의원(교육위)을 선정하였습니다.

라.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여야정쟁 속에서도 편파시비나, 파행없이 감사를 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3선의 **박대출** 기재위원장(국),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민)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민)을 선정하였습니다.

5. [국감개선] 국회의원이 수년간 지적해도 피감기관은 시정이나 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그저 "예, 알겠습니다"라는 형식적 면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1년이 지나서야 감사장에서 되물어 **시정조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맹탕국감이 재현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지적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국감이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의원 실명제 실시) 또한 **현장시찰과 일반증인은** 국감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0일 중 **10일간 정기국회 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6. [국감당부]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Lord Acton)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헌법 제46조②, 국회법 제114의2**)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정책,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먼 팬덤 정쟁에 몰두하는 **부실·구태국감**이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붙 임 : **국정감사(21-3) 종합평가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1부.** 끝.

《상세한 분석·평가(319쪽)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6

2022년도 국정감사(21-3)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24년 전통의--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 (가나다 순)

박병석 외교통일위원(6선, 민)	변재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5선, 민)
조경태 국회교육위원(5선, 국)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국)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민)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 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가나다순≫ 정당표시 :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힘) 무소속(무)
국 회 운 영	4	김수흥(민) 이장섭(민) 전봉민(국) 조은희(국)
법 제 사 법	4	김승원(민) 이탄희(민) 장동혁(국) 전주혜(국)
정 무	6	김한규(민) 소병철(민) 양정숙(무) 윤창현(국) 윤한홍(국) 이용우(민)
기 획 재 정	7	고용진(민) 김상훈(국) 김주영(민) 류성걸(국) 송언석(국) 유동수(민) 정태호(민)
교 육	4	도종환(민) 서병수(국) 안민석(민) 이태규(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5	박성중(국) 윤두현(국) 이인영(민) 조승래(민) 허은아(국)
외 교 통 일	4	안철수(국) 우상호(민) 이명수(국) 이상민(민)
국 방	4	성일종(국) 송옥주(민) 안규백(민) 한기호(국)
행 정 안 전	6	김 웅(국) 송재호(민) 이만희(국) 이해식(민) 장제원(국) 최기상(민)
문화체육관광	4	김예지(국) 이개호(민) 이병훈(민) 황보승희(국)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5	서삼석(민) 어기구(민) 윤준병(민) 이달곤(국) 이양수(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7	김성원(국) 김회재(민) 신영대(민) 양금희(국) 이용빈(민) 이인선(국) 한무경(국)
보 건 복 지	6	강훈식(민) 서정숙(국) 이종성(국) 조명희(국) 최혜영(민) 한정애(민)
환 경 노 동	4	김형동(국) 이수진(민,비) 임이자(국) 전용기(민)
국 토 교 통	8	김병욱(민) 김정재(국) 김학용(국) 맹성규(민) 서범수(국) 유경준(국) 조오섭(민) 한준호(민)
여 성 가 족	0	-
비고	78	1. 선정비율 : 상임위원회별 25% 범위 내에서 선정((여가위 포함 위원회별 현원대비 22.57%) 2. 전체 343명(운영 28/ 여가 17) 중 모범, 우수상임위원장 포함 84명(전체의 24.49%) 3. 겸임 상임위 우수의원은 본 상임위에서도 우수하였음 (민주 43, 국민 40, 무소속 1) 4. 우수상임위는 대상자 있는 경우 1명 더 추가 선정

2022년도 국정감사(21-3)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2022. 11. 8. 국정감사 종료시점 기준

1 교섭단체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선정의원(명)	43	40	1
전체의원(명)	169	115	14
선정비율(%)	**25.44%**	**34.78%**	**7.14%**

※ 국회의장 제외.

2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선정의원(명)	42	21	10	5	6
전체의원(명)	156	69	41	20	12
선정비율(%)	**26.92%**	**30.43%**	**24.39%**	**25.00%**	**50.00%**

※ 김진표 국회의장(5선) 불포함

3 의원 성별

구분	전체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여성의원(명)	57	17	**29.82%**
남성의원(명)	241	67	**27.80%**

※ 감사위원 298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9.12%임

4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3	71
전체의원(명)	47	251
선정비율(%)	**27.66%**	**28.29%**

※ 지역구 현역의원 252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5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시도	선정의원	전체의원	비율(%)	광역시도	선정의원	전체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12	49	24.49%	강원도	2	8	25.00%
부산광역시	5	18	27.78%	충청북도	3	8	37.50%
대구광역시	4	12	33.33%	충청남도	5	11	45.45%
인천광역시	3	13	23.08%	전라북도	3	9	33.33%
광주광역시	3	8	37.50%	전라남도	4	10	40.00%
대전광역시	3	7	42.86%	경상북도	6	13	46.15%
울산광역시	1	6	16.67%	경상남도	3	16	18.75%
세종시	0	2	0.00%	제주도	2	3	66.67%
경기도	12	58	20.69%	계	**71**	**251**	**28.29%**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경기는 59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수원무 1명 제외

2022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변경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정함.

1. 기본 자료 조사

- 국정감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전수 조사함.

(1) 피감기관별 질의횟수(주질의, 보충,추가질의 합산횟수)
(2) 피감기관별 질의시간 합산
(3)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정리
*의사진행, 자료제출발언은 포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사 및 평가

(1) 질의내용 분류 및 평가
- 질의내용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 못함이나 해당사항 없음 1점'으로 평가함.

① 부정비리지적(피감기관이나 그 직원이 잘못한 사항 지적)
② 대안, 법제도 개선(피감기관의 법제도, 정책미흡 개선방안 제시)
③ 자금집행(재정)문제점(피감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사례 지적)
④ 시정조치점검(과거국감 지적에 대해 시정이 되었는지 점검)
⑤ 정책관련 잘못 지적(피감기관의 정책 문제점 조명, 사례제시)

(2) 중복질의유무(다른 의원의 질의에 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질의)
(3) 감점요인 평가
- 질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감점함.

① 질의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시간 안 지키기, 상대의원 비난)
②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 짓)
③ 국감방해 원인제공(파행유발, 의사진행 국감방해)

3. 국정감사모니터 위원 평가 및 우수(못한)의원 추천 기준

- 국정감사 내용 평가의 경우, 아래 다섯 가지 준거(원칙)에 의해 5 단위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 척도로 평가하여 우수의원과 못한 의원을 추천함.

① 적시성: 감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적시)에 이루어 졌는가?
② 실효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③ 충실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정당하며 논리적이고, 정보는 충실한가?
④ 국익/공익성: 국가발전과 더 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
⑤ 공정성: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가?

(1) 교차평가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함.
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2)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평가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 모니터단이 입수한 자료와 비교,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함. 잘한 의원이 많거나, 평가가 비슷한 경우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함.

5. 결과 발표 및 국정감사 평가

전체 국정감사 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위원회별로 25%를 우수의원으로 평가하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함.

①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②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③헌정대상 등 의정감시의 "7종 국익(國益)기능"

① **국감현장모니터링**은 **국민주권**원리, **헌법**(제50조)**국회법**(제75조)**국감조법**(제12조)에 근거한 **의사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다 ② 대학생단체 등 270개 NGO연대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된 국감모니터 전문단체이며, 그 주관단체인 ③ **법률소비자연맹**은 32년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NPO로서, **국회사무처**(유인태/하단참조)가 **방해 하여도,** 이미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 모니터만으로' 시행해온** 의정종합평가(**대한민국 헌정대상**)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미국/일본/영국 등의 NGO/국회의원/교수/변호사들의 룰 모델이 됨〉**되었듯이, 현장 모니터 방해에도** 모니터/평가는 **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 방해는 **7종 국익기능**을 저해시키는 **반**국익/**반**민주 행태다.

1. 국회(의원)의 민주성 상징 --**대한민국 국회**엔 24년〈주관단체는 32년〉동안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없이"** 〈혹간 폄훼/비방보도는 법적/윤리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즉시 드러나곤 함〉 **국회**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모니터/평가 해온 **헌정대상**(의정종합)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 즉 **시민의 권력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랑(긍지)이며 당당한 **민주성 상징**이 된다.

2. 국회(의원)의 존재감 회복 --**국민들은 TV**등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쌈질하는 것만 보다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대학생이나 시민(대표)들이 비로소 **국회의원의 노고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게 된다.

3. 국감위원의 긴장감 조성 --감사현장에 **NGO대표가 불참한** 2020~21년도 국감은, 텅빈 감사위원석, 짧은 국감일정-형식적 소화, 국가존망과 민생외면, 부정부패를 비호/감싼다는 의혹속에 **여/야간 막말과 난장판이 연출되었는바, NGO의** 현장모니터는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속에 충실감사를 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

4. 피감기관의 긴장감 조성 --피감기관이 **국감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답변이나 '불성실하게 버티기' 답변을 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 감사현장에서 시민단체**(NGO모니터단)**가 피감기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수감하게** 만든다.

5.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능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Sir. Acton>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척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평가/공개**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권리요 책무다.

6. NGO 정책과 국정 협치 --**시민사회단체**(NGO)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인되는 국정상황을 이해하여, 국가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적 **정책개발**과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UN이 정부(GO)의 주장만이 아닌,** 비정부 **민간기구(NGO)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공동발전을 위한 **협동원리**이며 **거버넌스**(협치)인 것이다.

7. 시민 대학생들 정치학습 --청년/대학생 및 시민들이 국감현장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국정현안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며,** 나라사랑/나라걱정을 하게 되는 등 **민주정치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가 조폭·흥위병 같은 폭력·직권남용(입증 충분)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헌법·행정법·국회법 등을 위반(2019.10.어떤 행정절차도 없이)하며, 2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32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을 모함·방해를 자행!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적 법적조치**를 조만간 취할 예정이다.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6~30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람.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마나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1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얕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 주요목차 ▣

▣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 5
▣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주요통계**(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포함) ····· 6
▣ **2022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 7
▣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모니터단의 국회의정감시 7종 국익(國益)기능** ····· 8
▣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장에 좌정해야 할 이유** ····· 9
Ⅰ.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 12
◉ **2022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개요** ····· 12
◉ **2022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 13
1.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D학점 ····· 13
가. 개관 ····· 13
나. 2022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 ····· 14
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와 성과 ····· 15
라. 2022년도 국감행태의 문제점과 특징 ····· 16
마. 2022년도 국정감사의 눈에 띈 쟁점 ····· 19
2.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 약평(자세한 내용은 Ⅳ. 상임위 활동 요약) ····· 21
3. 국정감사 일자별 약평 (자세한 내용은 Ⅳ. 국정감사 일정별 요약) ····· 24
4.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 28
가. 총괄 : 질의횟수 총 5,995회, 질의응답 총 643시간 56분 52초 ····· 28
나. 질의횟수 최고는 환경노동위원회 ····· 30
다. 질의응답시간 최고는 환경노동위원회 ····· 30
라.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 ····· 31
5. 제21대국회 4차년도 국감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 31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 32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 32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 32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 33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핥기' 식 국감 종식 ····· 33
◉ **2022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 35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 35
가. 선정근거와 연혁 ····· 35
나.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가나다 순) ····· 36
(1) 박병석 국회의원(6선, 전 국회의장, 외교통일위원회) ····· 36
(2) 변재일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 39
(3) 조경태 국회의원 (5선, 교육위원회, 부산 사하구을) ····· 42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 45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45

나. 선정결과 및 사유, 활동을 약술함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 46
(1)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 46
(2)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민주당, 3선) ····· 49
(3)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 52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 55

Ⅱ. 2022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 56
1. 막말, 끼어들기 등으로 파행, 원활하지 못한 상임위 현황 ····· 56
2. 2022년도 10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 감사, 부실국감 ····· 59
3. 심야국감은 21번, 대부분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대응관련 파행으로 ····· 65
4. 감사시간이 2시간이 안된 곳은 13군데 ····· 67
5. 조기 종료 국감은 15곳으로 대폭 늘어 ····· 68
6.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계속 ····· 70
7. 국회의장 외교 동행 등 출장 의원들의 국정감사 불참 ····· 71
8. 주요 당직자 등의 국감활동과 국정감사 불참의원 ····· 73
9.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은 여전함 ····· 75
10.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실시간 제공 ····· 79

Ⅲ. 2022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 ····· 86
1-1. '김건희 여사' 15개 상임위 45개 국감장에서 536회 언급 ····· 86
1-2. '이재명 대표' 15개 상임위 74개 국감장에서 780회 언급 ····· 92
2-1. 제21대 국회 국감의 단골소재가 된 방탄소년단(BTS) ····· 94
2-2. '북한' 언급, 16개 상임위 99개 국감장에서 2,404회 ····· 98
3. 2022년도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 99
4. 주목을 받은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사례 ····· 115
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개요 : 13개 상임위 113명 증인 출석 ····· 115
나. 언론에 보도된 증인 및 참고인 사례 ····· 115
5. 2022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 (언론보도 중심) ····· 136
6. 2022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분석 ····· 141
7. 국정감사 기간 동안 크게 곤욕을 치른 감사위원 ····· 155
8. 거취공방이나 수난을 당한 피감기관 내지 기관장 ····· 162
9.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은 10개 위원회 29곳 국감장 ····· 170

Ⅳ.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일자별, 상임위별 활동 ····· 181
1.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활동(상임위 보도자료와 회의록을 중심으로) ····· 181
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간사 기동민, 정점식) : ····· 181
나.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간사 김종민, 윤한홍) ····· 188
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간사 신동근, 류성걸) ····· 191
라.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간사 김영호, 이태규) ····· 196
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간사 조승래, 박성중) ····· 199
바.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간사 이재정, 김석기) ····· 204
사.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간사 김병주, 신원식) ····· 207
아.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위원장 이채익, 간사 김교흥, 이만희) ····· 211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 간사 김윤덕, 이용호) ····· 214
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간사 김승남, 이양수) ····· 220
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윤관석, 간사 김한정, 한무경) ····· 227
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간사 강훈식, 강기윤) ····· 233
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간사 김영진, 임이자) ····· 238
하.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간사 최인호, 김정재) ····· 243
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간사 진성준, 송언석) ····· 249
너.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 간사 유정주, 정경희) ····· 251
2. 일자별 국정감사 활동(모니터보고,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253
가. 10월 4일(화) :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 253
나. 10월 5일(수) : 기획재정위 등 5개 상임위원회 ····· 255
다. 10월 6일(목) : 정무위 등 9개 상임위원회 ····· 256
라. 10월 7일(금) :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 257
마. 10월 11일(화) :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 259
바. 10월 12일(수) :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원회 ····· 260
사. 10월 13일 :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 ····· 262
아. 10월 14일(금) :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 263
사. 10월 17일(월) : 환경노동위 등 10개 위원회 ····· 264
차. 10월 18일(화) : 행정안전위 등 9개 상임위원회 ····· 265
카. 10월 19일(수) : 교육위 등 7개 상임위원회 ····· 266
타. 10월 20일(목) :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원회 ····· 267
파. 10월 21일(금) :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 269
하. 10월 24일(월) :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 ····· 270

Ⅴ. 2022년도 국정감사 이모저모 ····· 273
1. 2022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 273
2.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298명 ····· 274
3.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2021년도 745개) ····· 275
4.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국감 51회 ····· 278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유투브) 생중계 ····· 286
6.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 시간은 1240시간 38분 ····· 288
7.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 2개 위원회 6일 동안 10개 시·도 대상 실시 ····· 291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 297
9. 국정감사중(시작전 포함)위원회 전체회의 45회(2021년도 32회) ····· 313

▣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국정감사 및 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표 ····· 315

Ⅰ.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 2022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명 공동단장)은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활동을 **온라인(비대면)으로 모니터링 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 하였고,** 298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24년 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과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평가기준**(계량화한)**에 의거하여** 선정된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을 선정, 공개하며, **"2022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를 **2023년 1월 6일 16시,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시상식과 함께 개최합니다.**

▣ 2022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D학점

가. 개관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3번째 국정감사의 성적을 지난해(C-학점)보다 조금 하향된 'D' 학점으로 평가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권능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표자들인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지, 영토를 보위하며 국리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교체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을 총 점검할 수 있는 마

지막 국정감사이자, 여소야대 국정감사라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국정감사임에도, 막말과 정쟁으로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였다.

≪2022년도 국정감사를 'D' 학점으로 한 이유≫

▲ 국정감사 본연의 재정통제(예산낭비 점검), 부정비리 적발 등의 기능 상실
▲ 여야 모두 노골적인 '특정인 감싸기' 위한 끼어들기 막말 등 파행 심해
▲ 삼고, 북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민생, 안보에 보탬이 안 되는 팬덤 정쟁 국정감사
▲ 과다 피감기관 선정 후 하루에 수십개 피감기관을 불러놓고 한꺼번에 몰아치기 감사
▲ 검찰의 압수수색 대응논란으로 중요한 국정감사 일정이 중단, 파행, 지연

나. 2022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

○ 국정감사 전(前)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각오와는 다르게 정쟁국감, 팬덤국감을 하였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현무-2C가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국방위원회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대립을 하여 막말을 하는 등으로 파행(2022. 10. 6)하였고, 러시아의 전쟁 계속과 외교 불안 속에서 외교를 전담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감첫날(10.4)부터 주무부처 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출석여부를 두고 설전으로 파행하였다.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29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국감을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복합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 국감,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책 국감, 국민과 소통하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고 밝혔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9월 27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가 정부 여당이 됐지만, 정부가 잘하는지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살피는 국감이 되겠다"며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아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나 정책 제안 등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해서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감사 통보는 여야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 문제 때문에 연일 파행하였으며, 상관없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지연되고, 법무부 국정감사와 감사원 국정감사까지 이 문제가 더 확산되었다.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간의 문자 논란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통 감사, 하명감사, 대감(대통령-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감사장이 연일 의사진행발언이 속출(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졌음)하였고, 파행성 정회까지 하였다.

○ 지난해(2021)에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 의원석 손팻말' 설치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여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거나 귀한 국민의 시간을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허비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올해(2022년)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하였고, 교육위원회 역시 팻말이 설치되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여러 위원회에서 팻말이 설치되었고, 여가위의 경우에는 팻말과 더불어 장관퇴장요구로 파행했다. 의원이 자신의 질의와 관련된 감사 이슈에 따라 팻말(보드판)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위적인 성격은 실망감을 자아냈다.

○ 신·구권력 교체기 구 권력에 의해 임명된 인사에 대한 '알박기' 인사 논란과 신 권력에 의해 임명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식 국정감사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막말과 파행이 빚어지는 등 실망감을 주었다.

○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코로나 19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엄중한 시국에 3개 반을 나눠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 10월 19일 이후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헌법상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중단, 파행, 지연되는 사태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와 성과

≪2022년도 국정감사의 의의와 성격≫

(1)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해서 차년도(다음해) 예산심사와 입법에 반영하는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
(2) 정권교체후 첫 국정감사 :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
(3) 여소야대 국정감사 :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4) 안보·민생 위기 시의 국정감사 : 포스트 코로나19 외교, 안보, 경제 등 위기 속 도약이냐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대 시기의 국정감사

○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공과를 제대로 살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대체에너지사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여·야간의 입장 차가 있는 것처럼 잘못한 점은 고치고, 잘된 것은 계승하여 정권교체의 참 의미를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 삼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와 경기하방 전망 시대에 국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고독사 등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촘촘한 복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건강보험공단의 부정, 국민연금 재정 안정 문제, 전기요금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실상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 주택가격이 앙등하였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주택 보급을 위해 국회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거세지고 있는 도발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생활 물가의 상승 등 민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라. 2022년도 국감행태의 문제점과 특징

○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동영상(주로 뉴스)을 재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 상영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파행을 하였으며, 시간부족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일문일답 질의/답변을 통한 생동감 있는 감사라는 국회법 상의 일문일답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 감사일정은 소폭 늘었으나(145일), 감사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도 38개나 증가한 783개 기관(1차년도 705개⇒ 2차년도 745개⇒ 3차년도 783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했다.

○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1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대체공휴일로 인해 3일 국감하고 4일 쉬는 3감 4휴 국정감사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하였다.

○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일부 위원회에서 여전하였고, 태부족한 감사시간을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피의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감사중단 등 파행으로 낭비(?)하였다. ≪10월 19일에는 국정감사가 저녁 중단되었고, 10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10월 24일 국정감사가 오후부터 재개 되었다. 법사위의 10월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야당의원들의 거부(보이콧)로 인해 '반쪽 국감'이 되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팬덤 정치로 특정이슈에는 막말과 정쟁으로 파행하였고, 국정감사 지연으로 밤 11시가 넘는 심야 국감이 늘

었다. 더욱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여야 감사위원간의 감정 대립, 감사위원간의 끼워들기와 막말은 여전하였다.

≪말꼬리 잡기, 끼어들기 사례 예시≫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유독 심해 : 언급만 하면 끼어들기 파행 - 당의 지침이 있는 듯

○ 김교흥 의원의 "버르장머리가 없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 강기윤 의원의 '니나'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 문정복 의원의 '개나 줘버리라'

10월 7일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관련) 등

○ **전, 현 정부의 인사충돌 인사청문식 국정감사**가 많이 나왔다. 과거 정부의 소위 '알박기' 인사와 현 정부의 인사행태와 관련하여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요 인사청문식 국정감사 예시≫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발언 관련
-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 김제남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의 행보 관련
- 10월 7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원자력위원회 등 국정감사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의 행보 관련
- 10월 6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 전현희 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알박기 인사논란
- 10월 13일 정무위원회의 국가권익위원회 국정감사

○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의 업무계획서 관련
- 10월 11일 산업위의 한전 관련 국정감사 -

○ 김태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관련
- 10월 11일 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과거 광우병 시위 전력 관련
- 10월 12일 복지위의 중앙의료원 국정감사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이력 논란
- 10월 17일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송둥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관련 무료변론 논란

-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구조개혁
- 10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 국정감사

○ **국정감사시 의사진행발언 등 발언횟수가 질의횟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다.

국회 영상회의록 통해 질의횟수와 시간, 발언횟수와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보통 주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으로 2회 내지 3회 질의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질의횟수가 의사진행, 자료요구 등 발언횟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경우가 보통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자료요구 발언 등을 하는 경우가 질의횟수보다 많은 경우가 6곳이나 되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 질의횟수와 발언횟수 비교≫

상임위원회	발언횟수가 질의횟수보다 많은 피감기관	총 발언횟수	총 질의횟수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위원장 제외)
법제사법	법무부 등(10.6)	59	52	조정훈 - 4회
	감사원(10.11)	65	54	정점식 - 6회
교육	교육부 등(10.4)	73	52	강민정 - 6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10.7)	51	42	이태규 - 5회
외교통일	외교부 등(10.4)	56	38	이재정 - 7회
환경노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10.12)	79	41	진성준 - 7회 임이자 - 7회

마. 2022년도 국정감사의 눈에 띈 쟁점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현안 이슈에 대해 여야당이 충돌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된 쟁점들이 많이 나왔다.

○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의 '표적·정치' 감사 논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전개됐다.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도 쟁점이 되었다.

○ 과방위 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박성하 SK C&C 대표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과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이슈 및 '비속어 논란'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태원 참사의 용어문제까지 다양한 정정이 있었다.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 주요 쟁점≫

(1) 감사원의 감사관련
법사위를 비롯해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1)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의 적합성 문제
2)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과의 문자논란
- 내통, 하명, 대감(대통령-감사원) 감사 여부
3) 감사원의 표적수사 논란 및 자료제출요구 논란

(2) 미국 인플레이션법(IRA) 대응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자중기위원회 등

(3)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와 MBC 비속어 자막보도
과방위, 법사위, 행안위, 환노위, 외통위 등

(4) 태양광사업 문제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지어 과방위도(적자MBC의 태양광투자)등

(5) 신당동역 스토킹 살인사건 및 마약범죄 기승
법사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스토킹, 마약 범죄와 예방, 성범죄, 마약유통

(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 교육위, 법사위, 정무위, 문광위, 국토교통위 등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국토위 중심
- 당사 압수수색으로 전 상임위 파행 / 중단 / 지연

(8) 대통령실 이전 관련 :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전안전위, 국방위, 국토위 등

(9) 카카오 먹통 사태 : 정무위, 국토교통위, 과방위, 행정안전위, 산업위 등

(10) 10·29 이태원 참사 : 국회운영위
(11) 레고랜드 사태 : 정무위, 기재위, 국회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산업위 등

2.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 약평(자세한 것은 Ⅳ. 상임위 활동 요약)

○ 양원제 국정감사의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대통령 서면조사 논란부터 시작하여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내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여야가 정면 충돌하여 국정감사 지연, 파행, 반쪽 국정감사 등 부정적 국정감사의 종합판이었다.

○ 세계경제의 침체, 삼중고로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진행된 경제관련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대립하였으며,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질타와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비판이 있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과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책을 주문했고, 가계부채 폭등 문제, 물가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충돌해 막말소동을 빚었다. 최근의 교권 침해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

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대통령 순방외교와 관련한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원전폐쇄 논란이 계속되었고, 알박기 인사 논란과 막말 파동이 빚어 졌으며,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쟁점이 돼 여야 위원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과 폭넓은 보상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대통령 첫 조문외교 · 순방외교와 관련해서 여 · 야간의 대립이 극심했고, 장관퇴장요구로 파행이 빚어졌으며, 비속어 영상 상영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9 · 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최악의 여러 옵션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0월 4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깡통안보 파행 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한미일 연합훈련,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과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등이 쟁점이 되어 여야가 충돌하였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위원들은 피격사건을 정치탄압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행안부 내 검찰국 신설, 검수완박 등 현안에서도 충돌하였다. 지자체 인구소멸문제, 재난대책, 성폭행범 사후관리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청와대 활용, 대통령 풍자만화와 표현의 자유.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여야가 충돌하였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에 대한 비판에는 한목소리를 냈고,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현안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쌀값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주 쟁점이었으며, 여야가 갈등을 빚었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처 미흡 등이 질타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에 대한 해수부장(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미국 인플레이션법안(IRA) 대응, 세제 개편,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 등 신구 권력 간의 정책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고, 10월 4일 임명된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10월 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니나'발언 등 막말로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개선과 코로나19 방역 정책,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 청년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살해와 자살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었다. 46억원 규모 대형 횡령사건에 대한 질타, 연금재정 안정화 등이 논의되었다.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4대강 논란과 노동조합 파업보장법 등 정책현안에 대해 충돌하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언급 등 김문수 경사노위원장과 관련해서도 파행을 빚었으며, 10월 15일 경기 평택의 SPC 계열사인 SPL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전세 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용산공원 조성, 부동산 공시 현실화, 산하 공기업 방만 경영 문제가 대두되었고, 철도공사의 개인정보 감사원 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태원 참사관련 여야 간 조명이었고, '웃기고 있네' 메모파문으로 파행하기도 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

장 권인숙)는 여성가족부 폐지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고, 장관 퇴장 요구로 인해 파행이 있었다.

3. 국정감사 일자별 약평 (자세한 것은 Ⅳ. 국정감사 일정별 요약)

○ **10월 4일**(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지칭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고리로 공방이 이어졌다.

○ **10월 5일**(수) 감사 이틀째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대립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 **10월 6일**(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속어 논란 관련 MBC자막 보도 적절성을 놓고 내내 충돌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서해 사건 감사로 국감장은 시끄러웠다. 법사위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나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여야 간 설전을 벌이다 심야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10월 7일**(금)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강제북송사건' 등을 두고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해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고, 김제남 원자력 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위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3개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증인 논란이 계속되었다. 의원간 '개나줘' 막말로 파행하기도 하였다.

○ **10월 11일**(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감은 의사진행 발언 허용 여부로 시작하자마자 정회하였고,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오전 내내 아예 질의조차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도 정쟁은 끊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 **10월 12일**(수)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MBC, YTN 세무조사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코인'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나왔고, 야당은 TBS 지원 중단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하였다. 환노위 국감은 세 차례나 중단됐다.

○ **10월 13일**(목)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과방위의 MBC의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보도와 관련하여 충돌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문제로 공방이 있었다.

○ **10월 14일**(금) 아침 북한의 위협 비행기 시위와 미사일 발사소식 속 여야는 북한의 도발 규탄 한목소리를 내었지만 안보 위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네탓' 공방을 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발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하였다. 법사위는 지방국정감사를 하였으며 광주학동사고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조명하였다.

○ **10월 17일**(월) 여야가 법사위의 헌법재판소(헌재)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문제로 격돌했고,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 배후론을 놓고 설전을 하였다. 교육위의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위원장 의친일 발언과 국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에서는 '대북 코인사업'에 KBS 현직 간부 연루 의혹에 조명되었다. 농해수위에서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었다.

○ **10월 18일**(화)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되었고,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이번 국감은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4년을 검증해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집단퇴장을 하였다.

○ **10월 19일**(수)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정감사는 중단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10월 19일 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단되었다.

○ **10월 20일**(목)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이어갔지만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대상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시대전환만 참석한 채 국감이 시작되려 하자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 **10월 21일**(금)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 **10월 24일**(월) 오전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오후에서야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은 "더탐사와 협업으로 제보받았다" 며 "지난 7월 2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며 의혹을 제기해서 큰 파장을 야기했다. 대부분 국정감사장은 오전 파행으로 인해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모니터위원들이 지적한 '많이' 실망한 국정감사장≫

○ 10월 25일 여가위(위원장 권인숙) 국정감사 - 여가부장관 퇴장요구 논란 파행
○ 10월 24일 10개 상임위, 파행 지연 종합국정감사
○ 10월 19일 검찰의 압수수색관련 교육위 등 4개 상임위 국감 중단
○ 10월 6일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 - 낙탄 사고, 미사일 발사에도 '깡통안보' 막말 파행
○ 10월 20일 법사위, 대검찰청 반쪽 국정감사
○ 11월 8일 국회운영위의 '웃기고 있네' 메모 파동 국정감사
○ 10월 4일 외교통일위, '장관 퇴장요구' 파행 국정감사
○ 10월 12일 환노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퇴장' 파행 국정감사

≪의원간의 언쟁(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 장내 소란이 발생한 국정감사장≫

국감일자	위원회	파감기관	이유/원인
2022.10.04.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윤석열 대통령 발언관련 MBC에서 자막 조작의혹 관련
2022.10.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김한정 간사의 '이 사람아. 정말' 발언 관련
2022.10.06.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야당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제기와 관련(한밤중)

국감일자	위원회	파감기관	이유/원인
2022.10.06.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한미일 미사일 대응 훈련과 관련
2022.10.07.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광주판 성폭행 사건입니다' 라는 조은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란
2022.10.07.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추궁관련
2022.10.12.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노위 등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과거 발언 사과 요구 관련
2022.10.13.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김건희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 자료제출 요구 관련
2022.10.18.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 도지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소극적 대처 관련
2022.10.20.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10월 19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
2022.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10월 19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
2022.10.25.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여성가족부장관 퇴장 요구

4.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가. 총괄 : 질의횟수 총 5,995회, 질의응답 총 643시간 56분 52초

개별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감사 진행도중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요구 발언, 그리고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외한 감사위원이 실제 국정감사를 한 질의응답(증인신문 포함)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총 질의횟수는 **5,995회**였으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면 **5,784**회였고, 질의응답 총시간은 **643시간 56분 52초**였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19.8**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8분 19초**로 잠정 조사되었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 감사위원당 평균 19.5회 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시간 18분 58초였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24.3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45분 41초였다. ≪주의할 것은 2020년도에는 상임위원장과 청가 및 결석 위원을 제외한 수치였음≫

≪2022년도 국정감사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위원수	총 질의횟수	총 질의응답 시간	의원당 평균질의 횟수	평균 질의응답시간
국회운영	28	165	16:10:01	5.9	0:34:39
법제사법	18	518	49:57:52	28.8	2:46:33
정 무	24	546	59:24:17	22.8	2:28:31
기획재정	26	408	45:51:45	15.7	1:45:50
교육	16	263	29:58:32	16.4	1:52:2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	426	45:49:15	21.3	2:17:28
외교통일	21	127	16:10:56	6.0	0:46:14
국 방	16	256	29:19:30	16.0	1:49:58
행정안전	22	536	51:15:28	24.4	2:19:48
문화체육관광	16	304	34:28:44	19.0	2:09:1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9	431	48:23:32	22.7	2:32:4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30	520	54:51:48	17.3	1:49:44
보건복지	24	479	51:33:59	20.0	2:08:55
환경노동	16	486	55:08:50	30.4	3:26:48
국토교통	30	484	51:03:35	16.1	1:42:07
여성가족	17	46	4:28:48	2.7	0:15:49
총계/ 평균	298	5784	623:18:03	19.8	2:08:19
겸임포함 총계/ 평균	**343**	**5,995**	**643:56:52**	17.8	1:55:26

위원회	위원수	총 질의횟수	총 질의응답 시간	의원당 평균질의 횟수	평균 질의응답시간
통계의 제한/ 주의사항	1. 외교위는 국내에서 진행된 것만 통계함 2. 과기위는 10월 4일 과기부 국감, 국방위는 10. 20. 육군본부 국정감사 제외 3. 교육위, 행안위, 기재위, 국토위는 일부 지방국감 제외수치임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위원수	총 질의횟수	총 질의응답 시간	의원당 평균질의 횟수	평균 질의응답시간
국회운영	28	111	12:09:13	4.0	0:26:03
법제사법	18	421	56:57:02	23.4	3:09:50
정 무	24	526	61:52:41	21.9	2:34:42
기획재정	25	538	62:31:56	21.5	2:30:05
교육	16	336	41:06:53	21.0	2:34:1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	509	52:22:20	25.5	2:37:07
외교통일	20	160	18:39:56	8.0	0:56:00
국 방	17	255	30:56:31	15.0	1:49:12
행정안전	22	584	59:34:21	23.4	2:22:58
문화체육관광	16	289	36:21:44	18.1	2:16:2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9	412	47:37:47	21.7	2:30:2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9	461	60:40:12	15.9	2:05:31
보건복지	24	386	48:55:57	16.1	2:02:20
환경노동	16	397	49:19:11	24.8	3:04:57
국토교통	29	507	54:07:04	17.5	1:51:58
여성가족	17	42	5:09:58	2.5	0:18:14
총계/ 평균		**5781**	**681:03:35**	**19.5**	**2:18:58**
겸임포함 총계/ 평균		**5934**	**698:22:46**		
※ 외교위는 국내에서 진행된 것만 통계함 (국방위의 경우 합참 국감 제외)					

나. 질의횟수 최고는 환경노동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질의횟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로 한 감사위원당 평균 30.4회 질의하였고,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로 15.7회 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평균 질의횟수가 저조한 이유는 외교부 장관인 박진 의원이 출석하여 질의를 하지 못하였고, 출장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국정감사는 통계를 낼 수 없었다. ≪참고로, 국내반만 통계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6회**임≫

다. 질의응답시간 최고는 환경노동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을 통계한 결과 평균 질의응답시간인 가장 긴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로 **3시간 26분 48초**였고, 그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로 **2시간 46분 33초**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로 **1시 42분 07초**에 불과했다. 위원회 위원수가 많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감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질의응답 평균시간은 **1시간 51분 58초로** 끝에서 두 번째였다.

라.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를 살펴 보면, 전체 의원의 질의횟수는 평균 5.9회(2021년도 4회, 2020년도 4.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평균 34분 39초(2021년도 26분 03초, 2020년도 26분 11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횟수는 5.75회(2021년도 3.8회, 2020년도 3.9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평균 35분 12초(2021년도 24분 49초, 2020년도 23분

54초)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횟수는 6.2회(2021년도 4.4회, 2020년도 4.6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35분 3초 (2021년도 29분 23초, 2020년도 28분 21초)였다.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은 비슷했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일 위원당 평균질의횟수는 3회(2021년도 2.5회, 2020년도 3.1회),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18분 46초(2021년도 18분 14초, 2020년도 19분 26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질의응답평균횟수는 2.56회로 16분 10초 질의를 하였고, 국민의힘 의원은 평균 3회로 17분 7초였다.

5. 제21대국회 4차년도 국감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 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묵살해온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본대사관에서 일본대사관과 중국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020년도 화상국정감사를 실시해 아주 효율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잘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 해외 현지 국감을 실시했다. 내년 국감이라도 해외현지 국정감사가 아닌 화상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형 국정감사라는 비난과 비용낭비, 국감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

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61조 제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들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를 제대로 관철하지 않은 것과 증인 · 참고인을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핥기' 식 국감 종식

코로나 19위기 속에서 783개(2021년도 745개, 2020년 705개, 2019년 788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3번째 국정감사이지만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 4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21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가.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 · 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 · 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특히 국감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로써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다만, 제20대 국회 1차년도(2016년)에는 국감 보이콧 등 F학점 국정감사로 선정을 하지 않았으나 2, 3, 4차년도에는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선 중진 의원 중 정쟁적 요소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조명을 하고, 모범적인 성실성을 보여 준 변재일 5선 의원(과방위), 현장감있는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서병수

의원(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기간 중 상임위원장으로 매 피감기관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국정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과 매 국정감사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타의모범이 되었던 행정안전위 이명수 의원을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선 중진의원들의 맹활약이 있었는데, 다선 중진 의원 중 정쟁적 요소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조명을 하고, 모범적인 성실성을 보여 준 최다선(6선)의원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정쟁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책국감을 전개한 **변재일** 의원(5선, 과방위), **조경태** 의원(5선, 교육위)을 선정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나.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가나다 순)

(1) 박병석 국회의원(6선, 전 국회의장,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朴炳錫) 의원(6선, 외교통일위원회, 대전 서구갑)은 최다선 의원이면서도 초선과 같은 열정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쟁점 중의 하나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미국 IRA법 영향 조사 및 각국의 반응≫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국감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으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병석 전 의장의 질의 내용이 국감 중 수차 인용되는 등 중량감있고 선도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10월4일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의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외교의 문제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고 한번 삐끗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외교라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큰 정책기조와 난맥상을 점검하였다.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지도 발표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자료에 22위이고, 지지가 19%, 반대가 74%라면서 외교의 문제를

국내에 활용하려고 하는 과욕에서 지금 꼬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인 글로벌 가치외교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시기라며, 가치외교에 너무 매몰되면 국익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바이오, 핵심물질 등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맹의 선의에 빠져서 동맹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TO 체제에서의 EU와 일본하고의 입장과 FTA를 맺고 있는, 즉 2조 2항에 의해서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EU와 일본과 다른 위치에 있다면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6월 말에 독일에서 G7이 열렸는데, 대한민국이 2020년도 2021년도, 2년간을 초청받았는데 이번에 못 받았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가 9월 달에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연 4개월 적자라면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우리가 중국을 버릴 수가 없는 게 가령 자동차 하면 지금 내연계 자동차는 부품이 3만 개고 전기자동차는 1만 8900개인데, 엔진을 배터리를 빼더라도. 아무리 선진국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이 노동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만큼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분명히 또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관계는 지금 뗄 수 없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고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경제파트너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논두렁론, 경제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논두렁 속에 들어 있는 송아지와 같아서 양쪽의 풀을 다 뜯어먹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10월 7일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첫 질의주자로 나서 통일부가 용산의 안보실과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는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장관의 입장을 점검했고,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혹시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협상장에만 나오면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비핵 개방 3000보다는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말 폭탄을 쏟아냈다며, 맞대응하지 않은 것은 높게 평가했다.

담대한 구상의 북한 전달을 점검하면서, 황강댐이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간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선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4일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추가질의까지 하면서 정책국감을 전개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잘못하다가는 2017년의 상황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을 억누를 만한, 자제시킬 만한 마땅한 기재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점검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되겠다는 여권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안보를 정쟁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익에도 많은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코스트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자꾸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군사공

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생각은 없는 지 점검했다.

긴장된 한반도의 정세를 화해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의 대북정책기조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든지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라면서, 담대한 구상의 수정 · 보완에 관한 입장을 점검했다.

일본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인 다 끊어진 우리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대화의 명분을 북한에 주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신장 인권 토론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강제징용 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의 존중 입장을 강조했다.

(2) 변재일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변재일(卞在一)의원(5선,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보통신부차관 등을 역임한 관록과 다년간 과학기술분야 의원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후한 정책질의와 함께, 과학기술정책의 난맥상을 찾아 개선을 촉구하면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점검하는 국감을 전개하였으며, 심야 국정감사까지 모범적으로 자리지키면서 열정적으로 모범적인 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교수 한사람이 너무 많은 석박사과정을 지도함으로써 지도의 부실이 야기되고 있는 공장형 연구실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하였고, 연구진실성위원회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했다.

10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중계권 문제를 예로 들면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지적했다.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KBS MBC SBS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있으면 즉시즉시 하는데, 종편에서는 제대로 재난방송을 안한다면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의 해석문제를 점검했다.

라디오의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KBS조차도 라디오 재난방송은 모니터링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문제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아직 개선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책조명을 하였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법이 만들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다못해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작년에 고리3호기 주증기차단밸브 스템 파괴로 원전 정지한 것에 관해서 작년 9월 9일 날 한 상세보고서하고 12월 17일에 한 2차 상세보고서의 사고원인, 재발방지대책의 내용이 좀 다르다면서 문제를 조명했다.

또한,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1mSv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결함가공제품으로 판정하고서 전량 회수조치하거나 유통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관광지 홍보영상 등의 문제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했다.

국가계약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업들하고 참여하는 협회를 다 주는 것보다는 협회가 그 사업들을 운

영하도록 운영을 바꾼 것에 대해 공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하여 3차 사업에서만 불량이 많은 이유를 지적했다.

스팸문자 중에 전체 적발되거나 신고된 것의 60%가 KT하고 LG유플러스에서 나왔다면서, 스팸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스팸메일에 대해서 KISA하고 방통위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직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목으로 편성해서 집행 ·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하였다.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는 MBC가 정수장학회에 돈을 내는 근거에 대해 지적하면서 적자 상태에서 장학회에 돈을 주는 지 문제를 제기했다.

방발기금의 납부제도와 관련해서도 MBC는 감경 대상에 넣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100% 국가 소유여야만이 공영방송이다라는 것은 방통위가 해석한 거라면서 법적 기준에 대해 정책질의를 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의 가시청가구만치 감면해 주는 근거조항도 점검했고, KOBACO에 정부 광고대행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통위로부터 무슨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점검했다.

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는 EBS의 교육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면서 원격교육지원 예산은 422억에서 79억으로 감소했고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활용 학습 콘텐츠, AI 활용 학습 진단 시스템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신청이 안 되어 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

KBS 2TV는 2017년과 2020년도 두 번에 걸쳐서 재허가 심사 시에 기준 미달이 돼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는데, 개선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슈가 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과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을 요구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21년 7월, 주증기차단밸브 스템 파괴로 고리3호기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같은 사고로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되풀이된 인재임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신입초임은 낮게 기존직원은 높게 오르는 출연연 보수체계 개선, IBS 임금체계 개선, 미흡한 출연연 TLO 문제 개선, 과학문화바우처 출시의 지역 불균형 문제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조경태 국회의원 (5선, 교육위원회,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趙慶泰) 의원(5선, 교육위원회, 부산 사하구을)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균형적인 감각으로 국회차원의 국회의원 논문관련 논문표절 검증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1000원 학식 정책제안과 학교폭력과 교단 위기 문제를 잘 점검하는 등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4일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3년째 학교폭력 문제에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9월 6일 날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321만 명을 상대로 했는데 5만 4000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민간단체의 설문결과와 비교하면서 심각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높다라면서 10대·20대의 사망 이유를 보면 자살이 1위인데, 특히 10대의 경우에 자살률은 학교폭력과도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이 사이버 폭력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에서는 담

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 170만원을 물린다면서 학교폭력도 처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에서 점검하면서 가해 학생들이 격리되어야 되는데 피해 학생들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시골 같은 외곽 지역에 모여 있어야 하는지 점검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권 침해문제를 조명하면서 교사를 상해 · 폭행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이슈화하였고,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위기의 지방대 상당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대학의 폐교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지방대학이 붕괴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지방이 소멸된다면서 평생대학이라든지 전환해서라도 어쨌든 지방의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10월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균형을 맞춘 의사진행을 강조하면서, 제가 지금 아침에 일찍 모 대학에서 하루 1000원 하는 1000원 학식을 준비해 왔는데, '식판을 준비해 왔는데 저게 잘못하면 밥이 다 식어 가지고 이거 보여 드리기가 참 민망하게 되겠다' 면서 현장감 있는 감사를 하였다.

대학생들 조금이라도 교육현장에서 복지라든지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제도 개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서 교육위가 조금 더 모범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1000원의 아침밥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근에 초중고등학교에 그린스마트 사업 해 가지고 한 18조 원 정도 투입하는데, 우리 대학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 못 해서 밥을 아침마다 굶는 대학생이 있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해결책을 강조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

업 하고 있는 데 사업비가 1314억으로 잡혀 있다면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목적과 중복이 된다면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고 있다며, 무려 1314억을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이걸 안전 인증을 받게 하는 부분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왜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업의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10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북한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안보는 여야가 없다. 진보 · 보수가 없다'며 학교 폭력문제와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문제를 점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인천시 교육감의 보좌관이 연루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응시자가 만든 시험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서 그대로 출제한 혐의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인천시 측근 회전문 인사 논란에 대해 점검하면서 개방형 인사를 했을 때 5명 중 3명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점검했다.

10월 19일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는 과거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말을 했는데, 한국은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역사적인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를 지어준 대통령의 자료실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칭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자료실은 있다면서, 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와 또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아리랑 · 한복 · 김치 이런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통문화 인데, 중국 정부는 자기들 거라고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동북공정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민 세금을 서울대학에다가 5700억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른 나라 지도자 뜻을 기리라고 주는 지 지적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무려 600명 이상의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적발되었다면서, 철저하게 서울대학교를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결과와 계획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도 이게 적발되었다면서 공개했다.

10월 21일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논문 표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점검하면서 가천대에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공정한 잣대로 논문 표절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해야 된다면서 석박사 논문에 대해 검정위원회를 거쳐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인천교육청에서 무려 한 244억을 쓰면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왜 시키는 지 점검하고, 지방교육청의 예산방만과 모호한 사업 추진에 대해 점검했다.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가.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예년과 같이 사용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 · 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 · 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 ·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 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 · 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국무위원 등 제외),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무리 없이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⑦ 국정감사 일수가 적정했는 지와,

3)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코로나19로 인해 계량화된 세부적인 정량 · 정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시행**≫

나. 선정결과 및 사유, 활동을 약술함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1)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박대출(朴大出)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은 3선의 의정경험과 포용적 리더십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끌면서 대통령실 이전비용, 공공기관 혁신안 등 여야간의 정쟁적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되었으며, 세계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세제개편,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국정감사 현안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이다.

10월 4일 첫 국정감사에서는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공공기관 혁신안 추

진 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의 추진 배경 및 예산 내역의 공개와 국유재산 매각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참고인 질의도 있어서 부동산 세제 및 법인세 감세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성과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노인 국가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 5일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와의 상관관계, 종합부동산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의 적절성 등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환율 문제 대처를 위한 외환 확보 방안 모색 필요성,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 확대 필요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그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 관리의 필요성, 낮은 합계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대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10월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한 점검을 가능케 하였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가계, 취약차주 등 민생경제의 영향과 향후 물가와 환율의 전망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금리 인상 시에 신뢰 확보를 유념해야 하고 취약차주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부와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보유고 관리 강화, 통화스와프 실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부동산 정책 등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과 한국은행의 조직 인사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해외출장 관리 문제, 전문가 활용 강화 등도 제안되었다.

10월 12일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정당한 세무조사의 진행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세수 사각지대를 적극 발

굴하고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징수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등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한 정책대안 제시가 있었다.

1인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 모범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 국세청 내 성폭력 · 성희롱 사건 근절 대책 등에 조명되었다.

10월 17일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전 기관 공통으로 기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등이 강도 높게 질타되었고, 관세청에 대해서는 고액 납세자 및 마약류 유통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필요성 등이 논의 되었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주요 비축물자의 조속한 확보, 공공계약 관련 인지세 증가 문제, 부정당업자 · 입찰중개업자 난립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의 신뢰도 제고, 공공 일자리 보조지표의 마련 및 여성가족부 소관 통계 이관 등의 주문이 있었다.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인구 감소 · 저성장 문제 해결 필요성,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 정책의 적절성, 고환율 ·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 등의 경제 현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국민의 관심사인 영세사업자 환급금 지급 제도 개선, 특송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대책 마련, 지방 소멸 관련 지수에 관한 국가 승인 통계 마련 필요성 등이 조명되었다.

10월 24일 종합감사에서는 고물가 ·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영향과 향후 물가 전망과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와 강원도 채무 불이행 사태에 따른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대응방안 강구,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과 세금 징수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주문되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영향,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론스타 책임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2)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민주당, 3선)

윤관석(尹官石)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는 3선의 중진 위원장으로서 강한 리더십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정책감사가 되도록 이끌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IRA 대응 등 전·현 정부의 책임논란 등 쟁점이슈로 인한 여야간의 날카로운 대립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산업위에 비해 크게 원만한 진행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위원장은 국정감사 종료 시에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국감내용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IRA 입법 동향 파악과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특화단지, 인프라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첨단산업 육성과 광물 안보를 위한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의 적극 추진, RE100 참여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적정 에너지 믹스에 대한 검토,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경영 개선, 적자 해소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조명되었고, 정책적 제안이 있었다.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창업·벤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의 큰 폭 축소에 대한 우려와 적정 예산 확보 필요성,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의 적정 추진과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손실보상 소급 여부, 폐업 소상공인 등의 보상 배제 문제 및 3고 위기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기업 사모펀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지적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검토, 법제화

추진, 심사관 업무량 과중, 심사 처리 기간 지연 등의 문제 개선,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조명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다.

10월 11일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열띤 조명이 있었고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과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경영 개선 등 적자 해소 대책 마련, 한전 연계 재무제표를 근거로 재무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공기업들의 우량자산 매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등 원전 안전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보완,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에 따른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차질 없는 건설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10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개 중기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 및 모태펀드 출자 예산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강구,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및 신용 수준별 채무 조정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마련, 일률적인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적절성 지적 및 일부 기관의 임금 현실화와 근무여건 개선 방안 논의, 정책자금 융자 특혜·지원, 일감 몰아주기, 특정 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감사 필요성 요청 등의 주문이 있었다.

10월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피감기관 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KOTRA 워싱턴 무역관을 통한 초기 대응 문제점 관련한 대책 수립에 대한 조명이 있었다.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무역장벽 관련 체계적 컨설팅 및 실사 지원 강화,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의 마련, 탄소중립 분야 R&D의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실증·확산 단계 연구개발 지원 강화, 실외이동로봇 및 협동로봇 등

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개선 필요 등의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가 있었다.

10월 20일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의 UPS 대상 정기검사 실시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강조되었다. 민수용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미실시로 인한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 관련 대책 마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및 주민 수용성에 대응하는 종합적 검토, 자원안보 차원에서 수익성 높은 해외 자산 매각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강원 랜드의 비카지노 사업의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주문이 있었다.

10월 21일 산업자원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동향 파악과 관련한 정부의 유기적 대응 미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실효성 있는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무역적자 장기화 대응을 위한 무역수지 개선 방안 수립,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인재 양성 강화,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적자 해소 방안 수립, 월성 원전의 3중수소 유출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안전대책의 확실한 보완,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수익성 높은 자산 매각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는 모태펀드 출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민생지원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손실보전금 미신청자 추가신청 허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필요성, 카카오톡 최근 불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중소기업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추진,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인력 충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활성화, 온라인 유료 상품 판매 근절 등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국민 피해 우려가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권 연장 제도 문제, 특허 전문회사의

특허침해 소송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주문되었다.

(3)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기 (金敏基)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은 **민주적 리더십으로 국정감사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정감사 일정동안 원만히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소관부처의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사건, 감사원 문서제출 논란 등의 정쟁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원만한 진행으로 정책감사를 구현했다**는 평가이며, 현대산업개발의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확인을 위해 추가 증인소환 실시 등의 노력도 병행하였다.

10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퇴직자 재취업이나 친인척 특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과 질 제고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주문으로 시작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호당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노후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집값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안전진단 관련 저가입찰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건설현장 사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 등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10월 6일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초광역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소외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자도로 관

리 강화, 심야 택시난 해소, 도로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합리적 개선,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 정책질의가 많았으며, 새만금개발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구역의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미진하다는 질타가 있었다.

10월 7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통행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휴게소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그리고 졸음쉼터 확충과 도로 안전관리 강화에도 각별히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자동차와 이륜차 리콜 시정률을 제고하고 자체 수입원 개발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 대해 요금 수납원 처우 개선과 내부 복무관리 부실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에스알에 대하여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열차 탑승 내역의 자료제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철도의 정시성 확보 필요성과 고속철도차량 시장 교란 방지 방안, 국내 관련 산업 보호 방안 등 시장 구조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신안산선 대심도 공사비 비용의 재추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터널의 방제시설 보완 및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해서는 철도교통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개선과 악성 환불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10월12일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재건축 · 재개발 관련 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및 보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보증료 할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10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과 관련하여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SOC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로 주거빈곤 형태가 다름을 감안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도 있었다.

10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임원 성과급 과다지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에 대한 출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질타가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분쟁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처우개선을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임직원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주문하고,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는 직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박물관의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감사원의 광범위한 자료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및 SR의 자료제출 건에 관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타가 많았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카카오T 통신장애로 인한 택시기사 등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집행이 없었는지 점검했다.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화상모니터링으로 계량화된 세부적인 정량·정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의 2022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Ⅱ. 2022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1. 막말, 끼어들기 등으로 파행, 원활하지 못한 상임위 현황

2022년도에는 국정감사 도중 말꼬리 잡기, 끼어들기로 파행 등 원활하지 못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곳이 많았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피감기관과 의원 간의 충돌로 인하여 파행이 빚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으로 인한 파행이 가장 많았다.

≪2022년도 국정감사 파행 등 현황(모니터 보고)≫

(1)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간사 기동민, 정점식)의 대법원 감사(10.4)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감사 통보논란 지연

(2) 외통위(위원장 윤재옥, 간사 이재정, 김석기)의 외교부 감사(10.4)
'박진 나가라' 논란 파행

(3) 외통위(위원장 윤재옥, 간사 이재정, 김석기)의 외교부 감사(10.4)
'비속어 동영상 틀자' 논란 파행

(4) 행안위(위원장 이채익, 간사 김교흥, 이만희)의 행안부 감사(10.4)
'버르장머리 없다' 막말 고성

(5)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간사 조승래, 박성중)의 과정부 감사(10.4)
왜 종이 업무보고 안주나 정회

(6)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간사 김영호, 이태규)의 교육부소관 기관 감사(10.7)
'개나 줘' 식 사과 발언

(7) 국방위(위원장 이헌승, 간사 김병주, 신원식)의 합동참모본부 감사(10.6)
'깡통안보' 논란

(8)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간사 기동민, 정점식)의 감사원 감사(10.11)

'감사위원도 와라' 파행

(9)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간사 김영진, 임이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감사(10.12)
'수령께 충성'에 대한 답변태도

(10) 농림위(위원장 소병훈, 간사 김승남, 이양수)의 해경청 국정감사(10.13)
'양곡관리법개정안 단독처리' 사과 논란

(11)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간사 조승래, 박성중)의 방문진 등 국정감사(10.13)
위원장과 간사간 사과 논란

(12) 행안위(위원장 이채익, 간사 김교흥, 이만희)의 경기도 국정감사(10. 18)
경기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거부논란

(13) 행안위(위원장 이채액, 간사 김교흥, 이만희)의 경기도 남부경찰청 등 국정감사(10.18)
야당 의원들이 이채익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 퇴장

(14) 10월 19일 국정감사 실시 4개 위원회의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 민주연구원 김용 부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총소집령 발동

(15)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간사 기동민, 정점식)의 대검찰청 국정감사(10.20)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항의 불참

(16)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간사 김종민, 윤한홍)의 예금보험공사 등 국정감사(10. 20)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17) 10월 24일 종합감사 10개 상임위의 오전 파행(10.24)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민주당 대책회의

(18) 국회여성가족위(위원장 권인숙)의 여성가족부 등 국정감사(10.25)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장 요구

(19)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의 대통령실 등 국정감사(11. 8)
배석 수석비서관들의 '웃기고 있네' 메모 파문

2021년도에는 국정감사장의 손팻말과 관련하여 여야간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되거나 지연되었고, 심지어는 무산까지 되었다.

≪참고 팻말 관련 2021년도 국정감사 파행일지≫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10월 1일(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가장 먼저 회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옥)	국무조정실 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오후에 감사
	교육위 (위원장 조해진)	교육부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오후에 감사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손팻말 논란으로 감사시작 못함	오후에 감사시작
	외교통일위 (위원장 이광재)	외교부	손팻말 논란으로 18분만 정회	오후 감사하다가 5시 47분 중지
	행정안전위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부	손팻말 논란으로 감사시작 11분에 정회	오후에 감사시작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손팻말 논란으로 11시 12분경에 정회	잠시 정회 사다가 국민의 힘만 들어와서 2시 에고
10월 5일(화)	기획재정위 (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부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개회도 못한 채 파행	오후에 감사시작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생략건으로 간사에게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정회	46분만에 정상화
	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국방부	오전 10시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감장 좌석 앞에 국민의힘이 설치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해 시작못함	국감이 무산됨
	행정안전위 (위원장 서영교)	경찰청	손팻말 논란으로 늦게 시작	정상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부	손팻말 논란으로 국감 시작 못함	오후에 개시
	산업통상자원중소	산업통상자원부	지연시작	여야 간사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벤처기업위 (위원장 이헌승)		여당은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라는 문구의 피켓을 준비했다.	가 합의해 피켓을 내리기로 하고 나서야 국감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헌승)	국토교통부	대장동 피켓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에 대장동 특검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에 나서며 양측 간에 거친 설전이 오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함
10월8일(금)	보건복지위 (위원장 김민석)	식품의약품안정처	국민의힘에서 근조 리본과 정치적 구호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들의 항의로 감사 지연	지연 개의

손 팻말이 아닌 원인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유일하였다.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10월 5일(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방송통신위원회 등	위원장과 간사간의 막말	20분 정도 정회
10월 8일(금)	행정안전위(위원장 서영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 후 이석관련	이석하기로 결정

2. 2022년도 10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 감사, 부실국감

가. 동시국감의 현황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가 평균 5.14개로 지난해(5.1개)보다 조금 늘었다.

하루 평균 피감기관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지난해와 같이 **교육위원회**로 하루 평균 9.43개(지난해 9.14개)였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7. 8개 기관(지난해에도 7.8개)이었다. 21대 국회 3년 동안 비슷하게 많았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5개였다.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가 이루어진 일수는 무려 **26**일(21년도 25일, 2020년도 **21**일, 2019년도 30일)이나 되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색케 하였다.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 일수를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국방위원회**가 3일 순이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수감 기관 현황≫

구분	감사일정	대상기관	시찰	10개이상 동시수감일정	1일평균 감사기관
운영	2	9		0	4.50
법제사법	10	78		3	7.80
정무	11	45	1	1	4.09
기획재정	9	29		0	3.22
교육	7	66		2	9.4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	83	2	2	7.55
외교통일	12	34		0	2.83
국방	11	67	3	3	6.09
행정안전	10	37		1	3.70
문화체육관광	10(9)	69	2	4	6.9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	40	2	0	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	60	2	4	6.00
보건복지	8	47		1	5.88
환경노동	10	75	1	5	7.50
국토교통	9	33	1	0	3.67
정보	4	5	1	0	1.25
여성가족	2	6	1	0	3.00

구분	감사일정	대상기관	시찰	10개이상 동시수감일정	1일평균 감사기관
계	146(145)	783	16	26	5.14

※ 상임위 감사계획서상의 피감기관수를 기준으로 함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수감 기관 현황≫

구분	감사일정	대상기관	시찰	10개이상 동시수감일정	1일평균 감사기관
운 영	2	9	0	0	4.50
법 제 사 법	10	78	0	3	7.80
정 무	10	47	0	1	4.70
기 획 재 정	9	29	0	0	3.22
교 육	7	64	0	3	9.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	82	0	2	9.11
외 교 통 일	10	31	0	0	3.10
국 방	10	67	4	2	6.70
행 정 안 전	10	33	0	1	3.30
문화체육관광	8	51	1	3	6.3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	36	0	0	3.6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8	58	0	4	7.25
보 건 복 지	8	41	0	0	5.13
환 경 노 동	10	75	1	5	7.50
국 토 교 통	9	33	1	1	3.67
정 보	4	5	1	0	1.25
여 성 가 족	1	6	0	0	6.00
계	135	745	8	25	5.52

《참고 2020년도 피감기관수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 수감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상기관감사일수
운 영	9	2	2	4.5	0
법 제 사 법	76	11	11	6.9	4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 상기관감사 일수
정 무	46	10	10	4.6	1
기 획 재 정	29	9	9	3.2	0
교 육	64	7	7	9.1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2	9	9	9.1	2
외 교 통 일	30	9	8	3.8	0
국 방	63	10	8	7.9	3
행 정 안 전	35	10	10	3.5	0
문화체육관광	56	8	7	8.0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7	10	10	3.7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44	8	8	5.5	2
보 건 복 지	22	8	8	2.8	0
환 경 노 동	70	10	9	7.8	5
국 토 교 통	31	10	9	3.4	0
정 보	5	4	3	1.7	0
여 성 가 족	6	2	1	6.0	0
계	705	137	129	5.5	21

나. 21대 국회 3년간 동시국감의 답변 현황 분석

하루에 여러 개의 피감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는 국정감사 일정에 비해 피감기관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감사일정을 느슨하게 잡으면서 피감기관을 한 날에 몰아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보여지며, 피감기관에 대한 부실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의원들은 질의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관에 대해 질의를 하려면 피감기관의 답변을 예나 아니오 등 짧게 답변하도록 주문할 수밖에 없는데, 질의는 길게 하면서 답변은 짧게 하라는 것도 갑질일

수 있다.

≪제21대 국회 3년간 10개 이상 동시감사 현황 및 분석≫

▣ 2020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국감일자	참석한 피감기관장	30초미만의 답변 또는 단답형 답변만 한 피감기관장	답변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장	30초미만, 단답형, 질의답변 없음 비율	비고
법 제 사 법	10월 13일	11	2	2	36.36%	
	10월 19일	17	0	9	52.94%	
	10월 20일	16	2	3	31.25%	
정 무	10월 19일	27	0	7	25.93%	
교 육	10월 13일	12	0	0	0.00%	
과학기술정보 방 송 통 신	10월 07일	11	0	8	72.73%	
	10월 20일	21	0	8	38.10%	예정은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였으나 코로나로 현장 참석인원이 21명으로 줄어듦
국 방	10월 07일	28	0	23	82.14%	
문화체육관광	10월 19일	12	1	1	16.67%	
	10월 22일	16	0	6	37.5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0월 15일	13	1	2	23.08%	
	10월 20일	11	0	1	9.09%	
환 경 노 동	10월 12일	16	1	11	75.00%	
	10월 14일	19	0	5	26.32%	
	10월 15일	11	0	1	9.09%	
	10월 19일	11	1	3	36.36%	
	10월 20일	11	0	1	9.09%	
계/평균	8개 상임위 17일	263	8	91	37.64%	

▣ 2021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국감일자	참석한 피감기관장	30초미만의 답변 또는 단답형 답변만 한 피감기관장	답변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장	30초미만, 단답형, 질의답변없음 비율	비고
법 제 사 법	10월 08일	19	0	5	26.32%	대전고등법

상임위원회	국감일자	참석한 피감기관장	30초미만의 답변 또는 단답형 답변만 한 피감기관장	답변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장	30초미만, 단답형, 질의답변없음 비율	비고
						원 등
	10월 08일	13	0	0	0.00%	대전고등검찰 등
	10월 14일	11	0	0	0.00%	
	10월 15일	16	1	3	25.00%	
정 무	10월 13일	29	0	16	55.17%	
교 육	10월 05일	12	0	1	8.33%	
	10월 14일	14	0	2	14.29%	
	10월 19일	14	1	1	14.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월 01일	7	0	5	71.43%	회의록에는 피감기관이 12개로 되어 있으나, 7개 기관장만 참석함
	10월 18일	33	1	15	48.48%	총53기관에 대한 감사였으나, 33개 기관장만 참석함.
문화체육관광	10월 07일	11	1	0	9.09%	
	10월 14일	13	0	0	0.00%	
	10월 19일	14	0	0	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 12일	16	4	2	37.50%	
	10월 14일	11	0	0	0.00%	
	10월 15일	12	0	2	16.67%	
	10월 18일	11	0	0	0.00%	
환 경 노 동	10월 08일	17	1	14	88.24%	
	10월 12일	12	0	2	16.67%	
	10월 13일	20	0	7	35.00%	
	10월 15일	12	2	1	25.00%	
	10월 18일	12	0	5	41.67%	
계/평균	7개 상임위 22일	329	11	81	27.96%	

▣ 2022년도 전반기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국감일자	참 석 한 피감기관장	30초미만의 답변 또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은	30초미만, 단답형,	비고

			단답형 답변만 한 피감기관장	기관장	질의답변없음 비율	
교 육	10월 07일	13	0	0	0.00%	
문화체육관광	10월 11일	10	0	6	60.00%	
	10월 13일	14	0	0	0.0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0월 13일	11	1	0	9.09%	
보 건 복 지	10월 12일	10	0	0	0.00%	
환 경 노 동	10월 07일	17	1	12	76.47%	
	10월 11일	20	0	6	30.00%	
	10월 12일	12	0	3	25.00%	
계/통계	10개 상임위 24일	107	2	27	27.10%	

3. 심야국감은 21번, 대부분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대응관련 파행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가 첫날 많았으나 이후부터 줄기 시작하여 10월 13일에는 한 곳도 없었다. 그 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11번이 되었다.

마지막날인 10월 24일에는 8개 상임위원회가 밤 11시를 넘겼는 데,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오후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밤 11시를 넘긴 2022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피감기관수	장소	시작시간	끝난시간
2022-10-04	정무	국무조정실	2	국회	10:14	23:56
2022-10-0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1	국회	10:06	23:26
2022-10-04	외교통일	외교부	5	국회	10:04	24:46
2022-10-0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3	국회	10:06	23:15
2022-10-0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산자원부	1	국회	10:07	24:40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피감기관수	장소	시작시간	끝난시간
2022-10-06	법제사법	법무부등	5	국회	10:06	23:32
2022-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7	국회	10:07	23:23
2022-10-06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3	국회	10:02	23:54
2022-10-11	법제사법	감사원	1	국회	10:11	24:00
2022-10-12	환경노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국회	10:01	23:45
2022-10-2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전체	국회	10:13	25:11
2022-10-24	법제사법원회	법무부 등	6	국회	15:05	24:00
2022-10-24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2	2	국회	14:31	23:16
2022-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국회	10:00	23:53
2022-10-2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9	9	국회	10:12	23:23
2022-10-24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6	국회	11:02	23:51
2022-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2	국회	15:00	23:28
2022-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2	국회	14:45	23:40
2022-10-24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2	국회	14:39	23:46
2022-11-02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5	국회	17:43	23:40
2022-11-08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3	국회	10:03	24:38

4. 감사시간이 전체 2시간이 안된 곳은 13곳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시간이 모두 합해 2시간이 안된 곳은 모두 13곳이었다. 대부분 지방 국정감사와 해외 국정감사였다.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도 1시간 56분에 마무리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오전에 지자체 국정감사를 하고, 오후에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대부분 짧게 마무리되었다.

≪감사시간이 2시간 미만인 2022년도 국정감사 현황(짧은 순)≫

일자	위원회	분반	반장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시작	끝	감사시간
10-20	행정안전	지방2반	김교흥	광주경찰청	1	광주경찰청(광주)	15:31:00	16:39:00	1:08:00
10-17	행정안전	지방2반	김교흥	경상북도경찰청	1	경상북도경찰청(안동)	14:01:00	15:13:00	1:12:00
10-14	기획재정	2반	신동근	광주지방국세청 등	2	광주지방국세청(광주)	10:36:00	11:56:00	1:20:00
10-14	기획재정	2반	신동근	대전지방국세청 등	2	한국은행전북본부(전주)	16:01:00	17:29:00	1:28:00
10-20	행정안전	지방1반	이채익	대전경찰청 등	2	대전경찰청(대전)	14:14:00	15:46:00	1:32:00
10-17	행정안전	지방1반	이채익	울산경찰청	1	울산경찰청(울산)	14:31:00	16:12:00	1:41:00
10-14	기획재정	1반	박대출	대구지방국세청 등	2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대구)	10:07:00	11:51:00	1:44:00
10-14	행정안전	1반	이채익	경상남도경찰청	1	경상남도경찰청(창원)	14:31:00	16:18:00	1:47:00
10-14	기획재정	1반	박대출	부산지방국세청 등	2	부산지방국세청(부산)	15:50:00	17:42:00	1:52:00
10-11	외교통일	아주반	이재정	주인도대사관	1	주인도대사관	10:03:00	11:58:00	1:55:00
10-21	국방위원		이헌승	공군본부 등	5	공군본부(계룡)	14:24:00	16:20:00	1:56:00
10-21	행정안전		이채익	제주경찰청	1	제주특별	14:03:	16:00:	1:57:0

일자	위원회	분반	반장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시작	끝	감사시간
						자치도청	00	00	0
10-20	외교통일	아주반	이재정	주호주대사관	1	주시드니 총영사관	10:03:00	12:00:00	1:57:00

5. 조기 종료 국감은 15곳으로 대폭 늘어

올해 조기 종료한 국정감사는 15곳이나 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과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의 지방 국정감사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종기 종료를 한 것을 감안해서 수치에 반영하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재외공관 국정감사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기 종료가 많아진 것은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위원장 압수수색 당시에 국정감사가 중단된 곳이 4곳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19일 감사중지된 국정감사 현황≫

감사반	감사반장	피감기관	기관수	장소	시작	중지	감사시간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	국회	10:10	17:03	6:53:00
교육위원회	유기홍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8	국회	10:03	17:10	7:07: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	국회	10:03	17:23	7:20:00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한국수출입은행 등	5	국회	10:05:00	17:41	7:36:00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의 경우에는 해군본부와 공군본부를 같은 날 감사를 했음에도 6시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다.

지난해(2021년도)에는 6시 이전에 조기 종료한 국정감사는 확인을 못한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10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의 외교부 국정감사가 5시 46분에 감사중지된 것을 시작으로 7곳에 불과했다.

≪2022년도 오후 6시 이전 종료한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	위원회	위원장	피감기관	기관수	장소	감사시작	종료(중지)	감사시간
10-07	국방위원회	이헌승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	국회	10:06:00	16:06:00	6:00:00
10-07	환경노동	전해철	기상청(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1	국회	10:02:00	17:29:00	7:27:00
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병훈	농촌진흥청	5	농촌진흥청사(전주)	10:07:00	15:59:00	5:52:00
10-14	법제사법	김도읍	대전고등검찰청 등 13개 기관	13	대전고등검찰청(대전)	15:04:00	17:36:00	2:32:00
10-14	문화체육관광	홍익표	대한체육회	6	국회	10:04:00	17:46:00	7:42:00
10-14	국토교통(1반)	김민기	경기도	1	경기도청(수원)	10:01:00	16:36:00	6:35:00
10-14	국토교통(2반)	김정재	서울시	1	서울시청(서울)	10:00:00	16:48:00	6:48:00
10-17	정무	백혜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	3	부산국제금융센터	14:09:00	17:54:00	3:45:00
2022-1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3	기초과학연구원(대전)	10:01:00	16:23:00	6:22:00
10-18	문화체육관광	홍익표	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기관	24	국회	10:04:00	16:58:00	6:54:00
10-19	기획재정	박대출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	5	국회	10:05:00	17:41:00	7:36:00
10-19	교육	유기홍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8	국회	10:03:00	17:10:00	7:07:00

감사일	위원회	위원장	피감기관	기관수	장소	감사시작	종료(중지)	감사시간
			8개 기관					
10-19	문화체육관광	홍익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4	국회	10:03:00	17:23:00	7:20:00
10-19	보건복지	정춘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	국회	10:10:00	17:03:00	6:53:00
10-21	국방	이헌승	공군본부 등	5	공군본부(계룡)	14:24:00	16:20:00	1:56:00

6.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계속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반은 3개로 모두 14회 국정감사를 하였다. 구주반이 4일, 미주반과 아주반은 각각 5일씩 실시하였다.

총 감사시간은 44시간 12분이고, 감사일정당 3시 9분 26초 감사를 했으며, 피감기관 24군데를 기준으로 하면 피감기관 당 1시간 50분 30초 감사를 했다.

가장 긴 시간은 주미국대사관에 대한 미주반의 국정감사로 5시간 41분 진행하였으며, 일정별로는 아주반의 주일본대사관에서 주일본대사관과 주중국대사관을 화상 감사한 것으로 모두 7시간 1분이었다.

가장 짧은 감사시간은 아주반의 주인도대사관 국정감사로 1시간 55분간 진행하였다, 주호주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1시간 57분에 불과하였다.

≪2022년도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시간현황(짧은순)≫

일자	재외공관반	반장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2022-10-11	아주반	이재정	주인도대사관	1	주인도대사관	10:03:00	11:58:00	1:55:00
2022-10-20	아주반	이재정	주호주대사관	1	주시드니총영사관	10:03:00	12:00:00	1:57:00

일자	재외공관반	반장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2022-10-13	구주반	김석기	주이집트대사관 및 주알제리대사관	2	주이집트대사관	10:08:00	12:10:00	2:02:00
2022-10-14	아주반	이재정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	주싱가포르대사관	10:00:00	12:07:00	2:07:00
2022-10-11	구주반	김석기	주영국대사관	1	주영국대사관	10:02:00	12:18:00	2:16:00
2022-10-16	구주반	김석기	주이스라엘대사관	1	주이스라엘대사관	10:02:00	12:20:00	2:18:00
2022-10-18	구주반	김석기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체코대사관	2	주튀르키예대사관	10:05:00	12:27:00	2:22:00
2022-10-14	아주반	이재정	주아세안대표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	주싱가포르대사관	10:00:00	12:23:00	2:23:00
2022-10-18	미주반	윤재옥	주멕시코대사관	1	주멕시코대사관	9:35:00	12:02:00	2:27:00
2022-10-20	미주반	윤재옥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0:04:00	13:08:00	3:04:00
2022-10-13	미주반	윤재옥	주유엔대표부 및 주뉴욕총영사관	2	주유엔대표부	10:10:00	13:59:00	3:49:00
2022-10-15	미주반	윤재옥	주페루대사관등	4	주페루대사관	14:01:00	18:51:00	4:50:00
2022-10-12	미주반	윤재옥	주미국대사관	1	주미국대사관	10:01:00	15:42:00	5:41:00
2022-10-09	아주반	이재정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2	주일본대사관	10:00:00	17:01:00	7:01:00

지난 2020년에 중단하여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2021년도부터 다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2년도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아주반이 테이프를 끊었는데, 10월 9일 주일대사관에서 시작되었다. 주일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주중대사관 국정감사를 했다.

나머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아주반,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누어서 10월 11일부터 감사가 진행했다.

7. 국회의장 외교 동행 등 출장 의원들의 국정감사 불참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한 바, 이번 국정감사 감사위원 중 국정감사 전 과정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정찬민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의원들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인 추경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장관 박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였다. 지난해보다 6명 보다는 적었다.≪2021년도 국감시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기획재정위원회), 환경부장관인 한정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권칠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김진표 국회의장과 출장 동행한 의원은 출장으로 불참하였다. 동행한 의원은 국민의힘 유의동·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하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과방위)은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과 서일준 의원(국토교통위)도 부의장과 동행 출장 때문에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참고로, 2022년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이중 초선의원은 8인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국방위, 6·1 재·보궐선거)을 비롯해, 최재형 의원(복지위, 3·10 재보궐선거), 조은희 의원(행안위, 3·10 재·보궐선거), 임병헌 의원(국방위, 3·10 재보궐선거), 김한규 의원(정무위, 6·1 재·보궐선거), 이인선 의원(산자중기위, 6·1 재·보궐선거), 장동혁 의원(법사위, 6·1 재·보궐선거), 박정하 의원(국토위, 6·1 재·보궐선거) 등이다. 언론에 많이 조명되는 의

원은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조은희 의원 등이다.

* 이외 재보궐 당선인은 김영선 의원(기재위, 5선), 정우택 의원(행정안전, 5선), 김학용 의원(국토위, 4선), 안철수 의원(외통위, 3선) ≪다선 가나다순≫

8. 주요 당직자 등의 국감활동과 국정감사 불참의원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한 바, 올해에는 위와 같이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불출석은 크게 줄어들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 불참한 장관겸임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직책	상임위	비고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박진	외교부장관	기획재정	
권영세	통일부장관	국토교통	

지난해(2021년)에는 장관겸임 의원 6명과 대선후보 경선에 나간 의원 3명(1명은 전체 일정 불참), 일신상의 이유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의원 3명, 출장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에서 참여하지 못한 의원 등이 다수 있었다.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에 불참한 장관겸임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직책	상임위	비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환경노동위	
이인영	통일부장관	기획재정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국토교통위	
한정애	환경부장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 사보임(10. 18)

교섭단체 중요당직자를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에서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활동하였는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재외공관은 결석을 하였고, 국내 반에서는 종합국정감사

에서 결석을 하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반으로 편성되지 않아 결석 표시는 없고, 국내에서 진행된 3번 모두 출석하여 질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전체 일정 중 하루 결석으로 국회공보에 표시되어 있고, 2회 질의를 하였다. 6·1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감사일정 중 5일 불참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월 4일부터 3회 연속 출석을 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후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주식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진 후였다.

≪2022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 불참 일수	질의 횟수	질의응답 시간	특색질의
정진석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	3	19분27초	대통령의 정상외교 관련
이재명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5	3	25분53초	한미일연합훈련 관련 질의
주호영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1	2	16분18초	대통령실이전관련 문제/지난정부 채무증가폭문제 등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0	4	15분40초	이태원 사고 및 장애인탈시설 조명
박홍근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	4	38분12초	대통령 첫순방관련 질의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	5	35분55초	용산 참사 관련 조명

참고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섭단체 중요당직자를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의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활동은 알 수 없지만 결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로 사·보임했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감사일정 중 3번 불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불참 횟수	질의 횟수	비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0	2	10월 18일과 10월 20일 두 번 질의를 함 (개성공단 복원, 북한의 SLBM 발사 관련)
윤호중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4	방사연 등 4군데에서 1번씩 질의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	1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1분 질의
김기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0	0	재외공관반은 확인 못함(국내반에서는 질의없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0	2	대통령비서실 등 국감에서 2회 질의(공정선거관리 촉구, 교황방북논의,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청탁 관련)

9.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은 여전함

가.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이라는 말이 많고, 그 통계에 의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은 감사원 등이 지적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나.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관련 질타

올해에도 국감 시작을 하면 자료요구를 하는 데, 부실자료를 주거나 늑장 제출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

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국감에서 콘진원이 게임 업계가 시중에서 집계한 현황 자료를 무단도용한 사실이 발각돼 망신을 당했다” 며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보고할 자료를 허위자료로 제출했다” 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 한 달 전 (콘진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름과 직급이 마구 섞인 정황이 발견됐다” 며 “콘진원은 그제서야 이 자료가 마구잡이로 기록됐음을 인정하고 국정감사를 얼마 안 남긴 지난 9월 28일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심각한 국회 기만행위” 라고 말했다.

10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감사원에 공직자 7000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아직까지 자료 못 밝히는 건 쪽팔려서 못하는 것” 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관련 자료제출요구가 이어졌다.

다. 역대급 자리 안 지키기 계속

올해(2022년도)에도 지난해(2021)에 이어 위원장이 안내를 통해 질의 위원 중심으로 최소인원만 국정감사장에 있으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국정감사 질의 중에만 자리를 지키거나, 여 · 야 간의 언쟁이 있는 경우에만 자리를 지키는 등 영상을 통해 대부분 텅빈 국정감사장의 모습만 비쳐졌다.

라. 질의시간 안 지켜 소리 없는 국정감사 여전

모니터위원이 가장 많이 본 자막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감사시작할 때 질의시간을 7분, 5분, 3분 지정하면서 꼭 질의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나, 대부분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양해를 구해서 1분 정도 더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질의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중단되어 소리없는 국정감사를 하다가, 피감기관의 답변으로 질의내용을 알게 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였다.

>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1문 1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이 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되도록 정해진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2022. 10. 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0월 4일 국정감사 첫날 국회의원의 질의 중 질의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경우를 조사해 본 결과 국회의원의 질의응답횟수 대비 질의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율은 58.18%였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수가 많았는데, 의사진행발언에도 시간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과로 인한 마이크중단횟수가 많았다. (참고로 자료요구 등 의사진행발언의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간제한을 두는 위원회도 있지만, 통계에서는 질의응답횟수만을 기준으로 마이크중단율을 구함)

≪2022년도 국정감사 첫날(10.4.) 마이크 중단 현황≫

위원회	위원장	대상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질의응답횟수	발언시간초과	마이크중단율
법제사법	김도읍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	국회	64	52	81.25%
정무	백혜련	국무조정실 등	2	국회	60	45	75.00%
기획재정	박대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1	국회	65	42	64.62%
교육	유기홍	교육부 등	7	국회	56	30	53.57%
외교통일	윤재옥	외교부 등	5	국회	39	39	100.00%
국방	이헌승	국방부 등	29	국방부(	56	14	25.00%

위원회	위원장	대상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질의응답 횟수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중단율
				서울용산)			
행정안전	이채익	행정안전부 등	3	국회	85	30	35.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소병훈	농림축산식품부	1	국회	56	21	37.5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윤관석	산업통산자원부	1	국회	82	69	84.15%
환경노동	전해철	부세종청사(세종)	1	정부세종청사(세종)	64	36	56.25%
국토교통	김민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	국회	73	20	27.40%
					700	398	58.18%

2022년도 국정감사의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마이크 중단율은 50%를 넘어서 57.12%였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질의시간을 어겨서 감점을 받았다.

≪위원회별 국정감사 종감일의 국정감사 마이크 중단 현황≫

국감일자	위원회	위원장	피가믹관	질의응답	마이크중단횟수	마이크중단율
2022-10-20	보건복지	정춘숙	보건복지부 및 소관대상기관 전체	88	55	62.50%
2022-10-21	교육	유기홍	교육부와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66	44	66.67%
2022-10-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병훈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44	24	54.55%
2022-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윤관석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73	62	84.93%
2022-10-21	국토교통	김민기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72	14	19.44%
2022-10-24	법제사법	김도읍	법무부 등 6개 기관	45	33	73.33%
2022-10-24	정무	백혜련	금융위원회 등 2개 기관	47	42	89.36%
2022-10-24	기획재정	박대출	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	39	24	61.54%
2022-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청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58	19	32.76%
2022-10-24	외교통일	윤재옥	외교부 등 9개 기관	46	31	67.39%
2022-10-24	국방	이헌승	국방부 등 6개 기관	48	21	43.75%

국감일자	위원회	위원장	피가믹관	질의응답	마이크중단횟수	마이크중단율
2022-10-24	행정안전	이채익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59	15	25.42%
2022-10-24	문화체육관광	홍익표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기관	52	16	30.77%
2022-10-24	환경노동	전해철	고용노동부 등 2개 기관	57	45	78.95%
2022-10-25	여성가족	권인숙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	46	30	65.22%
2022-11-08	국회운영	주호영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75	43	57.33%
					계	**57.12%**

10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의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은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초과되어도 계속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초도 추가 하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김희국 의원 : 30명의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단 1초도 추가하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원장 : 그렇게 너무 딱 자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희국 의원 : 딱 잘라 주세요.
위원장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반면, 10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보충질의에 나선 한정애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1분 더 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있다며, 질의시간 말미에 '1분 더'를 요청하자, 보건복지위원장은 잘못된 선례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시간을 주기도 하였다.

한정애 의원 : 모두가 1분씩을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 : 잘못된 선례입니다. 아무튼

마. 질의 의원 옆에 앉아 있는 의원(인터넷 생중계에 보임)도 딴 짓 의원 있어

국감첫날부터 언론에 의해 골프회동과 관련된 문자가 노출되어 곤욕을 당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 보이지 않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상에는 핸드폰 조작 의원들이 많았고, 핸드폰을 보면서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지난해처럼 있었다. 오후에는 질의하는 의원 옆에서 눈을 감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10.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실시간 제공

--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가. 개요

개선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마련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서는 국정감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도서관에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SNS(국회의원이 공개한 개인홈페이지)에서는 국정감사의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나.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186명)

국회의원들이 개별 홈페이지 주소로 올려 놓은 의원은 전체 299명 중 229명으로 **국회의원의 23.41%**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공개된 개별 홈페이지는 네이버 블로그가 229명중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81.22%를 차지하였다.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소개란의 홈페이지, 메일 현황≫

구분	공개	공개없음	계	비공개율
메일주소	283	16	299	5.35%
개인홈페이지	229	70	299	23.41%

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일은 네이버 메일 126명

메일주소 중 국회에서 제공된 메일주소를 안내하고 있는 의원은 18명으로 전체 299명 의원 중 6.0%였고, 공개하고 있는 의원 중에서는 6.26%이었다.

메일 중에서는 네이버(naver) 메일을 사용하는 의원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메일(gmail) 106명 그리고, 다음(12명)과 한메일(16명)을 사용하고 있는 의원은 도합 28명이었다.

≪국회의원의 공개된 메일주소 현황≫

의원 사용 메일	국회 의원수
naver	126
daum	12
gmail	106
assembly(na 포함)	18
hanmail	16
기타 / 비공개	21
계	299

라.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활동 게시율 : 전체 의원의 54.39%

2022년 10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해 결과,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보도자료 등 국정감사 자료를 올려 놓은 경우는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165명으로 **54.39%**에 불과했다.

위원회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위원들이 70.00%로 가장 높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36.84%로 가장 낮았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의원이 감사시간에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동영상이 많았다. 통계에서는 단순 기사나 사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 별로 보도자료나 질의 영상 또는 질의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의

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통계에 포함하였다.

≪2022년도 위원회별 개인홈페이지 국정감사활동 게시율≫

위원회	위원수	자료게시위원수	비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30	21	70.00%
보건복지위원회	24	16	66.67%
기획재정위원회	26	17	65.3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	13	65.00%
행정안전위원회	22	14	63.6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10	62.50%
외교통일위원회	21	12	57.14%
교육위원회	16	9	56.25%
국토교통위원회	30	15	50.00%
환경노동위원회	16	8	50.00%
정무위원회	24	10	41.67%
법제사법위원회	18	7	38.89%
국방위원회	16	6	37.5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7	36.84%

참고로 2021년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295명 중 141명이 국정감사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국정감사자료 게시율이 47.80%였다.

《참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1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6	33.33%
정무	24	15	62.50%
기획재정	25	9	36.00%
교육	16	8	5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8	40.00%
외교통일	20	8	40.00%
국방	17	4	23.53%
행정안전	22	13	59.09%
문화체육관광	16	9	5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5	26.32%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13	44.83%
보건복지	24	17	70.83%
환경노동	16	10	62.50%
국토교통	29	16	55.17%
계	295	141	47.80%

마. 국정감사 자료 게시의원의 정당별/ 선수별 분석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169명 중 106명으로 62.72%로 높았고,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 중 49명으로 42.61%에 불과하였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정당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party.kr)에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매일 매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6명 중 4명의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올려 놓고 있었다.

≪정당별 2022년도 국정감사자료 게시현황≫

정당별	현원	소개위원	비율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	169	106	62.72%	
국민의힘	115	49	42.61%	
정의당	6	4	66.67%	
기본소득당	1	1	100.00%	
시대전환	1	0	0.00%	
무소속	7	5	71.43%	83.33%

당선횟수별로 보면, 초선의원들의 경우에는 156명 중 94명이 게시하고 있어 60.26%로 가장 높았고. 선수가 올라 갈수록 게시율은 낮아졌다.

≪2022년도 당선횟수별 국정감사 자료게시현황≫

당선횟수별	현원	소개위원	비율	국회의장제외
초선	156	94	60.26%	
재선	69	38	55.07%	
3선	41	19	46.34%	

4선	20	9	45.00%	
5선	12	5	41.67%	45.45%
6선	1	0	0.00%	

≪참고 2021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2021년 10월 9일(토)~10일(일)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6	88.89%
정무	24	17	70.83%
기획재정	25	20	80.00%
교육	16	10	6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5	75.00%
외교통일	20	16	80.00%
국방	17	12	70.59%
행정안전	22	18	81.82%
문화체육관광	16	12	7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1	57.8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20	68.97%
보건복지	24	21	87.50%
환경노동	16	15	93.75%
국토교통	29	22	75.86%
계	295	225	76.27%

≪참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1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조사일 2021년 10월 9일(토)~10일(일)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6	33.33%
정무	24	15	62.50%
기획재정	25	9	36.00%
교육	16	8	5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8	40.00%
외교통일	20	8	40.00%
국방	17	4	23.53%
행정안전	22	13	59.09%
문화체육관광	16	9	5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5	26.3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13	44.83%
보건복지	24	17	70.83%
환경노동	16	10	62.50%
국토교통	29	16	55.17%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계	295	141	47.80%

《참고 2020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2020년 10월 12일(월)~13일(화) 일과시간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2	66.67%
정무	24	15	62.50%
기획재정	26	19	73.08%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4	70.00%
외교통일	21	13	61.90%
국방	17	10	58.82%
행정안전	22	13	59.09%
문화체육관광	16	11	68.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0	52.6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20	66.67%
보건복지	24	21	87.50%
환경노동	16	10	62.50%
국토교통	30	19	63.33%
계	299	194	64.88%

《참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0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 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8	44.44%
정무	24	12	50.00%
기획재정	26	10	38.46%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0	50.00%
외교통일	21	8	38.10%
국방	17	6	35.29%
행정안전	22	11	50.00%
문화체육관광	16	7	4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	2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13	43.33%
보건복지	24	16	66.67%
환경노동	16	8	50.00%
국토교통	30	16	53.33%
계	299	136	45.48%

Ⅲ. 2022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1)]

1-1. '김건희 여사' 15개 상임위 45개 국감장에서 536회 언급

교육위원회 첫날(10. 4)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116회 언급되었다. 교육위원 중 권은희 조경태 의원만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태규 의원은 증인채택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마지막날 국정감사는 증인신문으로 이뤄져서 대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와 신문에 집중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였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정경희 의원이 직접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다.

이번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은 15개 상임위원회 45개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되었으며, 횟수로는 536회였다.

≪2022년도 김건희 여사 관련 거론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의원 및 언급내용	언급 횟수
2022.10.04.	외교통일	외교부 등	윤호중 의원(민)의 윤석열 대통령 외교관련 정진석 의원(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관련 반문 김경협 의원(민)의 김건희 여사 경찰대 방문관련 하태경 의원(국)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강도가 세다면서	5
2022.10.04.	법제사법	대법원. 등	기동민 의원(민)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협조당부 김남국 의원(민)의 김건희 여사 논문, 윤석열차 만화관련 김의겸 의원(민)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관련 김도읍 의원(국), 기소하지 않은 것은 박범계 전 장관에게 물어야	13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의원 및 언급내용	언급 횟수
			권칠승 의원(민)의 국민대 동문 손해배상 관련 박범계 의원(민)은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양평공흥 의혹제기	
2022.10.0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진선미 의원(민)의 대통령실 설계와 감리 의혹 서영교 의원(민)의 영빈관 이전관련 여사의 발언 관련	2
2022.10.04.	정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김종민 의원(민)의 상임위별 주요 쟁점에 김건희 여사관련 언급	3
2022.10.04.	교육	교육부 등	김영호 의원(민), 관련된 표절 논문 의혹 증인 채택관련 의사진행발언 문정복 의원(민), 증인 해외 도피의혹 김병욱 의원(국), 이재명, 조국 등도 같은 잣대로 해야 강민정 의원(민), 논문 예비조사관련 민형배 의원(무), 추가 증인 신청 관련 서병수 의원(국), 증인채택 절차적 문제 강득구 의원(민), 관련 여당 의원 발언에 대한 반론 서동용 의원(민), 여사관련 질의 정경희 의원(국). 논문 검증단 관련 박광온 의원(민), 논문 의혹관련 도종환 의원(민), 서울대 EMBA과정 관련 안민석 의원의 여당 의원들의 비호 관련	116
2022.10.0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등	문진석 의원, 대통령집무실 이전공사 관련 의혹 오영환 의원, 대통령실의 관저 리모델링 관련 의혹	2
2022.10.05.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고발관련	3
2022.10.0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이병훈 의원(민), 청와대 활용방안 관련 의견교환여부 전재수 의원(민), 윤석열차 관련 상처여부	4
2022.10.06.	법제사법	법무부 등	김남국 의원(민),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관련, 윤석열차 만화 관련 김승원 의원(민), 민심을 반영한 패러디라며 기동민 의원(민), 공정수사의 바로미터를 언급하며 김도읍 위원장(국), 주가조작 기소가 안된 이유	18
2022.10.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등	박성중 의원(국), 대선중 MBC의 녹취록 편파보도 관련 권성동 의원(국),서울의소리 스토킹 의혹 관련	3
2022.10.06.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한준호 의원(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의	3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의원 및 언급내용	언급 횟수
	원회	등	혹 관련	
2022.10.07.	국토교통	한국도로공사 등	한준호 의원(민), 모친 동업관계 인사 관련, 일가 땅 의혹	4
2022.10.07.	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영호 의원(민), 논문표절의혹 핵심증인 불출석 관련 강민정 의원(민), 관련 의사진행발언 정경희 의원(국), 검증단 관련 의사진행발언 강득구 의원(민), 증인관련 의사진행 서동용 의원(민), 증인관련 동조발언, 논문 유지 관련 박광온 의원(민), 연구윤리 관련 문정복 의원(민), 지도교수 색인기입 관련	21
2022.10.07.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등	황운화 의원(민), 서울대학교 EMBA과정 관련	1
2022.10.07.	행정안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김교흥 의원(민), 임원역임회사 불법적 인허가 의혹 문진석 의원(민), 모친 의혹 수사 관련 천준호 의원(민), 모친 양평 공릉땅 의혹관련, 비전임교원 채용관련 이성만 의원(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오영환 의원(민),, 수사결과 무혐의 불송치 관련 조응천 의원(민), 무혐의 불송치 관련	35
2022.10.11.	정무	금융감독원	황운하 의원(민),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박성준 의원(민),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성주 의원(민), 모친의 유아이,후너스 의혹, 도이치모터스 의혹	27
2022.10.11.	법제사법	감사원	박주민 의원(민), 대통령실 리모델링 의혹	1
2022.10.11.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등	이병훈 의원(민), 카르텔 의혹을 받고 있는 미술 전시회 관련 류호정 의원(정), 대통령실 자문단 측근포함 의혹 관련 임오경 의원(민), 월단회 인사 관련	4
2022.10.1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등	양경숙 의원(민), 팬클럽 회장 관련 발언과 YTN과 MBC에 대한 세무조사 연관성	1
2022.10.12.	행정안전	서울특별시경찰청	김교흥 의원(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조사관련 천준호 의원(민) 허위경력 상습 사기 관련 무혐의 결정 관련 이성만 의원(민) 경찰 수사의 공정성 관련	5
2022.10.13.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등	김성주 의원(민), 조부 6·25 참전 관련 김희곤 의원(국), 김 의원의 의도 문제 지적 박성준 의원(민), 고가 장신구 관련 의혹	12
2022.10.13.	법제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인숙 의원(민), 고발사건(3건), 허위 이력 등 유상범 의원(국), 기본적으로 민간인	16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의원 및 언급내용	언급 횟수
2022.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문화진흥회 등	김영식 의원(국), MBC PD수첩 보도 관련 박성중 의원(국), 자막조작, 대역관련 하영제 의원(국), 대역 문제 장경태 의원(민), 대역관련 조승래 의원(민),. 논문표절 관련	10
2022.10.14.	국토교통	경기도	한준호 의원(민), 일가 경기도 소재 땅 관련	5
2022.10.17.	기획재정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이수진 의원(민), 연관 업체 무자격 시공 논란	1
2022.10.17.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등	김영진 의원(민), 폴리텍 시간강사 관련	4
2022.10.18.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등	임오경 의원(민), 까르띠에전을 자신들이 개최한 전시라고 허위 이력	2
2022.1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등	정청래 위원장(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게재 논문에 대한 부정 의혹 검증 관련	1
2022.10.18.	법제사법	서울고등검찰청 등	권칠승 의원(민), 증권계좌 관련 유상범 의원(국), 주식보유수가 3450주 불과 기동민 의원(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점식 의원(국), 접수시기가 이성윤 검사장시절이다 김도읍 위원장(국), 당시에 고발대상이었는지 권인숙 의원(민), 허위 학력기재 무혐의 관련, 폴리텍 시간강사 관련 박형수 의원(국), 공소시효 관련 박범계 의원(민), 주식거래 관련 박주민 의원(민), 소환 여부	26
2022.10.19.	보건복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김원이 의원(민)., 복지모금회 명예회장 추대 여부, 적십자사 자원봉사 관련	9
2022.10.19.	교육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등	도종환 의원(민), 서울대 EMBA 2기 과정 관련 민형배 의원(민)., 박사학위 논문 사태 핵심증인 소환해야 문정복 의원(민), 학과 기재 관련	9
2022.10.20.	법제사법	대검찰청	민주당 의원, 김건희도 수사하라 박영순 의원(민, 산업위), 구속수사하자 정점식 의원(국), 박범계 전 장관에게 물어보라	3
2022.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윤재갑 의원(민),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가	1
2022.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석유공사 등	박영순 의원(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도 다해야 되는 것이다. 똑같이	1
2022.10.21.	법제사법	서울고등법원 등	권칠승 의원(민), 압수수색 제로 관련 기동민 의원(민), 특검	3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의원 및 언급내용	언급 횟수
2022.10.21.	교육	교육부	김영호 의원(민),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민형배 의원(무), 오늘 쟁점이 될 것라는 MBC 보도, 논문심사과정 등, 박사, 석사학위 논문 관련 서동용 의원(민), 연구부정 안민석 의원(민), 표절관련, 만난적 있는지 조경태 의원(국), 논문 표절 관련 사회적 책임 이재명 대표 사례 강득구 의원(민), 조사기간 형평성 문제 강민정 의원(민), 숙대 석사학위 논문 관련 김병욱 의원(국), 해당대학에서 적법한 조사가 이뤄진 것 서병수 의원(국). 논문쓸 때 국비지원한 것 있는지 도종환 의원(민),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이력 이태규 의원(국), 내로남불 야당문제 지적 문정복 의원(민), 논문 사용 인장 문제 박광온 의원(민), 논문이 국민대에 미칠 파장 서동용 의원(민) 논문 재검증 결과	91
2022.10.21.	정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김성주 의원(민), 여사 조부님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 김희곤 의원(국) 참전용사 만났을 때 국가유공자라고 말하지 않음 백혜련 위원장(민),. 자료요구 가능	10
2022.10.2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임오경 의원(민), 까르띠에 소장품전 경력 기재 관련, 전시협찬 관련	3
2022.10.24.	법제사법	종합감사	권인숙 의원(민), 허위 이력 관련 고발인 이의신청 중앙지검 관련 기동민 의원(민), 의혹과 공소시효 권칠승 의원(민), 수사부진	10
2022.10.2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등	김교흥 의원(민), 이재명 대표와 관련 압수수색 형평성 천준호 의원(민), 허위경력 관련 이성만 의원(민), 압수수색의 형평성 오영환 의원(민). 관저 소핑 의혹 이형석 의원(민)., 압수수색 형평성 문제	17
2022.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김성환 의원(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
2022.10.2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경사노	이수진(비) 의원, 김건희 특검 관련 의사진행발언	1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의원 및 언급내용	언급 횟수
2022.10.24.	정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원	박재호 의원(민). 나오면 끝도 없다고 황운하 의원(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가담 정황	7
2022.10.24.	국방	국방부 등	김병주 의원(민), 관저에 먼저 가서 돌아보고 개입에 관련이 있었다는 의혹보도	1
2022.11.08.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이수진(민, 비) 의원, 김여사 봉하참배 사적수행 관련 김미애(국) 의원, 민주당의 장신구가격 요구논란에 대해 강민정(민) 의원, 7시간 녹취록, 논문 의혹관련 양경숙(민) 의원, 전시회 관련 전용기(민) 의원, 장신구관련 대통령실 답변문제	21

참고로 지난해(2021년)에는 ‘대장동’이 언급된 국정감사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물론, 전체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 모두 87개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이 나왔다.

‘대장동’이 가장 많이 나온 국정감사장은 국토교통위원회 2반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으로 167회 언급이 되었다. 50회 이상 언급된 국정감사장도 15개나 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이름이 856회 언급되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이름이 피감기관의 장(증인)으로 임했던 경기도 국정감사(행안위와 국토위)를 제외하면 1,378회 거론된 것을 생각해 보면 ‘대장동’ 국정감사라고 할 만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주로 대장동 관련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비용 대납 등 연관 질의를 생각하면 이번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참고 2021년도 ‘대장동’이 50회 이상 언급된 국정감사장(많은 순)≫

위원회	피감기관	대장동 언급횟수
국토교통위원회 (2반)	경기도	167

위원회	피감기관	대장동 언급횟수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14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129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10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94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 종합감사	9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88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83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72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7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65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55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5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51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50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5개 상임위 74개 국정감사장 780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장에 참석해서 질의를 한 3개 국정감사장(국방위의 국방부, 합참, 병무청 등 국정감사)을 제외하고도 74개 국정감사장에서 780회나 이름이 언급되었다.

가장 많은 언급이 있었던 피감기관은 2022년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으로 84회 언급을 하였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각 국정감사장으로 5개 감사장에서 계속 언급횟수 상위를 기록했다. 서울고등검찰청 등 재경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무려 74회 언급되었다.

언급된 감사장수가 가장 많은 것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무려 13개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되었고, 그 다음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9개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되었다. 이 위원회들은 거의 전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많이 언급한 의원을 분석해 보면, 정무위원회에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장제원** 의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정경희**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 관련 조명을 하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가장 많이 이재명 대표관련 조명을 하였다.

언급된 경우의 질의주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문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 이재명 대표의 논문 관련이 많았다.

≪20회 이상 이재명 대표 언급된 감사장 현황(많은 언급횟수순)≫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횟수
2022.10.18.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84
2022.10.18.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74
2022.10.06.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55
2022.10.20.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50
2022.10.24.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무부대법원등	48
2022.10.04.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등	37
2022.10.18.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남부경찰청 등	35
2022.10.21.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등	30
2022.10.2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종합	26
2022.10.21.	교육위원회	교육부	21
2022.10.17.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19
2022.11.08.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17
2022.10.07.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	16
2022.10.14.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16
2022.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15
2022.10.24.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	13
2022.10.05.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
2022.10.11.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10
2022.10.14.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
2022.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0

≪위원회별 언급된 감사장수 현황(많은 언급된 위원회순)≫

위원회	국정감사장수

위원회	국정감사장수
행정안전위원회	13
정무위원회	9
법제사법위원회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기획재정위원회	4
교육위원회	3
국토교통위원회	3
국방위원회	3
보건복지위원회	2
환경노동위원회	2
국회운영위원회	2
외교통일위원회	1

2-1. 제21대 국회 국감의 단골소재가 된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은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K-문화의 성공신화로 소개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어 3년 내내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였다.

이번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할 경우에 1회 공연당 경제적 파급 효과가 6200억에서 1조 2200억 이렇게 된다”라고 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국방위원회에서는 BTS의 병역관련 해서 설훈 의원은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60% 이상 되는 국민들이 BTS 병역 문제에 있어서 예외를 줘야 한다”고 하였다고 질의하기도 하였다. 질의의 논지는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이건 병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에 플러스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는 1등 공

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며 병역면제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반대로 “병역에 대해서 너희들 논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밝힌 것” 이라면서, BTS 멤버들이 입대해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황보승희 의원은 BTS를 언급하면서 “태권도라는 콘텐츠는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이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외국 저변에, 특히나 학생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지 않은가” 라면서 태권도평화봉사단을 규모를 늘려서 엑스포 유치에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의 병역논란은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0월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 이라 발표하고, “다른 멤버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 이라고 공시해 일단락되었고, 윤후덕 의원이 10월 24일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했다.

≪방탄소년단 BTS가 언급된 2022년도 국정감사장 현황≫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한 의원과 이유
2022.10.04.	국방	국방부 등	윤후덕 의원(민)의 BTS 병역관련 김영배 의원(민)의 BTS 병역관련 성일종 의원(국)의 BTS 병역관련 안규백 의원(민)의 BTS 병역관련 이헌승 위원장(국)의 BTS 병역 여론조사
2022.10.0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이용호 의원(국)의 BTS 병역관련 임오경 의원(민)의 문화예술 공헌도 관련 각자도생 예산문제 지적 전재수 의원(민)의 수의계약관련 언급 유정주 의원(민)의 풀미티켓(‘프리미엄’의 준말로 웃돈을 얹은 암표)관련 언급
2022.10.06.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신영대 의원(민)의 해외에서 위조상품 관련
2022.10.07.	국방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김병주 의원(민)의 BTS 병역 연기 관련 김기현 의원(국)의 BTS 병역관련 설훈 의원(민)의 BTS 병역관련 임병헌 의원(국)의 BTS 병역 특례 관련 김영배 의원(민)의 BTS 병역관련 한기호 의원(국)의 BTS 병역관련- BTS 멤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한 의원과 이유
			버들이 입대해야 되는 이유 신원신 의원(국)의 BTS 병역관련 정성호 의원(민)의 BTS 병역관련 성일종 의원(국)의 BTS 병역관련 윤후덕 의원(민)의 BTS 병역관련
2022.10.11.	외교통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우상호 의원의 공공외교 관련 사례로 언급(유엔 연설)
2022.10.11.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등	홍익표 위원장의 BTS 국외문화재 기부 관련
2022.10.14.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	조정훈 의원의 BTS 사기 사건의 공소장 관련
2022.10.14.	문화체육관광	대한체육회 등	황보승희 의원이 태권도 정신을 소개하며 언급
2022.10.17.	정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강병원 의원이 K-컬처 문화예술 진흥관련 신보의 역할을 주문하며
2022.10.17.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홍철 의원이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개선관련 BTS 부산공연 사례 언급
2022.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구자근 의원이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언급
2022.10.24.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등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 소속 공무직원의 BTS 정국모자를 중고장터에서 1천만원에 팔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언급
2022.10.2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이상헌 의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말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TS의 부산공연 언급
2022.10.24.	국방	국방부 종합	윤후덕 의원의 BTS의 해외공연 및 입대 발표

2021년도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휩쓴 한류 선봉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BTS, BTS라는 세계적인 우리 그룹이 더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의 말이다.

10월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5년 동안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방시혁입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기여도가 큽니까?” 라고 정의용 외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라고 답변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대통령의 유엔 방문 시 동행했던 BTS에 관련되는 보수 지

급과 관련해서 '정당한 보수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 열정페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중국의 김치 종주국 왜곡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김치종주국이라는 중국에 대해 이것 BTS한테 김치를 한번 먹게 해야지 김치가 한국 것이 되는 건가요? 정부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라면서 정부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BTS가 **25개 국정감사장**에서 언급 되었고, 올해에는 **21개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되었다.

BTS가 언급된 특징있는 질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2021년도 방탄소년단(BTS) 관련 주요 언급내용≫

보건복지위의의 강병원 의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TS가 올 연말에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답니다. 이때 2년 만에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콘서트장 출입 가능자는 백신접종 완료자고요, 미접종자 중에는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 결과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1월이 되면 야외에서 이런 공연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위의 최형두 의원 우리 예술교육 중요하지요. BTS의 나라 아닙니까? 문화예술 강국으로 만들자고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다 고용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을 둘 수 없으니까 청년 예술도 지원할 겸 예술강사 수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 왜 절반밖에 안 줍니까? 이런 데 예산 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술 수업이야말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고 공교육에서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빛나게 이 문화예술을 키우겠습니까? BTS는 뭐 그냥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권명호 의원 의원 얼마 전에 BTS 짝퉁 캐릭터를 다량 적발한 일이 있는 건 아십니까?

기획재정위의 양향자 의원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연평균 5조 56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K-전자세정 시스템을 수출할 기회가 됐는데 이 노력을 잘하시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일위원회의 이광재 위원장 BTS가 온라인상에서 한글교육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위의 소병훈 의원 이번에 사실은 화제가 된 게 BTS 정국의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KTX 철도차량을 임대해서 래핑 광고를 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성일종 의원 저번에 병무청 감사할 때도 제가 BTS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은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BTS가 한 주간 빌보드차트에 올라가면 1조 7000억의 흑자가 나요,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한 2400~2500억밖에는 안 나는데 팝음악계 같은 데서 정말로 가게 되면 수조씩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한 56조 정도 BTS가 국가에 기여를 했더라고요.

기획재정위의 김주영 의원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한국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BTS라든지 오징어게임이라든지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이라고 있는데 아시지요?

2-2. '북한' 언급 국감장은 모두 99개, 2,404회 언급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 관련 이슈로 인해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언급되는 데, 2020년도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는 91개 국정감사장, 2021년도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는 87개 국정감사장이었다.

올해 2022년도 제21대 국회 3차년도에는 16개 상임위원회 99개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2,404회 언급되었다.

북한관련 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제외하고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45회** 언급되었다.

이례적으로 많이 언급된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어민 북송 관련 때문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2018. 7. 뜬금없이 설치된 북한자료실(북한서적 전시)에 대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의 질타와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방어성 확인질의에 기인한 바 크다.

≪북한이 10번이상 언급된 국정감사장(국방, 외통위 제외)≫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일자	언급횟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2022.10.13.	88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2022.10.17.	6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2022.10.21.	51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일자	언급횟수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2022.11.08.	50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2022.10.14.	4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2.10.13.	3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2022.10.17.	3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2022.10.06.	35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2022.11.02.	32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2022.10.18.	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22.10.05.	23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등	2022.10.07.	20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2022.10.17.	18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2022.10.11.	18
교육위원회	교육부	2022.10.21.	17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2022.10.12.	17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2022.10.12.	15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2022.10.20.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2022.10.11.	1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2022.10.06.	12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2022.10.18.	12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10.1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022.10.21.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2022.10.19.	10

3. 2022년도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모니터위원 보고서 내용 중심)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소품에 대한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하였다. 국정감사 첫날(1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스팸햇반 등이 주목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질의참고를 위해 약컵(하루에 먹는 약 381개, 전혜숙 의원), 향정신의약품(전혜숙 의원), 칠성사이다(남인순 의원), 투구게인형(남인순 의원), 설탕제품(최종윤 의원), 크림(백종헌 의원), 잠오는 약(강선우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백종헌 의원), 패널 등을 이용했고, 환노위에서는 캐리백(이수진 비례의원), 석포제련소 인근 퇴적물(김형동 의원), 생수병(임이자 의원), 레드카드(이은주 의원) 등을 사용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책(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김희국 의원), 판스프링(이종배 의원) 전기번호판(유경준 의원), 휴대폰(허종식 의원), UAM 모형(서일준 의원) 등이 사용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프라스틱와 목재 어상자(서삼석 의원), 박재범의 원소주(윤재갑 의원). 햇반(안호영 위원)이 떠오르는데 그쳤다. 《과방위의 류호정 의원은 손팻말을 준비했다가 위원장의 제지를 받은 후 질의시에만 사용하였음》

가. 이용 의원의 이중섭 화가의 유채화 사진

이용 의원이 10월 18일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에서 이중섭 화가의 유채화 ‘아들과 아버지’와 관련하여 상하 부착문제를 조명하였다. 위와아래와 바뀌어서 전시가 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나. 양향자 의원의 도어록 건전지

양향자 의원은 10월 24일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2007년에 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국내 도어록 전원은 건전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한 후, 배터리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에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은 리튬전지를 활용해서 홈IoT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

다.

다. 서일준 의원의 UAM 모형

서일준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도시형헬기 UAM 모형을 들고 나와서 운전자 포함 6인 정도를 태워서 약 200㎞를 비행할 수 있는 차세대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uam에 대한 정책조명을 하였다.

라. 배준영 의원의 화약식 타정총

배준영 의원이 10월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콘크리트가 뚫은 위력을 가진 타정총이 총기류인데도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서 반입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마. 최연숙 의원의 소주

최연숙 의원은 10월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담배 관련해서는 경고문이 크게 나와 있는데, 소주 등 주류와 관련해서는 경고문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정을 주문했다.

바. 남인순 의원의 맥주

남인순 의원이 10월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맥주를 들어보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와 맥주를 이렇게 해서 콜라보 형태의 이런 주류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안 되고 있고, 파리바게뜨에 가면 장수막걸리를 넣은 셰이크까지 판매를 하는 실태라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사. 이탄희 의원의 앞치마

이탄희 의원이 10월 24일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 제빵회사의 끼임사망사고와 관련해서 SPL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앞치마라면서 들어보면서 앞치마가 재질이 질겨서 컨베이어 벨트같은 데에 끼어서 들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아. 윤준병 의원의 VR을 이용한 시뮬레이터

윤준병 의원은 10월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VR을 이용한 장비를 소개하면서 농용트랙터 운전 교육 시뮬레이터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실제 수요자에 전혀 안 맞는 것 만들어 놓고 활용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자. 유정주 의원의 KH몰 판매 컵과 조선등, 수저

유정주 의원은 10월 11일 한국문화재단 국정감사에서 KH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면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차. 허종식 의원의 코레일톡(휴대폰)

허종식 의원은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톡을 통해 표를 구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지적했다.

카. 최승재 의원의 홍보용 볼펜

최승재 의원은 10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의 갑질 문제를 조명하면서, 볼펜에 지사장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설계사들에게 강매하면서 급여에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타. 배준영 의원의 배추

배준영 의원이 10월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역구인 영종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샀다며, 3개에 2만 7000원인데, 한 포기에 9000원이라며 2-3천원이면 샀던 것이라면서 물가인상문제를 조명했다.

하. 유경준 의원의 자동차 번호판

유경준 의원이 10월 7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불량번호판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기번호판 원판이 필름이 흐트러지고 있고, 전기번호판 반납된 게 많다면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거. 전혜숙 의원의 암환자 약봉투

전혜숙 의원은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가 암 환자 약을 받았는데요. 쓰지 않고 남은 약이 이 정도 된다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는지 질타했고, 수거방법 등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너. 남인순 의원의 투구게 인형

남인순 의원은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투구게 인형을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독소 요소를 알아내는 그런 동물인데, 백신실험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투구게의 심장에서 30%가량의 피를 뽑아서 실험에 쓰고 그다음에 바다로 내보내면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10~30%가 죽게 된다면서 대체시험법을 주문했다.

더. 최종윤 의원의 설탕대체제(노슈거)

최종윤 의원은 당알코올은 10개 정도가 있는데 전혀 규정이 없다면서 당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다섭취 기준이 어디 있는지 없다면서 대책을 주문하였다.

러. 백종현 의원의 MD크림

백종현 의원은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MD크림을 들어 보이면서, MD크림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메디컬 디바이스(Medical Device) 크림, 즉 의료용 화장품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머. 강선우 의원의 멜라토닌 5mg

강선우 의원은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위 약을 들어보이며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를 했다면서, 의약품 해외직구문제 등을 조명했다.

버. 구자근 의원의 CPM 단말기

구자근 의원은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CPM 단말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16만 개 지원하는 데 56억이었다며,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데도 계속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홍정민 의원의 나이키 신발

홍정민 의원은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나이키 신발을 들어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1조 6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의 2년 전 석영텍스타일이라고 하는 국내 협력 업체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한 것에 대해 조명했다.

어.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의 캐리백

이수진 의원은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캐리백을 들어보이면서 논란이 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포함된 캐리백 문제를 조명했다.

저. 윤재갑 의원의 소주병

윤재갑 의원은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소주병과 막걸리병을 들어 보이면서, 전통주 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조명하여 관심을 끌었다.

처. 안호영 의원의 햇반 컵반

안호영 의원은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햇반 컵반에 미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 햇반을 국정감사에 들고 나와 비교하였다.

커. 변재일 의원의 디지털 시계

변재일 의원은 10월 4일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현황을 디지털화하여 소동일이자 디지털 시계를 보이면서, 디지털 시계를 찬 사람들도 아날로그로 화면을 맞춰논다고 하면서 이게 휴면 인터페이스 분야의 디지털 정신이라면서 무조건 온라인에서 보고서 써 놓고서, 디지털 문서는 앞뒤를 찾고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아날로그 문서는 쉽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인간친화적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터. 김형동 의원의 제련소 퇴적물이 담긴 컵

.

김형동 의원은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안동서원 인근에 있는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문제를 제기하면서 왜가리 집단폐사 등의 원인 규명을 조명했다.

허. 임이자 의원의 먹는샘물 생수병

임이자 의원은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는데, 안전한 먹거리와 물관련 정책질의를 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물들이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인지 안전한 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조명된 국감 소풍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당이 대장동 관련 손팻말, 마스크 문구, 근조리본 등으로 인해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대똥이'는 노이지 마케팅처럼 국정감사 파행 초래 등으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았고, 윤준병 의원의 생물고기 실험은 동물단체의 비난성명으로 인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1) 송석준 의원의 '대똥이' 양두구육 인형

10월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은 양의 탈을 쓴 불독이라면서 이름을 '대동'이 아닌 '대똥'을 바꾸었다면서, 대장동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후 이 인형 때문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일시적인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

(2) 윤준병 의원의 물고기 수조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이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조에 산 물고기를 넣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 생명체로 시연하게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 실험으로 인해서 윤준병 의원은 동물보호협회로부터 비난성명을 받게 되었다.

(3) 윤준병 의원의 산업용 안전벨트

10월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준병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에 추락사고가 대부분인데, 추락사고 대책에 생명줄、안전발판、안전망, 이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 또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안전 벨트를 가지고 나와서 들어 보였다.

(4) 임이자 의원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나와 보이면서 의료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묻고, 양성이면 의료폐기물로 수거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장관의 대답을 들었다. 그러면서 양성이라고 해서 회수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지 집중 조명했다.

(5) 김성원 의원의 포크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일반 포크를 들어 보이면서, 생분해성 포크를 가져왔는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 포크를 보여준다면서 분리수거를 하지만 모두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해에 퇴비화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며, 환경부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6) 강은미 의원의 화장품 게이스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은 재활용선별장을 다녀왔다면서 영상자료를 보이고, 재활용선별장 종사자들이 썩은 냄새 때문에 건강상 좀 위험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화장품게이스의 경우에는 모두 재활용하라고 돼 있다고 하니 장관은 '아더(other)라고 표시된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뜻이라서 표기체제를 바꾸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7) 김성원 의원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의원은 전국 학교급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이며, 가격이 1천만원부터 해서 중국산 6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성능평가는 모두 1등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8) 조경태 의원의 중외역사강요

10월 5일 교육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보는 필수 교과서,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역사 왜곡관련 질의를 하면서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9) 이수진 의원(비)의 컵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 등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리유저블컵(재활용컵)을 들어 보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에 진출한지 22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만든 이벤트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판매됐던 컵이라고 소개했고,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골병이 들어도 괜찮은지 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10) 윤재갑 의원의 연어상자

10월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가 2015년 10월부터 홈페이지에 '가을철 수산물, 백세 건강은 우리 수산물로' 이런 제목으로 게시한 내용 중에서 연어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마치 꼭 우리 수산물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타임지가 10대 웰빙식품으로 소개된 것은 자연산이지 양식 연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11) 황운하 의원의 스마트 태그

10월 7일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태그라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산재를 예방하려면 필요하다며, SK 텔레콤의 중소기업체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12) 김형동 의원의 석간신문

10월 1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 석간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사항 즉 실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의하였다.

(13) 유기홍 의원의 한국어 교육교재

10월 1일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에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교재의 내용 중 여필종부를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를 소개할 때 전달해야 할 될 가치관으로 적당한지 질타하였다.

(14) 전혜숙 의원의 EV패드

10월 20일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창작자들을 위해서 수익 배분해도 저작권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이나 수익 배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불법 스트리밍을 도와주는 중국산 EV패드를 들어 보이며 대책을 촉구했다.

(15) 박성중 의원의 핸드폰

10월 1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은 핸드폰을 꺼내 야놀자 어플을 소개하면서 야놀자와 여기 어때라는 어플이 숙박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업체의 광고 문

제를 제기했다.

(16) 최종윤 의원의 감기약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은 브레이킹 배다르는 드라마 사례를 들면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을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17) 신현영 의원의 모유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은 온라인에서 모유 한 팩이 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모유를 들고, 이거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묻고, 식약처장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서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을 하자, 모유가 식품인지 인체유래물인지 복지부와 식약처에 질의를 했는데요, '복지부는 영유아식이다, 그래서 식약처 소관이다' 라고 하고. 식약처는 '인체유래물이므로 복지부 소관이다' 라고 서로 부처 떠넘기기를 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8) 전봉민 의원의 과자와 사탕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의원은 과자와 사탕을 각각 들어 보이면서 지난해 각 지방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875개를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128개가 표시위반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19) 정춘숙 의원의 비건 라면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인증되었다는 비건 라면을 들고 나와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인증(채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비건 인증이 굉장히 인기)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라면서 효력도 없는 인증을 가지고 일부 식품업체에서는 몰랐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 이용호 의원의 물과 맥주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물병 4개를 가져와서 생수와 혼합물의 수질 검사 소관부처가 다른 것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혼합물에 대한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고, 맥주캔을 들고 나와 비알코올과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정책점검을 하였다.

≪참고 :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조명되었던 국감 소품**≫

언론에서는 송석준 의원의 나훈아 '테스형'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윤재갑 의원의 중국산 민어(10월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개호 위원장이 국물이 뚝뚝이라고 해서 회자됨), 문진석 의원의 판스프링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김형동 의원의 소방헬기(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류호정 의원의 배선 노동자 복장 착용(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 등이 조명되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국감소품이 등장하였다.

(1) 박대출 의원의 항원진단키트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항체진단키트라고 하면서 기존의 항체 진단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항원 진단 방식으로 개발해 발표했다면서, 질병청이 이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데, 과기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

고 있는 지 검검했다.

(2) 정운천 의원의 인형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강아지 대신 가져왔다면서,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이동식 장례서비스의 문제를 질문했다.

(3) 고민정 의원의 LED 마스크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미용기기인 LED마스크를 들어 보이면서, 피해사례와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4) 류호정 의원과 쓰레기통과 공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사용후 핵연료임시정시설인 맥스터(MACSTOR)를 질의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통과 공을 들어서 설명하였다.

(5) 최종윤 의원의 껌과 패치, 아로마 파이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이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점검하면서 효용이 없다고 판정이 난 껌과 패치를 나눠준다고 지적했고, 모방심리가 큰 청소년에게 아로마 파이프를 준다고 지적했다.

(6) 양이원영 의원의 양빈모래

10월 7일 환경노동부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모래를 들어보이면서, 명사십리에 냄새가 지독한 양빈모래를 쏟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7) 박용진 의원의 엔진오일 측정게이지

10월 8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엔진오일 측정게이지를 들고 나와서 서보신 증인(현대자동차 사장)에게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 주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다.

(8) 배현진 의원의 USB 꾸러미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공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이 USB 꾸러미를 보이며 '이게 국정감사 자료라고 문체부에서 이틀 전에 주신 거'라며, 한 꾸러미로 저희 방 입구 책상에 소중히 던져 주고 가셨더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무성의를 지적했다.

(9) 이맹우 동원산업 사장의 생수통

10월 8일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맹우 동원사업 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프라스틱 문제가 나와 생수통이 문제가 되자 말통으로 교체 하였다고 답변했다.

(10) 구자근 의원의 초코파이 상자, 냉면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의원은 오리온과 롯데의 분쟁과 냉면업계 분쟁 등 상표권 분쟁에 대해 조명하였다.

(11) 류호정 의원의 부착장치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탈취문제를 조명하면서 이종민 증인(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에게 부착장치 공급업체가 부착장치를 중단한 경위를 질의했다.

(12) 조명희 의원의 우라늄이 든(?) 병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에 걸쳐 가지고 42억을 들여서 만든 우라늄 정제 공정 기술이라면서, 원안위 반대로 이 경제성 높은 기술이 허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3) 박성민 의원의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

10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의원이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를 들고서,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 이게 2㎏짜리인데, 이백여 개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맛을 일원화하고 있고, 대기업이 이것을 독점 납품하고 있다며, 소고기국밥 혹은 뭐 여기는 순두부 또 돈가스 소스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넣고 있다면서 소비자취향을 무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14) 박성중 의원의 메모워치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계와 비슷한 심장질환자 심전도 데이터를 수시로 측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휴이노에서 만든 메모워치를 들고 나와서 디지털 헬스 케어 사업을 점검했다.

(15) 박성중 의원의 소형 전자파 측정기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이렇게 한 1억 5000 들여서 개발했는데, 400개나 만들었는데 활용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16) 김형동 의원의 수리온 헬기모형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 수리온 헬기모형을 가지고 나와서, 유효적절하게 제때 진화 내지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헬기밖에 없다라는 본다며, 헬기를 구입하고 편대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허종식 위원의 마스크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은 마스크를 들어 보이면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 마스크의 용도를 점검했다.

(18) 김성주 의원의 식욕억제제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직접 당근 마켓(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입했다면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의약품 매매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19) 서정숙 의원의 에페드린 의약품 상자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에페드린이라며, 이 에페드린은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에 부정맥으로 급사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인데도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바코드도 제거되어 있는데 관심을 촉구했다.

(20) 김성주 의원의 효모정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약 300여 개나 달한다며, 앞으로 이런 식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파악하고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1) 이상직 의원의 전자호구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전자호구를 들고 나와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살짝 터치만 해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자호구를 과학적이고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전자호구 장비로 경기 규칙을 고안했다며, 국제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22) 심상정 의원의 시험체

10월 16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서 불 잘타는 자재를 준불연재로 승인해주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시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험체의 한 면을 알루미늄 또는 콘크리트 또는 난연액을 도포해 가지고 이 한 면에다가 직접 불도 아니고 복사열 700도를 쪼여서 10분을 버티면 준불연재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23) 박찬대 의원의 마스크

10월 19일 교육위원회의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보이며 납품 마스크의 스트랩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특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24) 조경태 의원의 마스크

10월 19일 교육위원회의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보이며, 디메틸포름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전수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 박주민 의원의 검찰연감

10월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서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서 검찰연감을 보이면서, 검찰총장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먼저 나오고 있다고 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에둘러 말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책자를 들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주로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이었고,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소개할 때에도 책자를 들고 소개하였음)

(26) 윤영덕 의원의 상조물품

10월 22일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은 상조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서울대의 법인직원과 자체 직원의 경조사비와 경조물품까지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 박성중 의원의 AR 플레이어

10월 22일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은 AR 플레이어를 들고 나와서 시연을 하면서 VR·AR 콘텐츠사업을 조명하면서 관련 국내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28) 이종성 의원의 10월 22일자 서울신문

10월 22일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10월 20일자 서울신문(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던 2018년 청와대 간담회는 쇼였다)을 들어 보이면서 발달장애인 대책을 주문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외국 신문 등이 등장하였음)

(29) 허은아 의원의 TLD(피폭량 측정 장치)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피폭량측정 장치를 가지고 나와서, 원안위 위원장에게 현행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방사능 노출 종사자에 대한 피폭량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30) 윤미향 의원의 곰인형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반달가슴곰을 상징화해서 지리산에는 이렇게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반달가슴곰의 복원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31) 이수진 의원(비례)의 도시락 빈공기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도시락 빈공기를 가지고 나와서, 도시락 하나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열두 개나 나온다면서, 코로나 19 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대책을 촉구했다.

(32) 김웅 의원의 일회용 프라스틱 컵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프라스틱 컵을 들어 보이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 있는 지 질문하면서, PLA(Poly Lactic Aci)의 처리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였다.

(33) 김웅 의원의 '새를 구해요' 배지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웅 의원이 '새룰 구해요' 배지와 함께 조류충돌방지테이브 더미 등을 보이면서 버드 스트라이킹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34) 임이자 의원의 자동차방향제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자동차 방향제를 보이면서 1군 발암물질이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35) 정청래 의원의 증인 '자필 편지'

10월 26일 교육위의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의 자필편지를 들어 보이면서, 단국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필요해 보이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특별승진 건에 대해서는 사안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6) 정경희 의원의 교과서

10월 26일 교육의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은 12개 시도교육감이 채택한 인정교과서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들어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7) 김민철 의원의 토양오염물질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김민절 의원은 미국 기지(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퍼온 토양오염물질을 제시하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하였던지, 부실관리를 하였다고 질타하였다.

(38) 전용기 의원의 태극기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태극기를 흔들어 보이면서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이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로 확인되었다며, 정초석이 있는 이등박문의 망령이 살아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선조 6000여 명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리고 일제 헌병의 군홧발에 짓밟혀서 2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3·1 운동 기념터(불과 5미터 되지 않는 곳)라고 강조했다.

(39) 강은미 의원의 청바지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은 청바지를 들고 나와서 칠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입사후 입었던 청바지라면서, 과로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40) 임이자 의원의 방염마스크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이천의 38명 사망자 중에서 22명이 유독가스로 질식했다면서, 가벼운 포켓용 방염마스크를 소지하도록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책제안을 하였다.

(41) 정진석 의원의 항공 점퍼

10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라며, 평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정부공공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지적했다.

(42) 고민정 의원의 자율주행 로봇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미래산업과 관련된 질의하면서 자율주행로봇을 시연하였다.

4. 주목을 받은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사례

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개요 : 13개 상임위 113명 증인 출석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증인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들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야 했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3개 위원회(법사, 외교, 여가위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없음)에서 113명의 증인과 101명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원의 신문에 답변하였다. 113명의 증인 중에는 위원회별로 두 번씩 출석을 한 경우가 6명이 있어서(김범준 우아한형제 CEO,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대표이사, 이석우 두나우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등) 모두 107명의 증인이 출석하였다.

외국인 증인으로는 욘다 오시노리 덴소코리아 대표이사,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 코리아 사장, 피터 뮐러(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 등이 출석하였다.

나. 언론에 보도된 증인 및 참고인 사례

(1) 횡령사고 낸 금융기관의 은행장

시중은행장들이 금융권에서 불거진 잇단 횡령사고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10월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횡령사고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해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증인들은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대신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양정숙 의원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쥐꼬리만 한 이자받으려고 예·적금을 들고 있다” 며 “그런데 사상 최대 예대마진을 올리는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도 부족해 횡령사고까지 벌이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횡령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두 배로 늘린 상태이고, IT 투자로 32개 항목의 데이터를 통해 은행 지점의 위험도를 감별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사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우리은행이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의 이익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성호 하나은행장도 “횡령 사고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지난 5년 동안 횡령금액 자체 회수율이 66% 정도 돼서 최대한 회수 중이다.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횡령사고 건수는 저희 은행이 가장 적으나 앞으로도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 이라며 “상시 감시시스템이 구축돼 있어도 고의적인 일탈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의 내부통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은행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며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윤리인 만큼 내부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직원들이 일벌백계의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지난해(2021)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몸살을 앓았던 카카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골목상권 침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약속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 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조치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시스템적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준비를 마친 스타벅스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고 답했다.

남궁 대표는 최근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남궁 대표는 "우마무스메 이용자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 며 "우리가 했던 발언은 후회하고 있고 사과도 드렸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 고 사과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2021)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골목상권 침해 등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으나, 개선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3)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 대표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대표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이 사이버 사기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사기에 준하는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3057억원으로 4년새 11배가 증가했다" 라며 "최근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차

단 및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전화번호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 이미지 형태로 보내는 시도도 있다” 고 답했다.

(4) 정승옥 BBQ 대표와 임금옥 BHC 대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한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 등에 대해 질타했다.

임 금옥 대표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 갱신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계약서에 포함된 것이지 무조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넣은 것은 아니다” 라며 “신규 업체들의 경우 bhc 본사와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고 해명했다.

정승욱 BBQ 대표는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상생 정책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5) 이상국 메르세덴스-벤츠 코리아 부사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차량결함 문제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은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부사장에게 벤츠 신형 모델인 S580 차량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사장은 “(해당 뉴스)방송을 보고 조치했다” 며 “7월에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6)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 물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7)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행명령 집행을 중단했다. 민병덕 의원은 “빗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황당하다”면서 “불출석 사유에는 건강 상 공황장애로 외부인 만나는 데 정상적으로 어렵다는 증언이 있는데,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는 적극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8)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대표

10월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승엽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이승엽 대표는 “오는 11월은 화정아이파크 847세대 5000명 넘는 입주예정자들이 학수고대하던 입주예정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11월이 조금만 늦게 천천히 왔으면 하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9)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

10월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익히 대표는 '광주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피해자를 만나고 있느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2월 사이 3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분명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 '현산은 1차 피해자 주거지원안에서 대위변제를 하되 5~6%의 이자를 받기로 하지 않았냐'고 조 의원이 지적하자 정 대표는 "죄송하지만 제가 2월에 부임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취했고, 이에 조 의원은 "2월에 부임을 해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10) 김영섭 LG CNS 대표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10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달부터 발생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를 이달 중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희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통 후 많은 오류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부가 국민들의 편리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취지로 예산 1200억 원을 들여 지난달 6일 개통한 시스템이다.)

(11)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룰들이 빨리 정해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창현 국

민의힘 의원의 자전거래 의혹 관련 질의에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대표로 있으면서 국회에도 인사하고 정부 찾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된 건 그 동안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고도 덧붙였다.

(12) 김지윤 DSRV랩스 대표

’테라 사태’ 관련자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DSRV의 김지윤 대표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면서 “테라 피해자 구제 움직임에 공감한다” 고 말했다. 김 대표는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테라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권 대표와 친한 지를 묻는 윤 의원 질문엔 “친하다는 기준이 애매하다” 면서 “연락처는 있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고 말했다.

(13)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가 메타버스 내 게임물을 게임법으로 다뤄야할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제페토가 콘텐츠 제작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에 대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 며“제페토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체험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해 차이가 있다” 고 설명했다.

(14)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지난 6월 불법파업을 단행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준법 경영 준수를 위해서다” 고 밝혔다. 하청지회 파업 진압

에 회사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청 직원들이 사내 순환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두선 사장은 10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사장은 사측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준법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15)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대표이사가 10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위원들의 고용・작업환경개선 관련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종철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산재 건수라든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6)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이사

김범준 대표는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10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제21대 국회 첫 해인 2020년 국회 산자중기위 출석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산자중기위와 과기정통위 국감에 출석했다.

과방위에서는 음식점 리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산자중기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퀵커머스 플랫폼 ’B마트’의 출점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에서는 ’콜’을 받는 방식이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의

산재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질타당했다.

(17) 최태원 SK 회장

카카오 '먹통 대란'을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관계사인 SK, 네이버, 카카오 등 3사 총수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10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SK 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저녁 늦게 출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다시 한 번 화재사고를 내서 대단히 국민께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는 물론, 설사 재발되더라도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18)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10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 '먹통 대란'을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본 사태를 카카오가 더 나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는 서비스 안정성, 문어발 확장이나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서 조금이나마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19)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10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창업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인프라가 더 단단하고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 강동석 SPL 대표이사

SPC그룹 계열 평택 제빵 공장(SPL)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강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만 해당 공정이 2인1조 근무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1) 박성하 SK C&C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이사가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박성하 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극 보상 협의에 임하겠다" 고 약속했고, 사안이 엄중한 만큼 SK C&C를 넘어 SK그룹 차원에서 피해 보상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감에선 SK C&C가 판교 데이터센터에 'UPS(무정전 전원 장치)-배터리'를 한 공간에 배치한 설계상의 문제와 전력 이중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22) 김기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사관장

해운은 심장과 같고, 선원들은 그 심장 뛰게 하는 혈액과 같다 =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사관장(항해학부 4학년)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해운을 통해 물류 99%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에서 해운은 심장과 같고 선원들은 그 심장 뛰게 하는 혈액과 같다"고 발언. 이어 "선원들 외화 획득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고, 가족을 뒤로한 채 대한민국 경제 성장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선원을 경시하면 해운 무너지고, 해운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

진다. 부디 해기사에 대한 처우 많이 개선되고, 국민 인식도 개선됐으면 한다“며 해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2022년도 국정감사 출석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
10월 4일	정무	국무조정실	김홍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장) 박정란(국토교통부 서기관) 오창희(세방여행 공동대표) 김갑유(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박정후(코리아세븐 상무(상품1부문장))	
10월 4일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0월 4일	교육위	교육부	류철호(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구연상(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10월 4일	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	손희석(에어비앤비코리아 유한회사 컨트리매니저) 이강덕(포항시장) 최정우(포스코그룹 회장)	류 혁(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민경우(대안연대 상임대표) 이성우(인천ㆍ부천민주노동자회 피해자) 이종설(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임형찬(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오뚜기 대표이사)	신승환(반려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김문수(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박흥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공영운(현대자동차 사장)	남우기(정보통신기술사회 前회장)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정우식(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최덕환(풍력산업협회 팀장) 이무덕(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10월 4일	환경노동	환경부	송호섭(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전근식(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	이승준(부경대학교 교수)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박승환(변호사)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
			배상윤(영풍석포제련소 소장) 김동휘(㈜AWP 대표)	박석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강춘자(KLPGT 대표이사) 김대욱(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대표)	김남진(KLPGT 사무총장)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버) 이영귀(KLPGT 전 이사)
10월 5일	환경노동	고용노동	욘다 오시노리(덴소코리아 대표이사) 정종철(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 박두선(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박차훈(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철희(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김연극(동국제강 대표이사) 김진환(삼성전자판매3팀 팀장)	김항열(삼성전자 1노조위원장) 김봉준(삼성엔지니어링 노조위원장)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유최안(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성하청지회 부지회장) 비실명(회사원)
10월 6일	정무	금융위원회	김지윤(㈜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차동석(LG화학 부사장) 이승호(삼성생명보험 부사장) 박진홍(전 엑스탁 대표) 이석우(두나무)	김건식(서울대학교 교수) 전성인(홍익대 교수) 성오봉(자영업)
10월 6일	국방	합동참모본부		안병석(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박두선(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문진(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원) 임형도(여수항도선사회장) 노동진(진해수산업협동조합장) 송효진(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원실(부경신항수산업협동조합장) 고동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김기원(한국해양대학교 학생(사관장))
10월 6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중소벤처기업부	윤종하(MBK파트너스 부회장) 임영록(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 킴벌리 린 창 멘데스(나이키코리아 사장)	박철수(티지테크 대표)
10월 6일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김영섭(LG CNS 대표이사) 박중신(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강미숙(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김두경(코로나19백신피해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
			손희석(에어비앤비코리아유한회사 컨트리매니저) 장지호(닥터나우 대표)	협의회 회장)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경(소아암 환아 母) 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류경연(한국한약산업협회장) 송승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양동원(대한치매학회(이사장)) 이남훈(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제주지부) 조성남(국립법무병원 원장) 천영훈(병원장(인천참사랑병원)) 최미리(코로나 백신 피해유가족) 홍승봉(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10월 6일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안규진(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정익희(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승엽(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
10월 7일	정무	공정거래위	남궁훈(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노태문(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도세호(비알코리아㈜ 대표이사) 박경훈(트렌비 대표) 임금옥(BHC 대표이사) 정승욱(제너시스 BBQ 대표이사) 최형록(발란 대표) 함윤식(우아한형제들 부사장) 허혜찬(㈜에이티 대표이사) 이상국(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부사장) 안철현(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이종민(자영업연대 대표)
10월 7일	행정안전	경찰청	신지영(당근 서비스대표)	서혜정(아동학대 피해가족협의회)
10월 7일	보건복지	식약처	김양수(㈜네오팜(대표)) 임준범(롯데칠성음료 전략기	박영덕(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실장)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
			획부문장) 주성원(쿠팡 전무)	배형진(모다모다 대표이사)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10월 11일	정무	금융감독원	임동순(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하나은행장) 이원덕(우리은행장) 이재근(국민은행장) 진옥동(신한은행장)	봉애림(자영업자)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영학(한국맥도날드(유) 상무)	이성일(㈜비알코리아(베스킨라빈스) 기획실장
10월 11일	환경노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임현호(GS칼텍스 전무) 장갑종(금호석유화학 공장장, 여수산단환경협의회 회장)	박응렬(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장)
10월12일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요한(의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장) 장연호(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10월 12일	환경노동	경사노	황국현(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송제민(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승욱(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 윤상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의춘((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조영기((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10월13일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경화(혈우병 환자 가족) 김용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서영종(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소성욱(활동가)(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알 상임활동가))
10월 14일	정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김진아(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정지연((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	대한체육회 등		강호석(국가대표 스쿼시팀 감독) 김동현(국가대표 역도팀 코치)
10월 14일	환경노동	한국수자원공사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10월17일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김인식(사무금융연맹 삼성애니카지부장
10월 18일	과학기술	한국연구재		손민영(조선대학교 대학원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
	정보통신	단		생)
10월 19일	보건복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성민(브라더스키퍼 대표) 이시형(세로토닌문화원 원장)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고이근(RH Focus Corp. 대표이사)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0월 20일	정무	신용보증기금	박두선(대우조선해양 사장)	
10월 20일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김동연(일양약품 대표이사)	김세중(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의료인공지능센터장 교수) 오대희(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
10월21일	정무	국무조정실	피터 뮐러(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	이승준(부경대학교 교수)
10월 21일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월21일	교육	교육부	임홍재(국민대학교 총장)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총장 홍석화(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이형철(한국선급회장) 강성기(해양경찰청 전 정보과장) 김태균(해양경찰청 전 형사과장)	
10월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허영재(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수(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 전무)
10월21일	환경노동	환경부기상청		박유경(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신재은(풀씨행동연구소 캠패이너)
10월21일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김만태(대한해운 대표) 김재석(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정희민(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상익(상지건축 사장) 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 대표)	
10월 24일	정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윤호영(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두나무 대표) 이재원(빗썸 대표이사)	박수민(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10월24일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김학수(KDI 선임연구위원) 옥동석(인천대학교 교수)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월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종렬(SK텔레콤㈜ ICT 인프라 사장) 권준혁(㈜LG유플러스 전무)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박성하(SK㈜ C&C 대표이사) 서창석(㈜KT 부사장) 이해진(네이버㈜ GIO) 최수현(네이버㈜ 대표이사) 최태원(SK㈜ 대표이사 회장) 홍은택(㈜카카오 대표이사)	
10월24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정교화(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김기영(희망연대본부방송스태프지부장)
10월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서규(팹리스산업협회장) 김호덕(택시기사)
10월24일	환경노동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익훈(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선배(삼표산업 대표이사) 마창민(DL이앤씨 대표이사) 김범준(우아한형제들 CEO) 진재호(더케이호텔 사장) 정주력(한국와이퍼 대표) 강동석(SPL 대표이사)	이김춘택(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최윤미(민주노총 금속노조 환국와이퍼 지회장)
10월 2일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김정하(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박대성((사)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고문)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증인 참고인 현황≫

(1)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지난 6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와 관련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10월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 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무리한 철거 방식, 불법 재하도급 등이 낳은 인재로 밝혀졌다. 사조위는 HDC현산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권 대표를 비롯한 HDC현산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해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권 대표는 "철거현장 6곳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에 점검을 의뢰했고, 불법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하도급이 일어나는 부분을 막고자 제도를 개선 중"이라

고 했다.

(2)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불매운동이나 '남양스럽다'는 비아냥 등에도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의원 질의에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와 "부끄럽다" "아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의원들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은 "잘 보이지 않는다"했고, 질의에 대해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 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느냐?" 며 "참 답답하네" 라고 질책받기도 했다.

(3)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기관증인인 박기영 2차관이 과거 민간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이 지난 2015년 2월 4일 SK E&S 관계자들과 강남의 한 전통 요정을 방문해 350만원 가량의 식사 대접과 상품권 1장 등 총 4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식당은) 1인당 식사비가 46만~50만원이고, 접객원들과 '2차'가 가능했던 요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차관이 당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었고, SK E&S가 위례 열병합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11월 14일 오전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 반대 청원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같은 날 오후 산업부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승인했다며 "(박 차관이) SK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을 비롯해 증인으로 참석한 유정주 SK E&S 대표, 이완재 SKC 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차관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달리 특별한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 "업무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통상적인 지역난방 사업들, 업계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고 해명했다.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1년 국회 국정감사는 '카카오' 국감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김범수 의장이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과기정보통신위, 정무위원회, 산자중기위까지 3번씩이나 직접 출석하였고, 카카오 계열사 대표가 참석한 상임위까지 합치면 6개가 넘었다. 김 의장이 "저 자신도 모르게, 또 카카오의 공동체 CEO들도 성장에 취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카카오가 지향해 나갈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신속하게 일정, 계획, 실천방안, 상생 이야기를 공개해서 말씀드리겠다." 고 카카오의 '쇄신'을 약속한 만큼 골목상권을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사업은 빠른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견되었다.

(5)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숙박·여행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과도한 사업 확장과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 논란 등과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과방위 출석을 위해서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석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증인신문을 다 마친 뒤였다.

국감에서는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주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달았다.

배 대표는 “계약서상 광고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 쿠폰과 연관된 광고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며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 제휴 점주의 의견을 듣고 상품 구성에 반영하고,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했다.

야놀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업자들이 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주지만,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이슈도 만들어내고 있다” 며 “공정거래 입장에서 균형감 있게 살피면서 불공정한 이슈는 엄정하게 제지하겠다” 고 했다.

(6) 김남혁 이다영 전승환 대학생(총학회장)

10월 21일 교육위 종합감사 국정감사에서 대학학력진단평가 관련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학력진단평가의 문제점과 지방대학교 소멸위기 등에 대한 실상을 잘 알려 주었다.

(7)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원인불상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정춘숙 의원의 질의(나온 이유) 중에 “제가 여기에 참석한 이유는 30만 명이 넘는 이상반응 피해자와 그 피해자들의 고통과 울분을 지금 여기서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전 국민 앞에 약속하셨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며 약속하신 신년사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동참했던 백신 접종 피해자와 사망자 가족들이 한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답변했다.

(8)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에너지전환정책, 2050 탄소 넷제로,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조명을 받았으며, 10월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였다.

(9)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괄(GIO)

네이버의 창업주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괄(GIO)이 골목상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GIO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문제 관련, 저희는 여러 형태 통해서 노력해왔고 여전히 미진한점 많고 부족한점 많은 듯하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 고 말했다.

“새로운 먹거리 분야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게 사회적 사명이라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메타버스 제페토나 5G로봇 등에 투자하고 있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많고,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10) 앤토니 노리스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유) 대표이사

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국맥도날드 근로노동 환경을 전면 검토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나갔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맥도날드의 ’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패스트푸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증인신청으로 ’스티커갈이’ 의혹,

'일방적인 노동자 근로시간 변경', '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지적받고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증인 현황≫

2020년도 국정감사에도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위원회 관련 교수나, 대기업체 사장 등 임원, 기관장 등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외에도 감사장에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였다.

(1)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멤버로서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활동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김 회계사는 참고인 목적과는 상관없지만,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해고자분들의 복직과 체불임금 해결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2)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박사과정)

카이스트 등 전국 15개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의 조재완 학생연대 대표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하여, 환경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 철폐를 주장했다.

(3)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에서 2018수제186호 산업부 수사 의뢰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제12부 조상원 부장검사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수사지연에 대한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고 "제가 향후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4)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청장은 10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오랫동안 새만금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생태계 복원, 수산업·수산자원의 회복, 해양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수 유통량을 얼마큼 더 확대해 나가야 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한 안호영 의원의 질의후에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여 오래 기다렸는데, 윤준병 의원이 짧게 질의하자 '그것을 끝인가요?' 반문하기도 하였다.

(5) 김태완 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 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택배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특히 택배 분류 문제를 강조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6) Correia Cabral Apolinario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동티모르에서 E-9-4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인 아폴리(Correia Cabral Apolinario)씨가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군산 개야도의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근로실태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7) 김기영 지부장과 김두영 부지부장(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임원들은 10월 26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드라마 방송스태프들의 근로환경 실태, 처우 등과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답변하였다. 같은 날 이미영 전국요양 서비스 노동조합 인천지부장, 김희경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박창준 손해사정사, 송경훈 보험설계사, 김영미 캐디마스터 등도 각 직역의 근로환경실태를 증언하였다.

(8)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위원장)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는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와 함께, 한진중공업 상황과 노사문제, 노노갈등 실상에 답변을 하였다.

(9)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 관련 여러 가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요기오)로 대표도 동시에 답변을 하였다.

(10)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은 10월 8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국에 있는 3000개의 매장 또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다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11)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0월 7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정부의 중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관련 현장의 실상을 전달하였다.

(12) 박민상 부대장 (육군 제1717부대 부대장, 육군대령)

교육위원회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등장하여 관심을 받았다. 박민상 대령은 10월 15일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군복으로 입고 참고인으로 등장하였는데, 항공부대 근처 학교의 소음 문제에 대해 학교와 부대의 협력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13) 김서정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장

김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10월 22일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성비위 문제에 대한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14) 류조은 부산국제고등학교 학생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기구에 가서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알렸던 류조은 부산국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0월 26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왔다.

류 학생은 근로기준법에 주당 최장 근로가능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동이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서 자신의 입장

을 밝혀서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15)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

2021년 연말까지 거래액 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는 10월 8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이사는 국내 앱 마켓 입장을 밝혔다.

(16) 이영희 미래대안행동여성위원장

작가 출신의 이영희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장은 10월 8일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권영세 의원의 청소년사행성도박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한판에 500만 원을 거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17) 강화현 새마을금고 은행원

화염에 휩싸인 분들을 구하는 데 항상 앞장섰던 여성 소방관 강한얼의 언니인 강화현 은행원은 10월 12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순직공무원의 재해보상 그리고 공무원 유족연금 관련한 수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을 하여 언론에 크게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18) 김영국 인천강화소방서 소방장

강철 소방관으로 언론에 알려진 김영국 소방장이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말 못 할 고충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현장이야기와 공상추정법 등 대책에 대해 답변하였다.

(19) 윤태균 이장(전 아산시 이ㆍ통장 연합회장)

윤태균 이장은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ㆍ통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 처우에 관한 것을 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은 10월 15일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일명 '팔걸이 원칙'이라고 하는 최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21) 송종만 농업인

송종만 농업인은 10월 7일 농림위의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만희 의원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한)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22) 백은기 어민

위도에서 10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백은기 어민은 10월 8일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영광 원전관련 위도 앞바다와 부안 앞바다의 피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몰라도 장관하고 한수원 사장은 와서 고개 숙여 우리 위도 면

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고 울분을 토했다.

5. 2022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 (언론보도 중심)

국정감사장이나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다.

가. GTX-C도봉구간 지상화 반대시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의 자치구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국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도봉구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GTX-C도봉구간 지상화 반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국회정문 앞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하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GTX-C도봉구간 지상화 반대 문제는 현재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GTX-C 도봉구간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인데 그 사이 주민 반대 여론을 다시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대만문제 개입 반대 시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이 10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평통사는 1인 시위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만문제 개

입 반대, 대북 선제공격과 미일방어를 위한 작전계획 수립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고발장 접수 시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였고, 2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라. 간호법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1인시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0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재개했다. 같은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국회 앞 정문 1문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간호법 재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간호사단체가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1인시위에서 나선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른 아침 1인 시위를 진행한 신경림 간협회장은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쟁 중단과 민생개혁의 시작인 간호법 제정을 국회 법사위는 즉각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1인 시위용 대형보드에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문구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지켜 달라'는 호소의 글을 담았다. 간협은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 도심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간호법 알리기에 나섰다.

≪2021년도 국정감사장 시위≫

(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국정감사 중단 시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대표단은 18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 경기도 행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18일(월),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수)에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하라", "정쟁중심 국정감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 부산시공무원노조의 침묵시위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10월 15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관장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하기 전,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 밖에 부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동료의원들도 보았을 것인데, 국회가 지방자치 단체의 국가 사무뿐 아니라 여러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것은 맞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재호 감사반장 및 간사들이 공무원 노조원을 만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서울로 불러서 했는데, 마지막날 부산과 전남은 굳이 지방에 내려가서 국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감사반장은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고,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못했는데, 마지막날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과 전남의 경우 현장 방문을 동의한 부분이 있다"며 "간사들과 논의를 통해서 각 의원들에 통보를 했는데, 설명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3) 류호정 의원의 정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시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피켓 시위를 하자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수령' 관련 피켓을 붙여 감사가 정회됐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일합시다'를 적어 즉석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4) 국회 앞 끝나지 않은 기본역량진단 관련 시위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사가 있는 날 국회 정문 앞은 위원회별 이해관계가 걸린 각종 단체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이슈가 가라않지 않은 가운데 대학평가와 관련한 교육부 성토 등 해당 대학 학생회의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등 전국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본역량진단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평가 개선과 대선 후보들의 대학지원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5) 마을예산 삭감 서울시청 앞 시위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10월 19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근거없는 시민단체 폄훼 발언과 2022년 예산 삭감 방침 등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부정하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 서울시장이 이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위탁 사업과 민관협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형 다단계', '시민단체 전용ATM'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시민사회를 비난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사업 내용이나 액수 등은 공개한 바 없다" 고 지적했다.

≪참고 : 2020년도 국정감사장 시위≫

코로나 19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어려워진 가운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장 앞에서의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형식의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1) 교육위 1반 충남대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반대 삭발 시위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

(2) 교육위 2반 경북대 국정감사에서의 전국 대학원생 노조와 비정규 교수 노조의 시위

10월 19일 경북대와 경북대 병원,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

국감장인 경북대 글로벌 플라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경북대가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정했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대학 실험실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연구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3) 교육위 2반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영남대 교수회의 시위

영남대 교수회는 최근 벌어진 영남대 총장 선출 규정안 부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둘러싼 의

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교수회는 박근혜 재단 퇴진과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영남대 새마을 박정희 사업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하는 피켓 등을 건물 주변에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4) 교육위 2반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참여연대 등의 시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센터,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이 10월 19일 국감장 앞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유해 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 폐기 합의를 거부하고 몇 달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5)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의 한국노총 공무직 차별해소 촉구 1인 시위

10월 7일 오전, 한국노총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은 오전 8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와 공무직 문제 국정감사 의제 반영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는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의 사무처 간부와 회원조합 간부가 참여했다. 한국노총이 준비한 피켓에는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 및 공무직에게 보편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6)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교육공공성 사수'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

(7) 국방부 앞 평통사의 전시전작권 환수 피켓 시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7일 오전 국방위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회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였다.

(8) 정부 자치경찰 법안 철회" 경기남부경찰 직장협 1인 시위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직협회장단)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 맞춰 도내 경찰관서 직협 대표들이 정부의 자치경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취지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직협회장단 하재구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법안은 국민과 경찰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준비하고 있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폐기하고 만들어진 졸속 법안"이라며 1인 시위에 참여한 배경을 밝혔다.

(9) 'EBS 보니하니' 최영수, 1인 시위 100일째 억울 시위

개그맨 최영수가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5월 25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EBS 사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던 최영수는 EBS 국정 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았다. 이날은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최영수는 지난해 EBS 프로그램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라이브 방송 도중 MC인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0) 부산시 국정감사장 밖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펼쳐진 시위

가덕신공항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이지후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이 25년 지역 숙원의 가덕신공항을 자발적으로 외친 것에 대해 조롱으로 치부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대표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이 지역 현안인지 인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며 “이 부분을 질의하고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가 조롱을 당했다” 고 감사위원의 발언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11) 광주시립극단 갑질 피해 배우들 광주·서울 동시 ‘릴레이 시위’

광주 시립극단 내에서 발생한 갑질 사태를 두고 예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15일 광주와 서울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책위는 시립극단 갑질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대책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청과 서울 국회의사당,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릴레이 시위를 동시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됐다.

(1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의 운영위제도 개선 촉구 시위

10월 23일 노조는 오전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서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불거진 박덕흠(무소속 국회의원) 전 전문건설협회장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6. 2022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분석

2022년도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국정감사장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가장 많은 웃음소리가 나온 곳은 10월 21일 금요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로 무려 6번이나 웃음소리가 나왔다.

웃음은 주로 위원장이 진행과 관련한 해프닝이나 질의시간과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 위원장이 실수를 하는 경우에 많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관위원회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라고 하자, 홍익표 위원장이 웃음을 지으면서 ‘야당’이겠죠라고 정정하기도 하였다.

≪2022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웃음이 터진 일부 사례≫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이 터진 상황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원택 의원 질의에 분질미로 만든 빵이 정말 맛있다고 하자
2022.10.04.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위원장이 지역구를 잘못 소개하여 이주환 의원이 정정을 요구하자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영교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해 0원이다 이라고 말할 때 발음 때문에
2022.10.04.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어린이집 폐원실태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언론을 통해 본 것 같다고 하자 송석준 의원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자
2022.10.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권명호 의원의 질의가 끝나는 데 위원장이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니 구자근 의원이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2022.10.04.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등	법정에서 노트북으로 메모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행정처장의 답변에 김남국 의원이 가져가서 해도 될까요라고 반문하자
2022.10.04.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피감기관이 알겠다고 답변을 하자 아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2022.10.05.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한정애 의원이 1분더를 요구하니 위원장이 잘못된 선례라고 하자
2022.10.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임오경 의원이 공영주차장의 영어표현이 엉망이라며 소개 하자
2022.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위원장 대리로 김한정 의원이 추가질의시간을 끌어다가 1분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한무경 간사가 간사간 합의해야지 위원장자리에 앉았다고 입장이 바뀌니 무섭다고 하자
2022.10.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변재일 의원이 23초 남았네라고 하여 윤영찬 의원이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자 박성중 위원장 대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
2022.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주철현 의원이 질의를 오래하자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양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주철현 의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위원장에게 한 말이라고 하자
2022.10.06.	법제사법	법무부 등	법무부 8층 체력관리실과 관련해서 12달 사진인데 시원하게 의문에 대해서 한번 하시라고 위원장이 말하자
2022.10.07.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약처장이 조금 길게 답변을 하자 강훈식 위원이 다른 의원들의 시간을 아끼면서 자신의시간을 안아까니냐고 하자
2022.10.07.	기획재정	한국은행	김태년 의워이 취약차주가 157만명정도 된다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지 말라고 하자
2022.10.07.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번역원장이 승정원일기 번역이 2050년에야 완역가능하다고 하자 신속을 주문하면서 위원장이 자신은 (나이 때문에) 안될 것 같고 두분 교육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이 터진 상황
			위 간사는 될 것 같다고 하자
2022.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보은 출신 박덕흠 의원이 국감장에 있는 대추가 보은 대추라고 농협회장이 하자, 맛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하자
2022.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력	박성중 의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라고 하니, 위원장이 자신은 평화주의라면서 그게 끼어들기라고 하자
2022.10.07.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황운하 의원이 질의 시간을 넘기다가 다시 1분 더 쓰겠다고 하니 이용우 의원이 미리 썼다고 하자
2022.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위원장이 YTN에서 논란의 중심에 위원장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박성중 간사지요라고 하자
2022.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촌진흥청 등	소병훈 위원장이 한농대에 대해 위원처럼 질의를 하면서 질의가 길어지자 길어진다고 뭐라고 할 것 같다고 하자
2022.10.12.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경찰청	천준호 의원이 큰 목소리로 자료 요구가 있다고 하자 다른 의원들이 놀래라고 하니
2022.10.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김예지 의원이 배리어프리 정책관련 콘진원장을 칭찬하면서 국정감사장에 칭찬받기 힘들다고 하자
2022.10.13.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유상범 의원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짧게 해 달라고 주문하니, 의원들이 짧게 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자
2022.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경찰청 등	주철현 의원이 서해피격 공무원 관련 질의를 하자 해경청장이 바다는 또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자
2022.10.13.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병철 의원이 윤한홍 의원의 (권익위원장) 지킴이 발언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자, 유감을 표면하면서 전원이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해명하자
			백혜련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 “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했다 이것은 다 합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자
2022.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림청 등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 예산과 관련해서 잘 안되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자 박덕흠 의원이 (이양수 의원)이 ‘실세예요’라고 하자
2022.10.14.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	권인숙 의원이 파김기관장에게 땁변을 빨리 하라고 하자, 유상범 의원이 저분이 말씀이 조금 늘려요 라고 하자
2022.10.14.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임이자 의원이 직장내 성폭력 범죄에 지적하면서 재임전에도 재임중에도 일어났다고 하면서 부끄럽지 않냐고 하자
2022.10.14.	기획재정위원회	대전지방국세청	이수진 의원이 중소기업대출문제를 묻자 길게 답변을 하면서 머뭇거리자 ‘ 시간 없으니까 한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이 터진 상황
			다고 하세요, 빨리.' 라고 하자
2022.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정청래위원장이 증인들이 선서후에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는데, 이미 모두 앉아 있다고 말하자
2022.10.17.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추가질의 시간과 관련하여 시간이 촉박하다며 백혜련 위원장이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자
2022.10.17.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도와 달라고 하자, 이만희 간사가 자신이 감사를 받는 것 같다고 하자
2022.10.17.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박범계 의원이 고발인이 고소를 하면 된다고 하자, 유상범 의원이 무슨 고발인이 고소를 해라고 하자
2022.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등	소병훈 위원장이 질의자인 홍문표 의원의 지역구를 잘못 말하였다면서 청양군까지 잘 살펴달라고 하자
			김승남 의원이 주먹구구해도 돼요라고 물었는데 피감기관이 예라고 답변을 하자 다시 확인해서 묻자
2022.10.18.	법제사법	서울고등검찰청 등	김남국 의원이 답변을 안들어도 된다고 하는데, 김도읍 위원장이 피감기관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자
2022.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이양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풍력발전촉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가진 수협에 빨리 답변을 하라고 하자
2022.1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등	답변자들의 발언대를 옮겨달라고 박성중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정청래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모처럼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하자
2022.10.19.	교육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등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답변을 하자 관악이 지역구인 위원장이 '관악'도 들어가야 하는데 라고 하자
2022.10.20.	정무	예금보험공사. 등	민병덕 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안하자 '여보세요' 라고 하자
2022.10.2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강훈식 위원장이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질의를 하는데 청장이 답변을 잘 하지 못하자, 강기윤 의원이 '뽑아 봤는데 횟수를 안 세어봤다'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훈수하자
2022.10.20.	법제사법	대검찰청	조정훈 의원이 특허범죄와 관련하여 직원을 1명이라고 늘려달라고 하며 이것은 민원이라고 하자
2022.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윤재갑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국공산당 축전을 보냈는데 이것을 숨겨놓고 이재명 대표 축전만 따지다고 하니 홍문표 의원이 주호영 원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이 터진 상황
			내대표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자
2022.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변재일 의원이 박찬대 의원부터 질의를 하라고 하자 박찬대 의원이 아까 했다고 하자
			추가질의시간에 윤두현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순서를 바꿨는데, 위원장이 자꾸 바꾸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2022.10.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이양수 의원이 질의를 길게하면서 1분 더 라고 하자, 소병훈 위원장이 1분 더했다고 하자
			박덕흠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신뢰하는 지 묻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뢰를 못한다고 하자
2022.10.21.	정무	국무조정실. 등	유의동 의원의 질의중에 백혜련 위원장이 피감기관에게 흥분해 말을 하자, 감사한데 질의를 해야 한다고 하자
			강병원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피감기관이 답변을 못하자, 자신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못한다고 핀단을 주자
			송석준 의원이 흥분하면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아까처럼 대신 흥분해 다랄고 주문하자.
			박재호 의원이 4급수 물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이 물을 마셨냐고 하자 피감기관이 정수된 물을 마셨다고 하자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백혜련 위원장이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송석준 의원이 위원장이 오늘 좀 흥분을 많이 하셨다고 자제해달라고 하자
			송석준 의원이 피감기관에 힘들어야 하는데라고 하자 피감기관이 곧바로 힘듭니다라고 하자
2022.10.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김학용 의원이 질의 중에 원희룡 장관이 적극검토를 한다고 하니, 피곤에서 그러는지 적극검토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2022.10.21.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박범계 의원 질의앞에 유상범 의원이 법원장들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을 하게 해달라고 하자 박범계 의원이 제 질문에 답변을 똑똑히 듣고 싶어서 그러냐고 하자
			조정훈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수가 1등을 했다고 성공사례를 전파하라고 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재판부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라고 답변하자
2022.10.21.	교육위원회	교육부	
2022.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청래 위원장이 김범수 증인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증인이 반박을 하자 논쟁을 해봤자 위원장에게 진다고 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플랫폼) 증인들에게 내년에 다시 부르면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2022.10.24.	법제사법위	감사원.법무부.대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사건영상을 트는데, 한동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이 터진 상황
	원회	법원 등	훈 장관이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않나온다며
2022.10.2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이병훈 의원이 7초 남은 질의시간을 나중에 쓰겠다고 하자
			의사진행발언 논쟁 중에 이용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하니, 임종성 의원이 싸울 때 누가 발언권을 얻어서 해 라고 하자
			위원장이 간사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하자 임종성 의원이 간사들은 합의만 하면 돼요라고 하자
2022.10.24.	정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백혜련 위원장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회의를 하면서 방망이(의사봉)를 많이 처야 한다고 푸념하자
2022.10.2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유상호 의원이 재외국정감사에서 현지 물가와 관련해서 김치도 어렵게 구해 먹었다고 하면서 웃자고 했는데 안웃네라고 하자
			윤재옥 위원장이 추가질의 신청 의원을 확인하자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등이 손을 듣자 위원장이 의장님과 부의장님 지낸 분들이 후배에게 양보를 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2022.11.02.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위원장이 추가질의 의원중 철회한 분이 2명 있다며 추가 철회할 분이 있냐고 물의니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웃음이 터진 일부 사례≫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2021.10.01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최춘식 의원이 전해철 장관에게 “책임지지 않을 개인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고 말하자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영찬 의원이 하루 사시면서 알고리즘하고 얼마나 부딪히십니까? 얼마나 접하고 사십니까라고 질의하지 임혜숙 장관이 저는 전공이 알고리즘이라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얼굴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상영하자 전혜숙 의원이 늦은 시간에 과방위가 계속되자 의원들에게 다하실 거냐고 묻자 5선의 주호영 위원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하기는 다해야지요 하자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 대리를 하고 있을 때 조승래 의원 질의에 변재일 의원이 시간엄수라고 하자, 박성중 위원장대리가 간사끼리 봐줘야 하는 것아닙니까라고 하자.
2021.10.01.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유동수 의원이 ‘유동규’ 라는 말말 들으면 감짝 놀라게 된다고 하자, 윤재옥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름을 말할 때 정확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하게 호칭을 하라고 하자 민형배 의원이 특검하자는 쪽에 범인 있다고 말하자
2021.10.01.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강득구 의원이 위원장에게 자신에게는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자 위원장이 웃음(이후에 '존경하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강득구 의원을 무색케 함)
2021.10.05.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홍성국 의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신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하자,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할 것 없다며 자신도 남양홍씨예요라고 하자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임종성 의원이 5년동안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자 한정애 장관이 5년동안 질의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을 하자
2021.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도 교섭단체별로 똑같은 수를 요구하자 심상정의원은 여러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심상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자
2021.10.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용혜인 의원이 권순일 대법관처럼 화천대유 같은 곳에 고문으로 가실 계획은 없으시지요?라고 부총리에게 묻자
2021.10.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이병훈 의원이 1분 추가신청을 하면서 원래 추가시간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라고 말하자
2021.10.05.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논리비약이라고 말하자, 권성동 의원이 특검을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하자
2021.10.06.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김성주 의원이 시간이 다되어 마이크가 중단되자 3차 질의에서 보완하겠다고 하자 강기윤 간사가 1분 더 줄게 마무리를 하라고 하자
2021.10.0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김성원 위원이 박대출 위원장에게 시간이 짜다고 하자 지난해 위원장이었던 송옥주 의원이 자신이 위원장을 잘 했죠라고 하자 강은미 의원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해 위원장이 허락하자 임종성위원이 떳떳하게 요구해야 하는 구먼이라고 넋두리를 하자 이수진 위원에게 질의시간을 더 주자 임이자 간사가 우리 위원장이라로 뽑아 놨더니 라고 푸념하자
2021.10.06.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강민국 위원이 모든 의원실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하자 윤재옥 위원장이 그것은 제 권한이라고 하자
2021.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	김승원 의원이 (예술의전당) 2021년 9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공공기관 브랜드 평판 조사를 실시했는데 2위를 하셨다고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요?라고 묻자 몰랐다는 답변을 받아 그러세요라고 하자
2021.10.08.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	김남국 의원 질의 순서 앞에서 정회를 하면서 박주민 위원장 대리가 김남국의원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방역지침때문이라고 하자 윤한홍 의원이 (대전고법원장에게) 특정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대법관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2021.10.08.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질의시간을 안지키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된 국토교통위에서 김희국 의원이 정시각에 끝나자 위원장이 김희국 위원님,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춰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김교흥 의원이 피감기관이 검토하겠다고 하자,검토는 내가 수없는 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하자
2021.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홍익표 위원의 질의 중에서 통신상태가 나빠 멈추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답변하기 싫으니까 나간 건가요?라고 하자 (홍익표 의원은 피감기관이 듣지 못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
2021.10.08.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등	권영세 의원이 피감기관에게 괜찮은지 묻자 괜찮다고 답변을 하니 괜찮으면 안된다고 하자
2021.10.08.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형동 위원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위치를 묻자 퇴장을 했다는 답변을 받아 그냥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라고 하자
2021.10.08.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강기윤 간사의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의가 들어오자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김성주 의원이 밀키트 성품을 질의하면서 김민석 위원장이 자가격리중 밀 키트가 좋았다고 했다면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한 것이라고 하자
2021.10.08.	국방위원회	육군제2작전사령부	설훈 의원이 1차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더한다고 하자 조명희 의원이 다선의원의 기득권이라고 핀잔을 하자
2021.10.12.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충청남도	이해식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위원장이 좋은 질의였는데 질의시간과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정도 더 질의를 한 것같다고 하자
2021.10.12.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아니, 그걸 저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세요. 하고 윤창현 의원이 항의하자 유동수 의원이 피감기관쪽에 했다고 변명하자
2021.10.13.	환경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박대수 의원이 1분 30초 시간을 저축해 놨다고 하자,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1분 15초인 것 같은데 라고 하자
2021.10.13.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운천 의원이 성과급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현재 사장이 아닌 전 사장이 성과급을 먹어버렸지 하자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허종식 의원이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연금고갈로 인해서 연금수급을 받다가 못받을 것이라고 하자 (이후 세대갈등이라면서 논란이 빚어짐)
2021.10.14.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김종민 위원이 의원의 질의 앞서서 정회를 한다고 하여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항의하자
2021.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최형두 의원이 오징어게임질의를 하면서 오징어게임 옷을 입은 임오경 의원과 자신이 통한다고 하자
2021.10.15.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김영진 위원장 대리가 속시원하게 말하라고 한국은행장에게 주문하면서 요즘은 속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뜨는 시대라고 하자
2021.10.15.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윤주경 의원이 (산업은행장에게) 질의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자 크게 3분을 주세요!라고 하자
2021.10.15.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경찰청	서영교 위원장이 김용판 의원의 질의를 빠뜨리고 김민철 의원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였다가 무안해 하면서 두분을 놀래켰다고 하자
2021.10.15.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김종민 의원이 (질의시간이 끝나) 권성동 의원이 빨리하고 밥먹으러 가야하는데라고 하자 법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자
2021.10.15.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기윤 위원장 대리가 김용익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재임하도록 도와주자하고 하자
2021.10.18.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윤재옥 위원장이 유동수 의원이 질의중에 위원장을 쳐다보자, 얼굴만 봐도 더줘야 할 듯 하다고 하자.
2021.1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정청래 의원이 옛 학력공사에 '더 팬 이즈 마이터 댄 더 소드(The pen is mighter than the sword)' 이런 말이 있다며, 언중위원장에게 물으면서 국어원장님께는 안 묻겠다고 하자
2021.10.19.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서영석 의원이 레베카씨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자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도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자
2021.10.2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임종성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얼굴이 굳으셨나요? 하고 묻자 장철민 의원이 한정애 장관이 너무 길게 답변을 하여 질의시간이 없다고 하자 임이자 의원이 2040계획이 어렵다고 하자 송옥주 위원이 대통령이나 시켜줘요 그러면 만들면 되지 하자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성중 의원의 디지털치료제 시연시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문정복 의원이 실명거론한 것에 대해 심상정 의원에게 사과를 하자 박성민 의원이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2021.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누리호 발사시에 TV시청을 하다가 끝까지 봐야할지 의사진행발언 중에
2021.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첫질의를 하면서 그냥해도 되나요 묻자 변재일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려고 하자
2021.10.21.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안규백 의원이 해군제독들이 퇴청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안내를 했다고 하자 성일종 간사가 양당간사를 뭘로 보느냐고 하자
2021.10.21.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 종합감사	김종민 의원이 내 앞에서만 정회한다고 푸념을 하자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유영민 비서실장이 손도보고 달도 본다고 답변하자
2021.10.27.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누가 질의중에 떠느냐고 하다가 김기현 대표가 사과를 하자 대표님이셨어요하며 무안해 하자
2021.10.2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홍기원 의원이 의원 좌석 배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카메라 사각지대라고 하자

＜참고 2020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웃음이 터진 상황＞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10. 7.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임오경 의원이 성경환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인 만큼 다시 한번 직접 앵커로 나서시면 시청률이 급 오를 것 같다고 하여
10. 7.	행정안전위의 행안부 국정감사	서영교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안받겠다고 하면서 ‘내일 추가질의’를 하라고 하자
10. 7.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전재수 의원이 추가질의를 안하는 조건으로 30초를 요구하자, 김병욱 위원장대리가 추가질의를 안한다고 확인하면서 1분을 주자
10.7.	외교통일위의 외교통일부 국정감사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의 미국 출국에 대해 말리지 않았느냐고 하자, 강경화 장관이 “이건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하자
10.7.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이 질의의원은 마스크를 벗고 하자고 하여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입이 트셨냐고 반문하자
10.7.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송옥주 위원장이 임이자 간사 질의 순서에 이낙연 이라고 잘못 호명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래 기다렸는데 윤준병 의원이 한 개 질의를 하고 말자 ‘그게 끝이냐;고 하자.
10.7.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장혜영 의원이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하자 부총리가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머뭇거리자 연구용역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냐며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세요’ 하자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10.7.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의 질의시 PPT작동이 안되자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자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이 질의시간 추가로 1년을 더 달라고 하자, 이어 해야할 박주민 의원이 1년 뒤에 질의를 할 뻔 했다고 하자 연거푸 웃음이 터짐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에게 김도읍 의원에게 질의시간을 후하게 주면서 자신에게 박하게 준다고 하자
10. 7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민석 의원이 서정숙 의원이 마이크가 커진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잘 알아들어서 계속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자.
10.7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	김철민 의원이 위원장이 석식 정회를 위해 질의 끝 순서를 정하자 오전과 같이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해경 국정감사	어기구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여야간의 해경공무원 수색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면 2분을 빼달라고 하자
10.8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이 특정 모임(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결사의 자유라며, 차별이라고 말하자.
10.8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이 다른 곳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화상증인들을 사무실에 가도록 이석조치해달라고 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김태흠 의원이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자, 기동민 의원이 기관증인 국장들이 서류를 챙겼다가 맥이 빠졌을 것 같다고 말하자.
10.8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이 질의 순서가 늦어서 앞에서 다 해서 라고 푸념하자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윤관석 위원장이 증인신문을 한 이정문 위원을 이정문 증인이라고 호칭하자
10.8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강기윤 의원이 영상국감이라 떨어져 있으니 장관이 보고 싶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질의시에 정면을 바라봐 달라고 하자 박능후 의원이 스크린을 보면서 답변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10. 8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권영세 의원이 1분 더 쓰자고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마저 당겨서 쓰라고 하자 사채 쓰는 것 같다고 푸념을 하자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이은주 의원이 1분을 더 달라고 하니, 서영교 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려 차원에서 그러라고 하자
10. 8.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박완수 의원이 경찰차벽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마지막에 10. 9. 차벽을 설치할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10. 8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황운하 의원이 대전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자, 박영선 장관이 40분이라고 반박하자
10.8.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박성중 간사가 1분 추가질의를 요청하는데, 위원장이 하지마요라고 하자 의원들끼리 연이어 논란이 벌어져 사과촉구까지 나오자 연거푸 웃음바다가 됨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박대출 의원이 방통위 직원들 추석에 고향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강경화 장관 남편 사례를 말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이 그분 외국 가도 된다고 말한 한 적이 없다고 하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희용 의원의 추가질의 시에 이원욱 위원장이 야당의원에 한해 1분사용한 것은 없던 걸로 한다고 1분룰 폐지 하자
10.8	국토교통위의 도로공사 국정감사	김은혜 의원이 질의시간이 다 되어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진선미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해 김 의원이 복받을 거라고 하자
10.12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박범계 의원이 아까 했다고 지적하니 한번 했나 실토하자
	법사위의 법무부국정감사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했다가 신청했다고 하자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이 재재보충질의를 하지않았다며,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자
10.12	과방위의 원자력위원회 국정감사	전혜숙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성의없이 답변을 했다고 문책을 요구하니, 이원욱 위원장이 여야당 간사간에 문책에 대해 논의하라고 하자.
	과방위의 원자력위원획 국정감사	조명희 의원이 위원장의 답변을 막으면서 초선이니까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10.12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배진교 의원이 은성수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위원장이 정회때마다 의원을 쫓아다녔다고 하자 왜 저만 쫓아다니냐고 하고, 위원장 대리인 성일종 의원을 성완종 위원장이라고 하여, 성일종 의원이 다 이해한다고 하자
10.12	행정안전위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구두질의 대신 서면질의를 하였다고 공개적으로 감사인사를 하니, 한정애 의원이 다음부터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하자
10.12	국토교통의 부산시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이 1분더 요구를 하자, 이헌승 위원장 대리가 거부하자, 지역구(이헌승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임)에 오셨는데, 후하게 더 달라고 읍소하자
10.12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강기윤 의원이 답변을 나중에 하라고 하고,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성주 의원이 답변하게 해주라고 끼워들자
10.13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의 질의시간 초과후 금융감독원장이 길게 답변을 하니, 성일종 위원장 대리가 ‘답변하시는 것이 느셨어요’라고 하자
10.13	산업위의 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김정호 의원이 산업단지공사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너무 흥분해 버렸네’라고 자책을 하자
10.13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	허은아 의원이 과기부 차관이 안 움직여서, 영상이 계속 멈추어 있다고 지적하자
10.13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	이원욱 위원자이 더 이상 추가 질의를 할 위원이 없는지 물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자
10.15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	윤호중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평하자, 장제원 의원이 ‘주로 공부만 하고 살았다’고 말하자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10.15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	정철래 의원이 (초등학교 숫자) 무자르듯 하지 말라고 하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저에겐 칼도 없다’고 하자
10.15	국토교통위의 철도공사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이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이석해 있자 위원장에게 ‘단디 혼내주이소’라고 말하자
10.16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박영순 의원이 대천IC까지 갈 때 거리와 소요시간을 말하자
10.16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세종시 출신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관련 질의를 하다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존경합니다.’라고 하자
10.19	외교통일위의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정감사	김태호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의지를 높여 달라고 질의하였는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이 임기가 3일 남았다고 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격려 방문을 하였는데, 의원들이 출석체크를 해달라고 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윤후덕 위원장이 김태흠 의원의 질의후 ‘김태흠 의원이 질의하니 국정감사답네’라고 평가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홍남기 부총리가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제 입장이 더 강해진다’고 하자
10.22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박성중 의원이 매일 가장 늦게 질의를 하였는데, AR기기 시연을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BTS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안보인다고 하자 연거푸 웃음이 터짐 (이원욱 위원장이 박성중 의원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에게 줄지 모르는다고 기대감을 표하자 또 웃음이터짐)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윤영찬 의원이 질의시간을 써서 ‘아까 썼나? “ 푸념하자 웃음이 터지면서 1분 30초를 더 줌
10.22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김민석 위원장이 독감백신문제로 2차관의 자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자리를 바꾸도록 하면서 ‘자리를 바꾼다고 질문을 안 드릴 껏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서영석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문제가 유출될지 몰라 추후 제공하겠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화상국감으로 원격 기관장들에게 김성주 위원장 대리가 지루하냐고 묻자, 기관장들이 예라고 답변을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이민석 위원장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의 이석을 허가하면서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실 것 아니면 가십시오’라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	김성주 의원이 k-방역을 칭찬하는 질의를 하니, 강기윤 위원장대리가 ‘대단히 정치적 발언을 하셨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	최종윤 의원이 질의중 감사 덕담을 하다가, 마지막이 아닌 줄 알고, ‘제가 마지막이 아니예요’ 하자
10.23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증인신문 때 2분 사용했다고 이헌승 위원장대리가 3분을 주니, 박성민 의원이 ‘우리 당 간사님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해서 2분을 사용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자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천준호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조응천 위원장 대리가 다른 의원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다가 천 의원이 답변을 들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놀라면서 ‘아 답변이오?’하자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10.23	과방위의 종합감사	변재일 의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 하자
	과방위의 종합감사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 답변을 하자
	과방위의 종합감사	박성중 간사가 질의를 마치자 이원욱 위원장이 이를 잘못 불러 박대출 간사님 수고했다고 하니, 박대출 의원이 '내가 수고했다고 하니까' 라고 하자
10.23	농림위의 농림축산부 종합감사	위원장이 다른 증인 신문을 해서 10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증인에게는 신문을 못하다고 하자 윤재갑 의원이 '분야가 다른데' 라며 푸념을 하자
	농림위의 농림축산부 종합감사	정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예" 라고 답변을 하자 정운천 의원이 핀잔을 주고 이개호 위원장이 '예를 쉽게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자
10.23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	위원들이 비둘기, 매, 부엉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김영호 의원이 비둘기 이야기를 하자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자꾸 비둘기로 만들지 말라' 고 하자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	송영길 위원장이 질문을 오래 받지 못했던 배석했던 피감기관 장에게 시간관계상 한 말씀 만 하라고 하자
10.23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윤후덕 위원장이 길게 질의를 하자, 고용진 의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라고 위원장 멘트를 하자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김경협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1분을 더 달라고 하자 윤후덕 위원장이 '예' 라고 반문하니, 김경협 의원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 팔로우업 하겠다고 하겠다고 부총리가 말하니, 윤후덕 위원장이 '여당 위원과 위원장 말도 좀 들어 주세요' 라고 하자
10.23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노웅래 의원이 불교관람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말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윤제용 증인이 다른 답을 하자, 임이자 의원이 '그 답이 아니 잖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라고 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기상청장과 환경청장이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자 송옥주 위원장이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윤미향 의원이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10. 26	행정안정위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경마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용산 출신이었던 진영 장관이 수익과 관련하여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안정위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박완수 의원이 질의중에 시간이 부족하여 박수영 의원에게 30초 빌려달라고 하여
10.26	농림위의 해양수산부 등 종합감사	강릉출신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동해에 있는 해양경찰서가) 강릉으로 못간 걱이 후회스럽다고 하여
10.26	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	이병훈 의원이 더 질의를 안할 것이니 30초만 달라고 하자 도종환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도 더 안할 것이라고 하자.
	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	임오경 의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자세히 말을 하니, 도종환 위원장이 위원장이 할 말을 다하셨다고 하자
10.26	환경노동위의 고용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진중공업 해직자인 김진숙 참고인이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노동부 국정감사	사장에게 머리에 뿔이 안달렸다고 하여
10.26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40초 발언을 하라고 하자, 송경훈 보험설계사 참고인이 두시 30분 기다렸다고 하자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를 하는 임이자 의원이 마지막 하는데 인센티브로 질의시간 추가요청을 하자.
10.27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전주혜 의원이 질의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자 정춘숙 위원장이 1분 준다고 하니 박하다고 하자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신동근 의원이 1분 더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위원장이 그냥 하라고 해서
10.30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위원장이 중식시간 없이 계속 질의를 하자고 하자 김성원 간사가 '정부가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냐' 라고 하자, 김성원 간사 질의 후에 김태년 위원장이 사진이 잘 나왔다고 하여
11.4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김태년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질의에 대해 수준높은 질의라고 칭찬하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준 높다 하니까 수준 안 높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이소영 의원이 길게 질의를 하고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니, 김태년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라며 피감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자

7. 국정감사 기간 동안 크게 곤욕을 치른 감사위원

가.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22년 10월 4일 제400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보면 야권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이 의심된다" 며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132명 중 106등을 했고요,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0등입니다" 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되었다.

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권성동 의원

국회의원 권성동은 2022년 10월 7일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원자력재단 감사를 위해 출석한 김제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며 직무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식공격으로 피감기관의 장을 모욕하였다는 비판을 받았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이 접수되었다.

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은 2022년 10월 4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거짓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중, 야당의 ‘거짓말 정부’ 발언은, 현재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항의하는 이만희 의원에게 ‘발언 통제’ 사과를 요구하며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어디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라고 발언을 함. 비속적인 표현인 “버르장머리”, “어디 감히”라는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동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접수되었다.

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

국회의원 주철현은 2022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전 10시 30분경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 질의하던 중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소병훈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어떻게 쓰레빠 계단에 벗어놓고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타고 가는 그런 실족사가 어디에 있냐?” 라고 사인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故 이대준씨와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후, 국회의원 주철현은 동료의원인 이양수의 질의에 대해 발언하던 중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에 도망쳐 딴 데서 딴 뺄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접수되었다.

마.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의원

국회의원 정진석은 2022년 10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는 천박한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망언을 하였고, 국회의원 정진석의 발언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역사를 조작 · 왜곡했던 식민사관 그 자체이며,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접수되었다.

마. 국방위원회 이재명 의원

국회의원 이재명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이었던 2022년 6월 1일 이전부터 2억 3천여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희망 상임위원회 조사에 1순위로 국방위원회를 제출하였고 7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방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관련 주식을 보유한 채, 국방위원회를 희망하고 배정된 것은 「대한민국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배정된 이후 국방위원회에서 개선될 것을 요청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을 의심받을 상황임에도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접수되었다.

바.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국회의원 노웅래는 2022년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피감기관장)을 향해 “김문수 위원장은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는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다. 피감기관장을 모욕한 발언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노웅래는 “김문수 위원장이 국감장에 와서 하는 태도는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본인이 국회의 품위를 실추한 것은 아니라며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접수되었다.

사.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의원

국회의원 김의겸은 2022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김의겸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제보를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했고 유투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시한 2007년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아. 감사질의 때문이 논란이 되거나 사과요구를 당한 의원

(1) 윤창현 정무위원회 의원 "질척거린다"

10월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썼다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에 자료를 요구하다가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자 "왜 이렇게 질척거리나. 좀 깔끔하게 하자"며 "발언이 그렇지 않나.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나. 깔끔하게 좀 '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이 부분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윤 의원이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나 줘버려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입씨름을 하였는데, 문 의원은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해도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해당 교수에게 사과하지 않았나” 반문하며 이에 정 의원이 “뭐라고 했나, 억지 쓰지 말라”고 발끈하자 문 의원은 “개나 줘버리라고요”라고 맞받아쳐서 논란이 되고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되었다.

(3)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탈시설’

최재형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복지보다 탈시설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감질의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최재형 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위법이고 인권침해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UN은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과 주체적 표현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설 수용을 멈추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최 의원이 장애인을 그저 사회적 격리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4) 장제원 의원의 ‘꿀단지’

장제원 의원이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꿀단지로 전락했다’며 특정단체의 명칭을 언급했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해당 단체로부터 사과요구를 받기도 했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망신 내지 곤욕을 치룬 의원≫

(1)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은 첫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동료의원들으로부터 감사위원 제척촉구를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국감 시작 첫주 토요일 사퇴기자회견을 하였고, 국정감사기간중 감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40여개 국정감사장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간 50억 퇴직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곽상도 의원의 사퇴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11일 제391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었다.

(2) 환경노동위원회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은 10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슬래그를 채취해 함량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 새만금에서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차량용 도로 건설을 위한 보조 기층 재료로 제강슬래그 50만톤이 반입되면서 환경단체와 업체가 유해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감장에서 새만금 공사 현장의 슬래그 침출수를 담고 밀봉한 유리통과 세종청사 인근 금강물이 담긴 유리통을 준비하고, 그 안에 미꾸라지와 금붕어를 넣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여주며 유해성 실험을 진행했다. 10여분이 지난 뒤 새만금 슬래그 침출수 속 어류는 껍질이 하얗게 벗겨지며 모두 폐사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윤준병 의원은 동물애호단체로부터 비난성명 등을 받았다.

(3) 문화체육관광위의 정청래 의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단은 10월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본인의 유튜브 등에서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폄하하고 사찰이 국민들을 갈취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정 의원의 부족한 역사 인식과 문화재에 대한 식견을 보여준다며, 사찰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역사 동안 가꿔 왔고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정 의원이 불교계의 노력을 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고 문화재 보존·유지 계승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4)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장 승진제도를 희화화하고 전체 교사를 모욕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5) 행정안전위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0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관련 증거로 5만 원권 돈다발 뭉치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망신 내지 곤욕을 치룬 의원≫

(1) 강훈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 보도 직후에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말할 여지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2017

년 국정감사 때도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 이원욱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한번을 더 참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의사봉을 던지면서 정회를 하여 비난을 자초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과방위의 종이없는 국감, 화상 국감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막말 파행 국감장으로 변화했다.

위원장은 11월 5일 이에 대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파행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3) 박덕흠 무소속 의원(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직전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박덕흠 의원 개인사와 관련하여서 국감 첫날부터 11월 4일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까지 관련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법사위, 운영위에서 성명이 거론되는 등 크게 망신스러웠다.

또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여 박덕흠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질문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되돌아야 가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 56인은 10월 14일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이상직 무소속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이스타항공과 관련하여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실명거론되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진공 이사장 역임시절의 일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5) 유상범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은 2020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김영호, 김경협, 김수현,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이 나오는 명단을 국정감사장 대형 화면에 자료로 공개하였다.

쇼킹한 자료여서 언론에 많이 퍼졌는데,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 중인 문서 속의 김진표는 1970년생, 박수현은 여성, 김영호 70대 노인, 이호철은 동명이인으로 민주당·청와대 관계자가 아님이 밝혀져 사실확인없이 질의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고,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의원들로부터 징계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8. 거취공방이나 수난을 당한 피감기관 내지 기관장

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0월 12일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자

신의 발언에 대해 '그런 면이 있다' 고 하여 국정감사 파행이 되어있는데, 김 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제 과거 발언과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를 드린다" 고 이같이 자세를 낮췄다.

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업무 능력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을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현희 지킴이" 라고 비판하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당하면서, "정치인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며 "정의당 당원에게 부끄럽지 않나.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다" 고 질타당하였다.

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의견충돌이 계속되었다.

오전 질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인 가운데 오후 질의에서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가 한 위원장 강제 사퇴를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했다. 이에 반해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 철학에 맞다, 아니다는 정책의 부분" 이라며 "앞서 IMF 경제 위기 당시 정책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지만 법원에서 국가 정책은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고 설명했다.

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0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 전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대통령실 수석과의 문자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0월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비서실 수석에게 관련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권유착'이라 비판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하였다.

바. '웃기고 있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11월 8일 '웃기고 있네' 메모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김은혜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했다. 반성한다"며 "다만 이 필담은 운영위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라고 피켓팅을 하였으며, 국정감사 내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박했다.

아. 박진 외교부 장관

10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본인이 과거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했던 발언을 그대로 기억해서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장을 해 주시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장관 퇴장 논란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자. 2022년도 국정감사의 인사 논란

지난해(2021)에 국정감사장에서는 캠코더 내지 낙하산 인사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인사 논란은 많이 없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대신에 알박기 인사가 거론되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만료 6개월을 남겨놓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무려 69명이나 임명을 강행했다" 라며 "고약한 알박기 인사

가 아닌가” 라고 언급했다.

(1) 중기부 산하기관장 낙하산 논란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기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직전 최창희 대표는 문재인 대선 캠프 홍보고문, 김진석 전 감사는 김태년 의원 보좌관, 유창오 현 감사는 문재인 후보 방송연설팀장” 이라며 “공영홈쇼핑이 낙하산 인사들의 서식처로 존재하는 건가” 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소진공·중진공 이사들의 과거 민주당 내 이력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사님들로 포진돼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계획인지 말해달라” 고 했다.

(2)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한전 감사위원 등

10월 1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산업위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1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자기소개서를 보면 ‘동서발전의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해당분야 경험도 전무하다’고 적혀 있다” 고 밝힌 뒤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것이다” 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한국수력원자력 최익규 상임감사를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불러내 자기소개서 표절부터 업무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참고 :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당했던 피감기관 장≫

(1) 이성윤 서울고검장

2021년 10월 14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2)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회장은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어떤 소회나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 어이없어 보이고 저걸 어떻게 환수해야 하나 개탄을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국감을 주재하던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이 회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론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오프(교환)라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 빈도가 자주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산은 컨소시엄은 화끈하게 떨어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됐는데 이것이 바로 김만배 또는 그 뒤에 숨은 정영학, 남욱 같은 친구들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산은은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3) 군인공제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천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기회비용을 포함해 4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10월 6일 합참 국감 중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방부 국정감사가 파행된 이유도 군인공제회 관련이었다고 말함)

야당 의원들이 '피땀 어린 군인 봉급 누가 앗아갔나'라는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로 1시간 만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10분 만에 정회됐다.

(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20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대해 지인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고,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 변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고 맞섰다.

전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에 비해 낮은 변호사비용이 지급됐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분(변호인단)들의 법률변호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재화"라며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로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직무 관련성은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6) 장하성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것이 10월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장 대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카드 사용처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었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6차례에 걸쳐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279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작년 국감에서 사용처와 관련 위증을 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장 대사를 포함한 고려대 교수 13명이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천69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곳이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 대사가 여종업원이 접대하고 손님이 가무를 즐기는 룸살롱에 간 것이라면서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 갔다’는 장 대사의 지난해 국감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대사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7) 김외숙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10월 26일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하던 시절인데, 작년 8월달에요 ‘김오수 당시 법무부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했다. 그 당시에 김외숙 인사수석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의성 전화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렵에 최재형 원장에게 감사위원으로 김오수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였고, 김외숙 인사수석은 ‘인사관련 사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재차 질의를 하였으며, 심야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8)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재판에 무료 변론과 관련하여 많은 질타를 받았다. 운영위원회로 새로 보임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어떤 혐의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이런 것 전혀 연락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라고 질의를 하였고, 위원장은 “연락을 받은 바는 없고요, 고발이 됐으니까 아마 혹시 피의자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하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으며, 2021년도 국가인권위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9)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10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영애 장관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참고 :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당했던 피감기관 장≫

(1)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2020년 10월 19일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윤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20년전 정대협 임원이었다는 것과 광복회장 발언과 관련해 선친 문제가 대두되어 곤혹스런 국정감사를 받았다.

(2) 장하성 주중국 대사

장하성 주중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장소가 '룸살롱'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룸살롱'을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당시에도 해당 업소는 '부적절한 장소'였다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을 갔다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를 쪼개기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자 "학교 부설 연구소장을 맡았던 기간(2016~2017년)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여 회식했다"며 "총 6차례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한번에) 40여만원이 나와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소 지원 비용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의원의 지적에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당시에도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추후 보충 질의에서 "당시에도 부적절했던 장소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올해 3월에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할 때 개학을 한 차례 더 늦추느냐 마느냐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SNS에 정규직 교직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표현)" 에 대해 공개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명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사실은 제가 '일 안 해도' 를 SNS상에 올릴 때 출근이라는 말을 조금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사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었고, 두 번이나 했지만 다시 사과한다고 하였다.

(4)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영주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 중에 "민주평통 직원의 음란물 다운·전송 관련 질의" 를 하자, 이승환 사무처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고 사과를 하였고, 공직 기강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라고 하자 다시 사과를 하였는데,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하였다.

(5)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10월 19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올랐다. 10월 26일에는 5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느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지적에 "제 이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혀 돈을 잃고 명예도 실추되었다.
십니까?

(6)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장관의 전셋집 논란은 2020년도 국정감사 중 회자된 말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전 국민이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000이 올랐다는데 잘되시길 바란다." 고 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은혜 의원이 사례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9.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은 10개 위원회 29곳 국감장

제21대 국회 3차년도에서 '낙하산' 인사 관련질의를 가 된 국정감사장은 29개 국정감사장(지난해 38회)이었다.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불공정 채용, 인사부정의 시각, 부패의 연결고리라는 측면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구권력간의 코드 인사와 알박기 인사논란도 빚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송언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10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공기업에 있는 알박기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며 질의를 하였다.

김학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제1반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도지사 당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노조에서 작성한 낙하산 인사 명단을 거론하면서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낙하산 인사논란과 관련해서 지난해 38회보다는 약간 줄어 들었고,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질의하는 의원도 한정적이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관련 조명≫

감사일자	상임위	피감기관	의원 및 요지
2022.10.0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이해식 의원(민),상록골프앤리조트 낙하산 인사취업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정희용 의원(국),, 경영평가 D등급기관에 낙하산 기관장
2022.10.04.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서범수 의원(국), LH가 대국민 신뢰가 떨어진 이유(물론 공석으로, 얼마 전 사퇴하신 김현준 사장님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유임 비상임이사 그다음에 권정순 비상임이사, 허정도 상임감사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들, 희망제작소 출신, 전임 정부하의 인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와 있습니다.)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송언석 의원(국),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공기업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 현황

감사일자	상임위	피감기관	의원 및 요지
			배준영 의원(국), 알박기 낙하산 인사와 경영능력 박대출 위원장(국), 친정부 낙하산 인사의 직무수행계획서 충격
2022.10.05.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이주환 의원(국), 대우조선해양 낙하산 의혹
2022.10.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이종배 의원(국), 자회사 낙하산 인사 문제
2022.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민), 낙하산 인사와 수의계약 문제
2022.10.0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정동만 의원(국),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가 혁신 걸림돌 김학용 의원(국), 자회사 낙하산 사장
2022.10.07.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김경협 의원(민), 통일부 낙하산 인사가 혁신 TF장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	김원이 의원(민), 기재부의 낙하산 의혹
2022.10.11.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정동만 의원(국),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 문제, 낙하산인사 문제
2022.10.12.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이채익 위원장(국), 임기제 공무원 낙하산 인사 문제
2022.10.1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등	송언석 의원(국), 이상직의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
2022.10.12.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김미애 의원(국),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낙하산, 코드인사의 전형 의혹
2022.10.13.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등	양정숙 의원(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2022.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박수영 의원(국), 공영홈쇼핑이 낙하산 인사들의 서식처 권명호 의원(국),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신영대 의원(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낙하산
2022.10.14.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이주환 의원(국), 낙하산, 코드인사
2022.10.14.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김학용 의원(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측이 작성한 이재명 낙하산 명단
2022.10.17.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종배 의원(국), 공사 캠코더 인사나 또는 공사 출신이 낙하산 박정하 의원(국), 낙하산, 친인척 전수조사 박상혁 의원(국), 낙하산 운운

감사일자	상임위	피감기관	의원 및 요지
2022.10.18.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장제원 의원(국), 낙하산 측근, 보은인사로 얼룩진 전 진사의 모습
2022.10.19.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송언석 의원(국), 조폐공사 낙하산
2022.10.20.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윤창현 의원(국), 대우조선해양 낙하산의 금지를 확약(?) 양정숙 의원(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낙하산 인사 존재 산업은행 퇴직자
2022.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박수영 의원(국), 정치 낙하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2022.10.20.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장제원 의원(국), 정실인사,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심지어는 상왕의 내리꽂기 인사
2022.10.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민), 인사 검증 없이 낙하산
2022.10.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조해진 의원(국),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 끼리의 어떤 암묵적 결탁
2022.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엄태영 의원(국), 에너지재생회사에 낙하산 투하
2022.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영식 의원(국), 한국IPTV협회 사무총장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2022.10.2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문진석 의원(민),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낙하산 명분

참고로,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 '낙하산' 인사 관련질의를 가 된 곳은 **38개 국정감사장**이었으며, 진짜 '낙하산' 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등 군수물품 밀수출 및 수입 논란이었다.

≪참고 2021년도 낙하산 인사 관련 국정감사장 및 질의의원과 그 요지≫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호영 의원: 문재인대통령이당대표시절에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를많이비판했어요,지난정권에서.그런데과기부산하47개공공기관에얼마나많은낙하산·캠코더가발령을받았는지따져보니2018년9월까지는5%에불과했는데올5월에는10.5%로무려두배나늘었어요,정권이뒤로가면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서.보셨지요?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김웅 의원 : 정말 이것은 낙하산도 아니에요. 이것은 채용비리도 아니고 채용 노략질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2021.10.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김승수 의원 : 최근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KB부동산신탁에 부회장직을 신설해서 여기에 또 김정민 씨를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앉힐 정도로 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2021.10.15.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동만 의원 :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공항이라서 낙하산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했던 사람을 공항공사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밀어넣고, 이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2021.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정동만 의원 : 국토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데도 개선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정권 말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파악된 인원만 총 64명입니다.
2021.10.05.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이영 의원 :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글로벌시티의 방화섭 대표는 전해철 현 행정안전부장관 동문이었고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송영길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낙하산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신 분이 바로 방화섭 씨입니다.
2021.10.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양향자 의원 : (연초생산안정화 재단 관련) 현금 9000만 원이고요. 사택 구입 및 운영비로도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단의 역대 이사장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 출신 퇴직자가 연이어서 선임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고요.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일준 위원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기관 낙하산하고 보은인사 근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 잘 지켜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년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 365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조어가 캠코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2021.10.0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김웅 의원 : 그러자 낙하산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인국공 김경욱 사장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 지고 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을 합니다. 예를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하다가 축구경기 지고 났더니 그냥 그 축구경기장 탓하면서 경기장을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1.10.06.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배진교 위원 : 오늘 금융위원장님은 딱 두 가지 말씀만 하십니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도대체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 중에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낙하산 문제입니다. 금융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 단체, 특히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수많은 금융권 이익단체와 공공기관에 여전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 위원장님,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무자격 낙하산으로 지적된 황현선 씨의 본부장 임명 시도, 금융위원장은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금융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임원 437명 중 관료·친정권 임원, 즉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 138명, 31.6%에 달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료·친정권 임원이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많이 분포하고요. 특히 친정권 인사는 44명 중 33명, 75%가 금융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그런 분석이 되었습니다.
2021.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박성중 의원 :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에게) '해도 너무한 원안위 낙하산, 기초용어도 모르는데 원전 안전 관리?' 이런 용어들이 그때 많이 떴습니다.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건설기술교육원	박성민 의원 : 근본적으로 역대 LH 사장님들이 LH 출신이거나 전문가가 좀 오시면 좋겠는데 늘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히려 정부 눈치만 보고 정부 입맛에 맞는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조직은 쇄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동만 의원 : 낙하산 인사도 여전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임 전 여성가족비서관, 참여연대 출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특보를 지냈던 권정순 변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2021.10.08.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김도읍 의원 : 인사혁신처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방형 직위에 낙하산 문제가 간간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지금 선발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역량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탈락했는데 재평가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탈락한 분이,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분을 결국 선발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2021.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희용 의원 : 원장님 낙하산 인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낙하산 원장님 편들기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과기부에서 감사 착수해서 우리 죄 없는 직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21.10.12.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박수영 의원: 수사를 더, 조사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의 낙하산 집합소더라고요. 명단 한번 볼까요. 전현희 위원장님 민주당, 안성욱 부위원장님 민주당, 이정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3명 중에 2명이 민주당에서 출마하셨던 분들이에요. 최은배 상임위원, 손난주 비상임위원, 임혜자 비상임위원.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을 지키는 곳인지 민주당의 낙하산 집합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안성욱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 맞습니까? 유의동 위원 : 보훈공단 최혁진 관리이사의 프로필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훈업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입니다. 보훈처 최치현 정책보좌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신데 꽤 친분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2021.10.12.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김상훈 의원 : 전임 강귀섭 사장님은 내가 늘 우려하는 공기업의 자회사에 유독 낙하산 인사가 많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던 것 같아요. 정동만 의원 :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기 지원한 3명에 대하여 면접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자들 면면 보니까 역대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들과 비교해도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한 인사가 없는 것입니까? 23일까지 추가로 공모했는데 추가 지원자 있습니까?
2021.10.12.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박홍근 위원 : 관세청장님, 제가 관세청 유관기관 낙하산 재취업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면세점협회 채용 및 회계 서류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이 협회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2021.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	권명호 의원 :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비전문가들의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회사 등	구자근 의원 : 더욱이 문제인 것은 만들어진 자회사—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자회사 임원이 전부가 낙하산 인사입니다. 각 자회사 임원 현황을 받아본 결과, 모든 회사가 100% 모회사 출신 임원이고 자회사 대표로 전부 다 임명되었습니다.
2021.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	이만희 위원 : 해수부 국감에서 해수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출신들, 총 17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10명이 넘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솔직히 말하면 해피아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그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니냐? 지난번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지요?
2021.10.13.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의동 의원 : (경인사연의 이사장)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다분히 형식화됐다는 것, 그래서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점, 이런 우려가 매우 커요. 권은희 위원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최종적인 이사회의 과반수가 정부 관료들 아닙니까, 당연직 이사들? 정부 관료들이 정부 관료 출신 낙하산을 선임해 준 겁니다. 양심도 없지, 어떻게 13대 원장 모두를 법제처를 갖다 찍어 누릅니까? 법제처 산하기관입니까, 여기가? 배진교 위원 : 먼저 정해구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부적격 낙하산 인사 시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유의동 위원 : 그런데 경인사연에 만연된 낙하산 인사의 문제, 이 정부 들어서 이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압권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경인사연이 사무총장으로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어요. 여기에도 와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2021.10.14.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이종성 위원 : 2018년 1월 임명 시부터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측근, 문 정부 실세, 이런 구설들이 있었고 임기 내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어요. 대통령이 특별히 채용할 정도면 탁월한 운영 능력을 발휘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 또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과 내지는 사퇴할 용의 있으십니까?
2021.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배현진 위원 : 원장님, 파악하신 게 뭡니까? 그냥 지금 어디……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아니라 이력을 보고 문체부에 잔뼈 굵게 죽 있으셔서 저는 금세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국감 준비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김승수 의원 : 특히 기관장이 바뀌면서 이게 초래됐던 그런 이유들이 내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장 바뀌면서부터…… 이게 또 특히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이 코드 인사를 해 가지고 조직을 이끌다 보니까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2021.10.14.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김상훈 의원 : LX 김정렬 사장님, 지금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에 예외 없이 낙하산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LX는 낙하산인사 때문에 굉장히 물의를 많이 빚었던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낙하산인사, 전 엘엑스파트너스 대표이사 하던 성 모 씨가 또 상임감사로 와 있는데 이분은 회사는 전주인데 자기가 선거 출마했던 송파에 법인카드 막 긁고 다니던 그 양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상임감사로 들어와도 되겠어요? 하여튼 김정렬 사장님, 낙하산인사로 자리 잡은 분들 관리 좀 잘하세요.
2021.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이주환 의원 : 더욱 황당한 사실은 전 대표가 스스로 면직 처리하고 퇴직금 3500만 원까지 전액 다 받아서 나간 겁니다. 참 이렇게 자질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되면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표님, 비위 조사 중에 면직이 가능합니까? 양금희 의원 : 그때 어떤 내용이 다시 댓글로 달렸느냐 하면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여기도 본부장 자리 하나 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가 꿰차고 있지롱' 하고 댓글을 달아 이슈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양금희 위원: 의원실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본부장 이상 임직원 현황을 받아 보니까 16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무려 12명의 여당 측 낙하산 인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엄태영 위원 : (공영홈쇼핑 사장님) 최창희 전 대표이사 문제입니다. 임기 시작부터 낙하산 논란,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전 대표이사는 비위 의혹으로 인해 중기부의 감사 도중 지난 1월 셀프 사임했습니다. 감사 결과 해당 대표이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리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2021.10.15.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김성원 의원: (한국폴리텍이사장에게) 이것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폴리텍대학이라고 하면 최고의 테크니션(technician)을 길러내는 대학인데 이렇게 낙하산 천지가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2021.10.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이주환 위원 : 대표이사ㆍ상무이사ㆍ상임감사ㆍ비상임이사,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현 정권에 같이 있다가 낙하산처럼, 우리가 흔히 그걸 일명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낙하산처럼 오신 분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사장님이나 대표로 비전문가가 왔다고 하면 이런 산업의 전문가는 그 밑의 사람들로 뽑아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통상적인 상식이라고 보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시장도 출마하셨고 총선에도 출마하셨지요? 그렇지요?
2021.10.18.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유의동 위원 : 이분이 청와대 행정관 지내고 12년, 17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분이랑 금융ㆍ증권거래의 관련성이 뭡니까? 2018년부터 3년 내내 케이에스드림 김남수 사장 낙하산 문제 지적 윤창현 의원 : 낙하산 문제로 좀 가 보지요. 무면허, 한유진 씨 이름도 나오고 알박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2021.1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권명호 의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셨는데 노동조합에서 공공연한 줄 대기와 정권과의 인연에 기댄 낙하산 인사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주환 위원 : 바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증빙할 필요 없는 직무수당, 회의 참석 때마다 또 수당 이렇게 챙겨 가기 때문에 이런 낙하산 코드 인사가 바로 제 식구 챙겨 주기고 또 자기들 경력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이 11곳인데요. 전략물자관리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10개 기관에서 4년간 비상임이사, 감사, 임원으로 활동한 전현직 낙하산 인사가 총 34명입니다. 이분들이 4년간 수령한 급여나 수당은 26억 원이고요. 산업단지공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또 업무 연관성도 없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 경력을 어필해서 비상임이사직을 맡아 가지고 꼬박꼬박 활동비를 챙겨 가고 회의 수당도 챙겨 가는데요. 산업단지공단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2021.10.18.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김성원 의원 ; (한국환경공단감사에게)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아시지요?
2021.10.19.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김도읍 의원 : 그리고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몇 분 전과 이야기도 하시고 낙하산 인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같으면,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제가 민주당 위원이면 적어도 아무리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2021.10.19.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윤한홍 위원 : 지금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온 양성평등센터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공석이 돼 있는 거예요. 군 내 성폭력을 해소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또 군 내 양성평등을 위해서 생긴 양성평등센터장이 지금 공석이지요?
2021.10.2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유의동 의원 : 국조실에서 유튜버라고 소개한 황희두 씨가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았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으로 또 선임이 되었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이라고 소개한 조은주 씨,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시절에 청년 대변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민간위원 임명된 이후에 최근 언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낙하산 인사 당사자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모임인 광명본부의 공동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국조실에서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라고 소개한 홍서윤 씨 민간위원 임명 당시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전국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청년특보단이고 그랬는데 민간위원 임명되고 나서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선대위 장애인특위 공동 위원장 맡았고 현재는 민주당 청년대변인으로 연일 야당 대권후보에 대한 논평을 쏟아 내고 있어요. 국조실에서 프로바둑기사라고 소개한 이다혜 씨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활동했었는데 민간위원 임명된 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여성총괄본부 영입 인사 권은희 의원 : 원장님의 정치 낙하산 이력을 더해서 보면 이제 그러한 이력들이 출연연의 연구 내용까지 오염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호영 의원 :(감사위원 7명 늘리는 것과 관련)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부 이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보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임기 마치기 전에?
2021.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엄태영 의원 : 강원랜드에 투하된 낙하산 부대, 비전문가 낙하산 그랜드슬램 엄태영 위원 : 올 한해에만 한국동서발전,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 등 다수의 산하기관에 기관장부터 감사인사까지 신진인사가 다임원이되었음(낙하산 그랜드슬램을 이뤘다고 평가) 엄태영 위원: 올 7월도 한국세라믹기술원장이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새로 취임했어요. 지난 대선캠프에서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했고 같은 창원대 교수진 출신, 새로 취임한 세라믹기술원장은 임기 시작 2주 만에 본부장급, 센터장급 총 5명 인사를 단행. 권명호 위원 : 방금 장관님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특전사 출신들 욕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건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2021.10.2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김웅 의원 : 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건에 대해서 낙하산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2021.10.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박성민 의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인사 논란이 아주 많음 이종배 의원 : 공공기관의 방만 부실 경영 원인으로 꼽히는 낙하산 코드인사도 문 정부 들어서 심화
2021.10.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장혜영 의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책은 취지가 정말로 훌륭한 정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모 기업 인사들이 고위 낙하산으로 가는 자리로 지금 전락 추경호 의원 : 국회에서 낙하산 방지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줬더니 기재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또 물고를 터 줘서 낙하산 임명이 끊이지를 않음(공공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지금 기재부장관이 임명·제청하는 공기업 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캠코더 인사라고 해서 기재부장관이 임명·제청한 감사가 총 49명 중에 81%인 38명입니다. 그리고 홍 부총리가 오신 이후에도 24명, 전체 임명 32명 중에 75%를 결국 캠코더 인사를 한 것
2021.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한무경 위원 : 중기부는 저는 예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살펴 보니 중기부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6명의 임원이 있는데 그중 절반이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로 보임
2021.10.2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이명수 의원 : 전국의 많은 이런 산하기관에 코드, 낙하산, 보은인사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는 자리에 선거 도와준 사람 앉혀 놓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Ⅳ.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일자별, 상임위별 국정감사활동 요약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월 4일 첫날의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 서해공무원 사건논란, 북한어민 북송사건, IRA 책임 논란, 전·현직 영부인 논란, 레고랜드 사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논란** 등이 쟁점이 되었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월 1일 손팻말 시위부터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까지 **대장동 게이트 관련 내용**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2020년도 국감에서는 여러 위원회에서 국감 끝 날까지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1.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활동(상임위 보도자료와 회의록을 중심으로)

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간사 기동민, 정점식) :

감사원 감사 논란으로 연일 지각/파행/장외전
감사위원 출석여부를 놓고 정작 감사원 국감은 파행, 검수완박법 논란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관련 반쪽국감 등 험난한 국정감사 전개
청담동 술집 폭로전까지 실망스런 국정감사로 마무리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매일매일 국정감사 상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감사 논란이었다. 지방법원을 제외한 전체 일정을 국

회에 잡은 것도 긍정적이다.

10월 4일(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 서면감사통지와 관련하여 감사 지연이 있었다. 감사 중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금상 수상작(윤석열차)과 관련하여 공모전을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라며 주최 측인 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한 것이 표현의 자유 제한인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있었고,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MBC 보도에 대한 고발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사건 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법관에 대한 내부 직무감사나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태도 및 법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엄중한 대처 등 법관의 책임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장 기각 사실 통보 등 성범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진지한 반성’을 형량 감경요소로 두는 양형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으로 반성문을 대필받는 등 감형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2021년 민사 사건접수부터 첫 기일까지의 소요 기간이 150일 넘게 걸리는 등 재판의 지연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개진되었다.

10월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민주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과 성남FC 고액 후원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기각 사실의 피해자 통지,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해당 범죄에 대한 제도개선과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압수수색 및 삭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 인력 및 예산의 확충과 전자발찌의 내구성 보완 등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운영상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통합인력관리 플랫폼을 통한 인력관리 등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및 임의적 감형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신중한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개진되었다.

검찰청법 개정 및 검사의 수사 개시 관련 시행령 개정의 취지, 이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 야당 관련 수사에 따른 민생범죄 수사 지연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0월 11일(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착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월북 의사 판단 변경 사유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출연 기관 임직원 다수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요구·수집된 개인정

보의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818호)의 개정 및 비공개의 적절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전 영부인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해상풍력발전·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10월 13일(목) 법제처에 대한 감사에서는「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과 행정입법 재량범위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도 계속되었다. 그 밖에, 법령안의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며,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및 기소 실적에 반해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영장 청구 기각률이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고발사주의혹 사건 및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고,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 및 오보 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개진되었다.

10월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전·대구·광주·부산 고법 및 고검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성폭력범이 감형을 위하여 반성문 작성이나 사회단체 기부 등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양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미제사건 증가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외에도, 특허소송의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 여성 법관의 법원장 보임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 · 대구 · 광주 · 부산 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견과, 검찰의 인권침해 · 별건수사 등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스타 사건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일관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내규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불법영상물이 복원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적 몰수의 법제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영상녹화제도의 활용실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압수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반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10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등 검찰수사권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고,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기간 지연에 대하여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비위행위를 행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내부적인 제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헌법연구관의 자격 요건 다양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 군사법원(국방부)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하여 구조노력이 없었던 문제와 국방부의 당초 판단 및 근거에 대한 질의 · 답변이 이어졌고, 군내 성비위 사건에 대하여 군 사법기관의 조사 미흡 · 사건 은폐 · 2차 가해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하여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발표 지연과 추후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군판사 등에 대한 평정 제도 마련 필요성에 관한 지적, 그리고 공포탄 절도사건 등과 관련하여 군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10월 18일(화) 서울·수원 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성남FC 사건,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허위이력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라임펀드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출석요구 또는 편의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수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잘못된 기소 및 항소 방지를 위해 무죄평정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청 출입기자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약 범죄 근절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감사원 파견 관련하여 해당 인사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10월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불참해 반쪽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0월 21일(금) 서울·수원 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음주운전·성범죄 등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절차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스스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참여재판을 현행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률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관련한 질의 등이 있었다.

10월 24일(월) 종합감사에서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 허위이력 사건,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심의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감사원의 광범위한 자료요구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최근 감사원의 업무수행이 조직 특성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무부에 대하여는 로스쿨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초 도입 취지를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특별검사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정당 정책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제시 여부 및 그 적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하여는 법원 전산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다.

나. 정무위원회(위원장 위원장 백혜련, 간사 김종민, 윤한홍)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쟁점화
금리인상, 경기하방 대책, 금융기업의 횡령사고 질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대북 코인' 지원 의혹 휘발성이슈로 떠올라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지난해와 달리 민간기업에 대한 증인을 많이 불러 갑질이라는 여론도 있었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집행하였으나, 소환에는 실패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기관, 권익위 등 45개 기관에 대해 11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그중 1일은 시찰을 하였다.

10월 4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다.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이스타항공 승무원·조종사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취업 청탁자로 야당 전·현직 의원들을 거론했다. 야당을 비롯해 관련자로 언급된 인물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하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양기대·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 있다며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윤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하지 않고 명백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윤리위 제소까지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금리인상 문제 가 큰 이슈였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빅테크(Big Tech) 규제 방안, 암호화폐

업권법 논의 등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고, 가계부채 문제도 주목받았다.

10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인사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고리로 대북 코인사업과 야당 간 관련 의혹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가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메일을 보면 서울시가 이더리움 재단을 북한에 설립하는 데 호의적이라는 내용 등이 있다”라며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여당 간사인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이상 외화 송금을 고리로 전임 정권 시절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외화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라며 “대북 코인이 현금화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

로 이어져서,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장이 의혹이 있으면 수사요청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10월 13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적 감사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같이 제기되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했다 이것은 다 합의된 것으로 알겠다.

기타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처리기간 단축 방안 그리고 미래세대 보훈교육과 보훈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 확대, 중대범죄자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자격유지 재검토, 유엔참전국 훈장 수여받은 참전용사의 현충원 안장 추진 등이 제기되었다.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연구기관 등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와 국책 연구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감사원의 과도한 자료 요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문제, 중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체제 개편의 필요성, 그다음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연구 논문 등의 자율성·중립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0월 17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캠코 부채 비율 관리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 캠코가 위탁받은 국유재산 사업 관련 자체적으로 매각 타당성을 검토할 필

요성,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 완화 등 수요자 시각에서의 정책 재설계 필요성, 주택 가격 기준 완화 등 주택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규모 부실 위험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사전적 관리방안 마련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0월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진행할 것,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및 소위 갑질 논란 문제,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 등에 대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하여 우량여신의 이관 등 일방적인 기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대응할 것 등등이 제기되었다.

10월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처, 하도급 위반에 대한 대책,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개선, 국민권익위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적정성 문제, 참전국 훈장 수여, 참전용사의 현충원 안장 추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10월 24일 종합감사는 오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레고랜드 사태 등 금융시장 혼란문제를 집중 검검하였다.

지난해(2021년)에 정무위원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여야의 쟁점이었다.

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간사 신동근, 류성걸)

조세정책, 세계 경기하방 대응 등 정책국감 주력
법인세 인하 정책 등 정책논란 점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레고랜드 사태 여야 대립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0월 4일부터 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총력저지로 인해 오후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제외하고는 여야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각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매일 하루치 국감내용을 국민들에게 정리공개하였다.

10월 4일(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국가의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대출금리 부담 보완 대책 강구,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다. 한편,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일부 국유재산의 매각 적정성과 매각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대통령실 등 기관 이전 및 영빈관 신축 관련 추진 경과 및 예산 규모 관련 문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및 적자 해소와의 균형점 모색 마련의 필요 등 다양한 정책의견이 개진되었다.

10월 5일(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정부가 올해 9월에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부자감세에 치중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적 추세에 맞춘 과세기준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정권 교체시마다 법인세에 대한 의견이 번복되는 정부의 입장 문제,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최근 감세 정책을 철회한 영국의 사례, 세계적 기준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필요성,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고려 필요성 등의 지적이 있었고, 미성년자 주택구입수 증가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향후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10월 7일(금)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등한 물가 대응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계이자 부담 등 서민경제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미국 등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과 국제적인 원자재, 식료품 등의 인상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정책 번복 또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실기한 영국과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행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재정정책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간 긴밀한 협조를 실시하고, 통화정책 수행 시 신뢰도 확보를 유념해야 하며, 비은행금융중개 영역의 위험을 방지할 대응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밖에 한국은행 국외사무소의 저조한 정보 수집 및 미흡한 해외출장 관리 문제의 개선, 경제학자 등 전문가를 활용한 세미나 개최 확대 등 한국은행의 업무 개선 및 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주문하였다.

10월 12일(수) 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정당한 세무조사 진행의 필요성,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필요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강압적이고 장기 세무조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세수 사각지대 적극 발굴 필요성, 체납 세금과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필요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실적 강화 필요성,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과도한 혜택으로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모범납세자 제도 폐지 또는 개선 필요성, 특정 지역에 편중한 인사와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의 저조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 밖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조사 필요성, 수도권만 지원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10월 14일(금) 지방국세청과 지역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지역본부로부터 지역경제 주요 현안보고를 청취하였다.

10월 17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적 대책 마련,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통관고유번호 도용 단속 강화, 중국인 대리구매상에 대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신규 도입 드론의 품질 문제, 관세청 전산시스템의 재해복구방안 마련,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세청 출신 인사의 특혜 및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기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주요 비축물자의 물량확보 필요성, 공공계약시 인지세의 기업 전가 문제, 대통령실 이전 계약 관련 수의계약 문제, 입찰중개업체 난립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끝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및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통계의 신뢰도 개선,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의 적절성 여부, 과거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단절 여부, 공공일자리 관련 보조 통계지표의 마련 필요, 현실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생산 필요, 여성가족부 소관 국가승인통계의 이관 문제,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관련 정확한 통계마련 필요, 인구주택총

조사 조사항목 개선 필요, 통계청 소속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10월 19일(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지원 및 해외투자, 화폐의 제조·공급, 국부펀드의 운용, 국가재정 관리시스템 운용, 원산지 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점검과 정책대안제시가 있었다.

10월 21일(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및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먼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 고환율·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공공기관 혁신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방안 모색,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강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철도 등 국민들에 필요한 정책들은 경제적 평가 외 정성적 평가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질의 및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외국인의 국채 관련 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기의 적정성, 긴급성을 이유로 시행령을 통한 정책 시행 지양 필요,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완화의 문제점, 상속세 물납 처분의 효율성 강화,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10월 24일(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태에 따른 채권시장의 자금경색 영향 고려 필요, 신용스프레드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서민물가 영향 파악과 취약계층의 직접적 생계 유지 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기후

위기대응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의 완화 필요, 안심전환대출의 요건 완화 필요, 보조금 지급 관리 강화 필요,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검토 필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환수 강화 필요, 공공기관 개선방안 재검토 필요, 원전 운영 및 고준위 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의와 함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에 대하여 고환율·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추진 여부 검토 필요, 한국조폐공사의 화폐 발행 시 ICT 활용 확대에 따른 기능 조정 필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의 통합 검초 필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기업 중심 지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지난해(2021년)에는 가상자산 과세,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공과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라.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간사 김영호, 이태규)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 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최대 쟁점
이재명 대표 논문 / 개나 줘 막말로 파행, 국가교육위원회 등 인사청문회급 국정감사,
지방교육재정문제, 학력격차, 학교 성범죄 등 정책조명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첫 주에 2일 국정감사를 하고, 2주차부터는 2개 반으로 나눠서 지방 교육청/ 국립대학교와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막말 파행 등이 있었다.

10월 4일 장관이 없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학 연구윤리 부정

문제를 방치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회피를 위한 해외출장에 나섰다며 공세를 이어나가면서 최종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 사례를 들어 교육부의 자체조사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세운 교육부를 두둔했다. 과거에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부정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0월 7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의원간 설전으로 파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9월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 의결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 시행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0월 17일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과대학교 · 과밀학급 해소 문제,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산재 인정 지원, 교직원 채용과 인사 문제 그리고 다문화 · 장애 · 한부모 가정 등 교육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 교육시설 안전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대책 문제 등에 대한 정책질

의가 있었다.

10월 17일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장의 중립성과 역사관 등 적격성에 관한 문제, 일부 위원의 교육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22년 교육과정 심의 의결의 문제 그리고 예산과 정원의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10월 19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대전환의 시기 대학위기에 대해 진단하였다. 국립대학교와 교원양성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0월 21일 종합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등의 논문 표절 의혹과 연구 윤리 문제, 평생교육 진흥 문제,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 그다음에 국교위나 국립대병원 임원 선임의 적정성 문제, 교사 부족 문제, 교육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교원 수급 대책, 특수교사 정원 부족 해소 대책, 한국사 교육과정, 초중고 학생 수업 미참여 실태조사. 도농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격차,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윤리 제도 강화 방안, 국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조사, 인문사회 분야 지원 확대 방안, 외국인 유학생 지도 · 관리 강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 및 보존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지원 방안, 감사원 감사 결과 내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인력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다.

지난해(2021년도)에는 7차례 감사를 실시했는데, 대학역량평가와 학력격차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조국 교수의 딸 조민 관련된 질의도 나왔으며,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부인 논문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간사 조승래, 박성중)

지난해엔 종이국감 자랑하더니 종이없어 정회,
MBC 비속어 보도, 피감기관장 사퇴 촉구 등
혀깨물고 죽지 막말 논란
원전, 5G, 카카오 먹통 사태 조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마다 파행위원회라고 할 정도 파행이 많은 상임위원회였는데 올해에는 많이 줄었으나, 위원장과 간사의 격한 언쟁으로 정회하기도 하였으며,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었고, 종이 없는 업무보고 때문에 일시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망 사용료 입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하는가 하면, 때로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일제히 비판했다. 나아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10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보도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많이 조명되었다. 여당은 MBC의 보도를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려는 조작 방송'이라고 규정한 반면 야당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증인을 채택해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지자고 맞섰다.

여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기관장에 대한 인식공격 발언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박 의원은 “인신공격이 아니다. 들리는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방통위법을 보면 새 정부의 통신 정책을 같이 공유하라는 개념”이라며 “끝까지 견디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종용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 흔들기는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내려와야 한다는 질문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야 한다. 이에 항의할 수 있어야 되는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한 위원장을 감쌌다.

10월 7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의당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사퇴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꼽히는 김 이사장은 재단 취임 전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10월 13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지방 MBC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양광 사업은 현재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MBC 계열사가 (태양광발전 사업에) 수십,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MBC(투자금을) 계산해보면 12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문 정부 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정부 줄서기용’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태양광 사업은 2017년 (박근

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계실 때 일”이라며 정권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 투자는 대부분 MBC가 가진 송신소 같은 유휴지에 태양열 패널을 깔아 수익을 올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7일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 KBS에 대해서는 직원의 대북 코인 관련 의혹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KBS의 반론, 공적책임을 반영한 법령 정비 필요성, 대북 라디오 방송 관련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 강릉 낙탄사고의 미흡한 보도 지적, UHD 투자계획과 실적에 대한 지적, 유튜브 콘텐츠 표절의혹, 경영진의 임기 보장 등 독립성 문제, 수신료 현실화 및 재정적 지원 필요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필요, 그리고 KBS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열린음악회 등 문제 지적, EBS에 대해서는 아동 콘텐츠 무료화 필요성, 장애인 법정 고용률 미준수 지적,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불가 판정 문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 부족 및 개선 필요, KBS와 EBS 간 UHD 송신 지원 문제 등 공영방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의견 제시가 있었다.

10월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한국연구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원 등 5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직의 성과 측정 등 성과연봉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고, 한국철도연구원의 부당해고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GIST, DGIST)에 대해서는 직원 징계처분 사유 가운데 성비위가 가장 많고, 징계 수준도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원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개선을 당부했다.

5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감사위원들은 오후 4시경

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현장을 시찰했다.

10월 19일에는 감사반을 둘로 나누어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와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에서 각각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10월21일(금) 원안위, 방통위, KBS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원전에 대한 불법 드론 공격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문제, 사용후핵연료 물질의 운송 보상 한도액의 적절한 설정 필요성,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원전 주민 보호를 위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첨부된 규제영향분석서 근거 자료 부실 문제 등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지적과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방송통신의 공공성 확립에 관련해서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의 입장 청취 필요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 개선 필요성, 카카오 ·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장애 발생 복구 매뉴얼과 손해배상 기준 강화 필요성, 카카오 등 통신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방통위의 역할 촉구, 특정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개선 검토, 홈쇼핑 연계편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주로 빅테크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앱 이용자 가로채기 현상 및 관련 시정 노력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성, 인앱결제 강제금지 이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편법적인 후속 조치의 문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비정상적 구조 문제, 유튜브 프리미엄 학생요금제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문제 지적,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외국에서 실현하는 등 조세 회피가 우려되는 글로벌 빅테크 비즈니스 구조의 문제, 국내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금제 문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담당의 위증 관련 질의와 고발에 관한 논의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다.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공공기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KAIST 등 70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와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하여 관련 기업 임원을 상대로 증인 신문도 함께 이뤄졌다. 카카오 장애 관련 증인: 최태원(SK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홍은택(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이 출석하였고, 정보통신망 관련 증인으로는 강종렬(SKT 인프라 사장), 서창석(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LG 유플러스 전무) 등이 나왔다.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해서 UPS 배터리 화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노력 필요성, 카카오의 재해복구관리지침과 재난대응 모의훈련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장애발생 복구 매뉴얼과 손해배상 기준 강화 필요성,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편중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시스템의 신속복구를 위해 서버 이중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 등 다양한 지적과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규제체계 마련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규제 도입시 국내사업자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방안 강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카카오 등 장애 관련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감사위원들은 이번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카카오의 입장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필요성, SK C&C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실의 소방청 고시 기준 충족 여부, SK C&C 데이터센터의 설계구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신문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잇달아 주문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일본포럼 참석 등을 마치고 오후 8시 30분경 국정감

사장에 출석했다. 과방위는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코리아 사장 김경훈 증인을 지난 10월 21일 방통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탈원전, 방송공정 관련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고, 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영상 국감으로 이루어졌다.

바.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간사 이재정, 김석기)

주무장관 퇴출, 비속어 상영논란으로 파행,
첫주 국감 후 외유, 북한 어민 북송 논란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경색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조명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국내에서 이틀간 국정감사를 한 후 첫 주말부터 해외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첫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와 순방중 비속어 논란 속에서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공방해 파행하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국외출장으로 외교부 소관 국정감사만 진행한 바 있다.

10월 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설전을 벌였고, 오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 영상 재생을 놓고 다시 정회를 하여 심야 국정감사를 하였다.

오전 감사에서 박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감사는 한차례 정회 후 오후 4시 9분경에 재개됐지만 여야의 신경

전은 계속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영국 BBC 방송 영상을 틀며 “전 세계에 이미 전파를 탄 공영방송의 영상을 한국 국회에서만 상영하면 안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윤석열 정부의 순방 외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여론을 보고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확실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방금 큰 영상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다 보는 국정감사에 틀어놓은 저 동영상은 외국이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0월 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 북한 핵무력 법제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슈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입장차가 현저한 것이 드러났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정당성을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타깝게 북송된 두 친구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은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도 쫓아낼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의원은 “대한민국이 흉악범의 도피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 장관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북송을 할 거면 최소한 조사라도 하고,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적 판단에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틀 정도 심문을 해서 어떻게 다 아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조두순 같은 사람도 형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산다”며 “우리 행정권이 적용 못 되는 북에 있다 내려왔으면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지, 흉악범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인권존중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들이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한국 국민이면 국민이지,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반박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주질의에 앞서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북한 핵무력 규탄 결의안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 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취지엔 동의하면서도 국방위원회와 협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반에서는 미주반・아주반・구주반 등 3개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2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이 외교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 인력부족, 환율 및 물가상승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정감사 이후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미주반 황희 위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재외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서’ 도 함께 검토하였다. 일본 대사관 등 14개 재외공관들이 총 25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중 예산지원 사항은 20건, 법률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은 5건이었다.

행정직원 처우 개선(뉴욕, 칠레)이나 임차료 인상(중국, 시드니 등) 같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은 외교통일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적극 반영하기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이재정(더불어민주당), 태영호(국민의힘))간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중남미 재단 법안의 통과(멕시코)와 브라질・페루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총영사관 ・ 문화원 및 행정부처 주재관 신설 ・ 확충(인도, 시카고, 말레이시아 등) 같은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10월 24일 종합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이 담대한 구상, 남북 대화,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교류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통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경협 위원은 미국 IRA 입법 과정 및 우리 정부의 대응 점검, 김홍걸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보는 외부의 시각, 이원욱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개선 과제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외교 정책 방향, 조정식 위원은 KOICA 글로벌연수사업 발전방안, 태영호 위원은 2022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종합감사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해(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 논란과 남북교류문제가 집중질의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재외공관 현지 국감을 2년 만에 재개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사.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간사 김병주, 신원식)

대통령실 이전, 낙탄사고, 한미일훈련 보고관련
책임추궁 및 파행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책임 공방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현장시찰까지 11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였는 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막말로 파행이 있었다.

10월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서해 공무원 피격,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국감 시작에 앞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탐지되자 여야 의원들의 미사일에 대한 질의도 집

중됐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응한 한미 조치가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을 23차례 43발 쐈고 한미는 그에 대응해 3월, 5월, 6월에 타격용 14발(우리 12발, 미국측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재배치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 처음 데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이 장관과 날카롭게 대치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가 연쇄 이동을 하게 돼 혼란과 낭비가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 며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고 추궁했고, “역사가 평가할 것” 이라며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며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방부와 합참이 구축 중인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이용해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월 6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무-2C 미사일 낙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격장 이전 문제를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꼽았고, 야당 측은 사고 후 군의 대응을 도마 위에 올리며 은폐 가능성을 조명했다.

여당에선 한미의 미사일 발사가 고성 마차진 대공 사격장 폐지로 인해 강릉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정부 정책으로 인

해 안보 불안이 야기된 것이라는 취지 주장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번에 낙탄이 발생한 현무-2C에 대해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9월엔 현무-2A형 비정상 낙탄이 있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안보 공백 공세한 적이 있었나”라고 했다.

야당 측에선 낙탄 발생 후 보고, 전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은폐 소지가 있다는 등 질타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건가”라며 현무-2 낙탄 후 에이태큼스 발사를 단행한 점에 대해 “은폐하려, 숨기려, 정상 진행됐다고 하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여야는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안보 대응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한미일 군사 연계 등 방식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일부 여당 의원은 우리의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을, 야당 측에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출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의원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우리가 이해할 수준의 사과를 하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을 우기는 상황”이라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받고 보통국가, 군사대국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하면 정식 군대로 인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며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여야당은 한미일 군사훈련 관련 국회에 늦장보고를 한 것과 깡통안보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하기도 하였다.

10월 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찬반 대립과 5·18 피해자 유골 DNA 조사결과 발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BTS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의견은 당적에 관계없이 의원들 개인마다 생

각이 달랐다. 국민의힘에선 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이 BTS 입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 의원이 BTS 입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0월 13일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3천190억원이 투입될 방사청의 대전 이전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무-2C는 10월 4일 심야에 이뤄진 한미 연합대응사격 중 비정상 비행 후 인근 공군기지 내에 추락했다. 지난 7월에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벌인 SM-2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SM-2 미사일 오작동이 빈번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미 연합 대응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신호가 끊긴 데 대해서도 후속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의 추적신호 소실 소식을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고 말햇다.

오작동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우리 측에 없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소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에이태큼스는 미제이고 밀봉돼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사청장은 오전 국감에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재직 당시 방사청 직원 문제로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 정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10월 20일 육군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관련해서 역사 · 문화 · 안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군인의 일과 가정 양립 확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주문했다. 또 군내의 마약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복

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래 육군의 전력 증강 필요, 군인의 정치적 중립 보장 문제, GOP 과학화 · 경계화와 연계된 성능개선 예산 확보 필요, 미사일 · 드론의 적극적인 전력화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사관의 충원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드론봇 전문인력 양성 및 보직기간 개선이 필요하며 현역 입영대상자의 심신장애 판정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대 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고정익 무인항공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안전확보가 필요하며 군인권 침해 관련 제도개선 및 과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등 육군본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졌다.

10월 24일(월) 종합감사에서는 오전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관련으로 오후부터 시작하였으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여야가 충돌하였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기도 하였고, 군인공제회 투자실패 문제가 크게 조명되기도 하였다.

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간사 김교흥, 이만희)

대통령실 이전, 이재명 대표 등 수사,
검수완박으로 신경전, 김건희 여사 의혹 충돌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퇴장 등 대립도 심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지난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처럼 격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여야 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10월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으로 여야가 심야까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저녁 질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찬 회동 때 '국가안보 공백이 걱정이지만, 당선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전임 대통령이 존중한 것을 이재명 대표는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속도전이 필요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행정적 실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불법이나 특혜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대선 이후 급격하고 무리하게 국민적 설득 이전에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 자체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말 바꾸기와 당초 제시했던 예산을 몇십 배 뛰어넘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검찰국장의 거취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사 조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10월 6일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먼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

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 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며 "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 여야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하고, 여야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으나 대상은 달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경찰의 수사를 지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결창청이 보완 수사 끝에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여당 위원들의 공세에 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맞섰다. 이 의혹은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광주판 권력형 성폭행' 사건으로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판'이라는 용어에 반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과거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된 질의와 함께, 박원순 시장 시절의 시정내역이 많이 질의되었고,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지연 내지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다.

10월 12일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성범죄, 마약범죄와 아동학대, 실종사건 등에 대응하는 서울경찰청의 역량 결집 필요성, 수사경찰관과 일선 경찰관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논란으로 파행을 빚기도 하였으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소득의 합리적인 개념 정립과 방향 설정 필요성,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 필요성, 체계적인 광역교통사업 추진 필요성,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 지역사랑상품권의 향후 운영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10월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4·3 사건과 특별법 그리고 배상·보상 절차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10월 24일 여야당이 민주당 당사내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을 주고 받는 가운데 감정대립이 있었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와 대선을 앞둔 가운데 공정선거관리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 간사 김윤덕, 이용호)

윤석열 열차, 전·현직 대통령 부인관련 논란,
청와대 개방과 활용 점검,
코로나19와 문화체육관광 진흥정책 조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첫 주에는 하루 국감하고 하루 시찰하였다. 문체위 역시 국정감사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국정감사 소식을 신속히 전해 주었다.

10월 5일(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

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계약 위반≫

강춘자 KLPGT 대표이사,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 디즈니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KLPGA 중계권 계약의 폐쇄적 운영, 메타버스 내 게임콘텐츠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적용 필요성, OTT의 역사 왜곡 드라마 방영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10월 7일(금) 부산 국제영화제 및 울산 전국체전 등 현장 시찰했다.

10월 11일(화) 문화재청과 9개의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원형 보존 필요성, 과다한 수의계약과 예비비 지출 문제, 문화재청 직원 지원 근무 등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대국민 약속으로서의 청와대 개방의 필요성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청와대 관리·활용 방안 마련, 관리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개방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활용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청와대 장소·촬영 관련 관리규정 위반 사례 조사 및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성곤 전 김해시장, 홍태용 현 김해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가야사복원사업 관련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10월 13일(목)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 인사평가 업무의 수기처리 등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콘텐츠 확대, 콘텐츠 제작 및 R&D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대기업의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수주 감사 필요성, 코로나19 시기 대

중음악 일자리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비정상적 티켓 발권 문제, 문체부의 지역 영화제 개최 예산 지원 필요성, 영화발전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2019년 이후 남북교류사업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정부광고 허위 게재에 대한 전수조사,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보, 신문수송비 지원 사업의 권역별 수송 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제언과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과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으로부터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국내 콘텐츠 업계와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였고,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로부터는 코로나 이후 출판 업계 현안을 이의춘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로부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웹툰·게임 등 해외 불법 한류콘텐츠 단속 강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적절성 제고 및 P2E 게임 규제완화 검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 진흥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다.

10월 14일(금) 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체육예산의 충분한 확보, 올림픽선수촌 컨디셔닝팀 모집의 수의계약 문제,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진로지원센터 확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표준 마련, 조정 승부조작 문제, 지방체육회 비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이 제기되

었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조사 및 상담 예산, 인력 충원을 통한 센터의 위상강화 필요성과 아울러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교육의무화, 종목별 지도자 출신 다양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등급분류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 다양한 출신의 스포츠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호석 국가대표 스쿼시팀 감독과 김동현 국가대표 역도팀 코치로부터 스포츠정책과학원의 국가대표 밀착지원팀의 미흡한 운영 및 역할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과학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공공체육시설의 매각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태권도진흥재단의 파견사범 처우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10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4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 공동전시 한국사 연표 왜곡, 고대유물의 미 전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박물관 전시 중인 유물에 대한 보험가입 필요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공무직의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박물관에서의 한·미정상만찬 행사 개최 적절성, 일본서기에 근거한 가야사 정립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하여서는 ‘민화전’, ‘이중섭특별전’ 등 전시행사 관련 미술계 논란, 특혜인사·갑질 논란 등 부실하고 부적절한 미

술관 운영에 대한 질의와 소장품 관리 매뉴얼 마련 및 지방 출신 예술가 참여제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는 서예박물관 아카이브사업 관련 전산장비 장기간 미활용・방치, DB 구축 미흡, 홈페이지 서비스 지연 등에 대한 지적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중요공연의 경우 리허설 공개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등을 주문하였다.

10월 19일에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기관들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전달, 문화예술 인재양성, 전통문화예술 공연 및 국제문화교류와 협력, 국어 발전과 언어생활 향상,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한국문화 홍보 업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5시간 넘어서 김윤덕 간사는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며,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공모전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아울러 진흥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계속된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먼저 문체부 및 문화재청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문화재청 직원의 근태 문제, 비영리법인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체부 산하 32개 위원회의 장애인을 포함한 인적 구성 다양화, 민원서비스 품질개선 필요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영화업계에 대한 지속적 지원, 미술관・박물관 등의 BF 인증 등 관리 미흡 및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조건 완화, 스트릿댄서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비 확보 등을 주문하며, 국악중고·전통예술중고의 비리 논란, 뉴서울CC 특별회원제 폐지 및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영상콘텐츠산업 세제 지원 필요성, OTT 플랫폼의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외주 방송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등 악성댓글 대응 방안 마련,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오류, 콘진원의 인사보수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광·체육 정책에 대해서는 요일제 휴일 도입 방안 검토, 민간 등록야영장의 불법 촬영장치 점검 필요성, 학생대회 주중대회 주말 전환 사업 문제점과 재검토 필요성, 미성년자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적극적 조치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있었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신문이 이루어졌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기영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장에 대해서는 외주방송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상업적 목적의 촬영 허가 논란, 일본서기에 근거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 문제,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 및 전기료 부담 완화,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수록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기업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산업 침체와 진흥방안에 대한 문제가 조명되었으며, 이건희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현장시찰 등도 있었다.

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간사 김승남, 이양수)

양곡관리법 처리관련 충돌, 쌀값안정 시장격리 문제,
해수부공무원 피살과 사후 수사 문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 처리 관련 여야의 격돌로 순조롭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촌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여야위원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쌀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재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국내산 쌀 소비를 증대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 해외 원조 확대 및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이 제기되었으며, 주요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쌀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 확대 및 주요 식품의 국내산 쌀 함유 확대를 주문하여, 식품기업의 국내산 쌀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을 지적하며 농업 통계의 이관 및 정확성 제고 방안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여야위원들은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며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확대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하여 농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지 않도록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전통주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농어촌 민박 불법 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농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 등 농촌·농정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기본직불금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수령실적 요건 중 '17 ~ '19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기본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10월 6일(목)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뻘짓'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크게 보도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양수산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한편,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결정된 과정, 사망 경위, 순직 인정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 HMM 매각 등 민영화 관련 문제, 해운업 재건 및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도서지역의 택배 추가부담금 관련 문제, 고래 불법 포획 문제 등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10월 7일(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이 농촌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야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농업·농촌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 등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임직원의 고 연봉 수령자가 증가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농협의 사업 이익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농산물 책임판매비율 목표 달성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면서, 쌀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과 농협에서 개발한 가공식품에 수입산 원료가 사용되는 것을 질타하며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직원들의 횡령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책 마련과 농협김치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에 김치 홍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을 함께 주문하였다.

10월 11일(화)에 농촌진흥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종자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농업 진흥 및 농산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주문하였다.

여야위원들은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식량 및 곡물 자급률 하락 문제, 종자 로열티의 수출액 대비 높은 수입액 현황 등을 지적하는 등 종자 개발 및 국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종자 전문 산업단지의 구축 등 우리 종자의 경쟁력과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낮은 성능이 우려되므로 위성 사양과 활용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서는 미경산암소 표기 도입 검토를 요청하였고,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축사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미생물 활용 등 실효적인 방안 마련 및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0월 13일(목)에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양경찰청에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와 불법 마약류 반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와 함께 4대 항만공사의 임직원수 급증, 부채비율 증가 등 경영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임직원수 급증에 따른 생산성 악화 및 부채비율 급증 등 경영지표 악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영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의 지반침하, 진해신항의 이산화질소(NO2)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급증에 따른 항만 대기오염문제를 제기하였다.

10월 14일(금)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화·연례화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실효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과학적 예찰 및 방제 강화 등을 촉구하였다.

대형 산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노후화된 산불진화 헬기의 적시 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 인력 처우개선 및 산불진화용 드론 운용 활성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불진화 헬기의 러시아산 편중 실태 및 알에치포커스(RHF)의 정비 독점과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 저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산불진화 헬기의 효과적 운용방안 수립 및 수입선 다변화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품의 위해성 우려 및 재선충병 방제포의 허술한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충 노력과 방제 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산지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산사태 초래 우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및 철저한 대상지 점검 등을 통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적정 임도 밀도 달성을 위한 임도 확충 예산 확보 및 임도 관리 인력 양성 방안, 도시숲 조성 확대, 공공수목장 확충 및 수목장 문화 활성화, 국가정원 산업 육성, 귀산촌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활성화, 임산출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전국 100대 명산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향토수종으로 가로수 식재 필요, 산림사업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목재·석재자급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회원조합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베트남 해외법인 횡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함께 지역조합의 산림사업 수행 시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및 산림조합 수목장림 분양률 제고방안, 해외조림사업 경과보고 등을 주문하였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근무기강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현장시찰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보전을 위한 금강소나무 기념식재 및 자생식물을 활용한 체험과 국립세종수목원 제반 시설을 점검하였다.

10월 17일(월)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재난재해 대처능력,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등에 대해 질의·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등 농림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마사회에 대해 불법 온라인경마와 관련한 조세포탈, 불법사이트 증가, 사이트 적발·심사의뢰 후 폐쇄기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경주마 바꿈 사고, 공익신고자 보호 미흡,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 판정 등을 지적하며 한국마사회의 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하였다.

지난 폭우 시 드러난 수리시설 노후화와 안전시설 관리 미흡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난재해 대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골프장 농업용수 제공의 단가·조건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공사가 환매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과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쌀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입쌀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에 농업소득증진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역할수행과 수급조절 능력 발휘를 촉구하고, 공공급식지원 제공 체계 개편 후 발생한 불편함과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작물 재해 조사 건수 대비 가지급 사례 저조, 대상 작물의 제한, 약관 설명 의무 소홀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재해보험 운영의 미비점을 질타하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산분야 투자계정 비중을 상향시키는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10월 18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어민 피해 예방 방안, 수협은행 여신제도의 운영 상 문제 등에 대해 질의 · 점검하고 대응이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위축 및 국민건강이 우려되므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촌·어업인 지원사업 집행률을 제고하며,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수입산 수산물 판매비중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

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식량주권 확보 방안, 쌀값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질의 · 점검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였다.

여야위원들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두고 여야간 질의가 이어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질미 산업 활성화 정책의 내실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쌀 값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쌀 시장격리를 당부하면서, 시장격리 시 쌀 품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조사료에 대해서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조사료의 국내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등 사료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월 21일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6일(해양수산부) 및 10월 13일(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2022년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 시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일시: 2022년 10월 25일 14시~18시, 장소: 농해수위 위원장실)하기로 의결하였다.

여야의원들은 비어업인의 맨손/도구 이용 레저형 해루질로 인한 어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 과도한 운항 통제로 인한 섬주민의 교통권 침해 해소 방안

등의 마련을 촉구하였고, 바다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부산신항보안공사의 경비 · 보안 업체 특혜 입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감독과 여객선 wifi 보완 등을 통한 여객선 서비스 강화 필요 기획재정부의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대처 등을 주문하였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월 20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상황대응을 하면서 쌀값과 해양쓰레기 문제가 많이 조명되었다.

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윤관석, 간사 김한정, 한무경)

전력난, 미국 인플레이션법(IRA)책임 공방,
소상공인 보호에는 한목소리 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0월 4일부터 1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30명의 메머드 위원회이니 만큼 위원들의 질의로 자정을 넘기는 등 심야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지난해 보다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정책감사를 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많이 저조하였다.

10월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내용을 포함한 IRA 입법 동향 파악에 있어 정부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IRA 개정으로 야기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이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간 중복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지적,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추진을 위해 특화단지 인프라 등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자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10월 6일(목)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화폐의 효과 및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적정 규모 논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운영상황 점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대한 차질 없는 예산 출자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예산 규모 적절성에 대한 지적,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사모펀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강구할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시범사업의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제도와 차별화하고 적극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허청의 심사·심판 정책>과 관련하여, 심사관의 업무량 과중,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특허출원인 등록제도가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한 지적,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각

부처 R&D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특허분류체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10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및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네스엔텍)을 시찰하였다.

10월 11일(화)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등 적자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한전 연계 재무제표를 근거로 재무위험기업으로 분류된 공기업들의 우량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전력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검토 등 전력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 문제 해소 노력, SMP시장에서 LNG시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 동해안 일대 민간 석탄 발전사의 발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에 따른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차질 없는 건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원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및 노후 원전의 정지 사고 발생 등 원전 안전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신재생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분산전원 사업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10월 13일(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관련 소상공인의 자부담률 인하, 임차방식 도입 및 조리

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의 확대보급 등 필요, 전통시장 청년몰의 운영률이 저조하므로 청년몰에 대한 사후관리 · 지원 강화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창업 · 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예산 및 모태펀드 출자예산 확충,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 및 공급기업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 기술보증기금의 태양광기업 보증 채권 회수실적 저조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확충 및 융자대상 확대와 같은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 필요, 공영홈쇼핑 매출실적 부진, 판매상품 방송 관련 특정업체 편중 부적절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10월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무역 · 투자 관련해서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 파악 및 초기 대응의 적절성 지적,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및 실사 지원 강화 필요,해외투자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회복을 위한 투자유인 확보 및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혁신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노후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 필요,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에너지 R&D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분야 R&D의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실증 · 확산 단계의 개발 강화 및 적시 규제 개선 지원 필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10월 18일 경주시 월성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및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산업현장을 시찰하였다.

10월 20일(목)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석유·가스 관련해서는 가스공사의 민수용 가스요금 연료비연동제 미실시에 따른 미수금 및 차입금 증가 문제, 가스공사의 LNG 화물창 기술(KC-1) 하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동해가스전 탄소저장사업 추진 시 기술력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 우려 불식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타당성, 지분구조 및 어민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관리 실태 점검 필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자원안보 차원에서 수익성 높은 해외자산 매각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카카오 SK데이터센터 UPS(무정전공급장치)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실시 등 대책 수립 필요, 강원랜드의 비(非)카지노 사업의 수익성 개선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10월 21일(금)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먼저, 무역·통상 관련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입법 동향 파악 미진 및 대통령실, 관

계 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부실 지적, 수입 급증과 무역적자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무역수지 개선 비상 대책 마련 필요, 전략물자 사전 공표 강화, 신속한 판정 이행 등 전략물자통제 절차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등 적자 해소 대책 마련 필요, 해상풍력과 관련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규제 필요,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발생 등 원전 안전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보완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산업정책 관련해서는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확대 필요,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 강화 필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0월 24일(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9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신용경색 완화 방안 마련 및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세밀한 설계를 통해 부작용 경감 필요,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및 특성화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류 등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민간차원의 투자펀드 조성규모 등을 감안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내년도 민생지원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 불공정 배차 등 시장독과점 및 횡포 문제 지적과 카카오톡 불통 사태 관련 피해보상 노력 촉구, 대·중소기업 거래불공정 및 시장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관련해서는,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

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권 연장제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특허전문회사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방안 마련 필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활성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쟁점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내지 골목상권의 상생협력방안이 핵심사안이었다. 그 외 한전 등의 방만경영이 집중 조명되었다.

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간사 강훈식, 강기윤)

복지시스템 오류 질타, 백신 등 보건정책과 마약대책,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재정난맥상,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10월 4일 장관 인사청문회 처리 후, 5일부터 복지시스템 오류, 마약, 감기약 대응, 코로나백신 부작용,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 정책을 조명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전체 8일간의 감사일정을 소화하였고, 국감은 20일 조기종료하였다. 복지위 역시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자료화하여 신속하게 공개하였다.

10월 5일(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선는 복지분야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립지원 청년에 대한 미흡한 지원 체계 보완,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전제로 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발생한 과도한 오류 및 급여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하여 책임자 규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 국민연

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인구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심야 약국 중단 및 화상투약기 관련 규제 완화의 민영화 의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국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바이오산업 육성 펀드 규모 확충의 필요성,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신건강 관련 콜센터 통합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증도를 고려한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취득 및 직무 관련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과학방역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의 연례적인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0월 6일(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복지 분야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 등 근본 대책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및 도덕적 해이 방지,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새로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 미반영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이 생명윤리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달리 비혼출산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견, 불법체류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혜, 보육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치매국가책임제 재검토 및 개편, 중소병원 근무환

경 개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미등록숙박시설에 대한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뇌전증 관련 예산 증액,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에 관한 정신건강관리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독감 유행을 대비한 감기약 수급 대책 마련, 마약 문제가 심각하여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10월 5일 감사에 이어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취득 및 직무 관련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 자료를 촉구하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재차 있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고,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백신피해국가책임제 국정과제 미이행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0월 7일(금)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우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분야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등 유통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 콜드체인 의무화로 인하여 인슐린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스킨부스터 주사 성분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 필요성,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물티슈 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 필요성, 가정내 폐 향정신성 의약품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여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국가의 마약중독 재활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신종마약류 유입에 대한 신속한 대

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식품 분야에 대하여는, 인공감미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가정용 간편식(밀키트), 배달음식 등의 안전관리 강화,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초기 차단 방안 마련, 비건시장의 성장을 고려한 비건의 정의와 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유전독성물질(THB) 위해성 논란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무허가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유통된 문제에 대한 지적 및 관리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0월 11일(화)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연금개혁, 급여 및 복지사업 분야에 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등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10월 12일(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국립중앙의료원·한국공공조직은행 등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하여는 기증된 인체조직의 부실 관리 실태에 관한 지적 및 임직원들의 근태 문제 등 조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는 원료혈장 가격 인상 미조치로 인한 대한적십자사의 손해 발생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대한결핵협회에 대하여는 팬데믹 이후 결핵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는 기피 전공과목인 산부인과 의료분쟁에 대한 보상금 상향 방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하여는 환자안전법상 규정

되어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관리 강화 필요성,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하여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집행상 문제 해소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10월 13일(목)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 지급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 사무장병원 급여환수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직원 횡령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므로 2010년 횡령사건 당시와 차별화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금급여 지급 업무의 청구・승인・지급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10월 20일(목)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진행과 더불어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선 복지분야에 대하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및 인력 확충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 필요성,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및 규모 확대 필요성, 어린이집 확충 및 인건비 지원 필요성, 장애인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오류 문제,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직접투자

에 대한 ESG 투자기준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건분야에 대하여는 필수의료 과목의 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등 필수의료 대책 마련 필요성,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삭감의 부적절에 대한 지적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반영 필요성,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의료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 기준 정비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된 과거 자료 파기에 관한 자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실태 파악 필요성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성능 개선 필요성, SPC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무리한 공장 가동으로 인한 위생 문제에 대한 조사 실시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주식 보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질병청장 및 담당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하였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 필요성,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필요성 검토 및 방역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와 그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 정립 등이 많이 등장했고, 백신 부작용 문제가 조명되었다.

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간사 김영진, 임이자)

대우해양조선사태 노란봉투법안, 기후변화 대책 등 쟁점
수령께 충성 파행, 피감기관 퇴장요구
건설회사 노동환경과 SPL 제빵공장 끼임사고 조명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9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하루 시

찰을 하였다. 첫날과 둘째날 모두 세종시에서 진행하였고, 경사노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의원간의 충돌로 파행하기도 하였다.

10월 4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전문위원 43명 가운데 25명을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던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성이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전문·기획위 전문위원 다수를 추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전 정부가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 라면서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4대강은 거의 매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돼왔다. 낙동강엔 6월 중순부터 조류경보(경계)가 내려져 지난달 초까지 남부지방 가뭄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 개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면서 "녹조 독소가 물·공기·농산물·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 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은 4대강 녹조 심화와 보 개방 문제 그리고 K-텍소노미 기준 적정성과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문제,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대한 개선대책,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미흡 및 소비자 전가 문제 그리고 한일현대시멘트,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스타벅스 캐리백 발암물질 관련 건강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부실 문제, 그 밖에 유역물관리기본계획 미수립 관련 법령 위반 문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관련 모니터링 문제, 주방 오물분쇄기 허용의 불법성 여부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와 지적을 하였다.

10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 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지난 정부 당시 MBC, KBS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이날 국감 막판에는 이 장관이 임이자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10월 31일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발언해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이 발언이 MBC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해석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의 확인에 나섰고, 이 장관은 해명하느라 고생을 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과 대우조선해양의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문제, MBC 부당노동행위 문제와 파리크라상의 사회적 합의안 이행 여부,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쿠팡 업무감독 및 작업장 환경개선 문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문제, 그 밖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 필요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 관측망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청이 2017년 도입한 기상관측용 항공기가 고장이 나서 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출동하지 못한 사실을 공개했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관측선 2호기’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청의 도로 기상관측소가 6곳으로, 2천500곳인 미국이나 1천 곳인 일본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25년까지 26개 고속도로에 500개 관측소 설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예보관 노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세 차례 중지되는 등 파행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김 위원장은 국감 도중 퇴장당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

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등 극우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져 성토의 장이 됐고, 이때만 해도 김 위원장은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달라”고 했으나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이 ’윤건영은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고 묻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정오께 이날 국감 중 첫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저녁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대답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감이 재개된 뒤 전 위원장은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었다”라며 “국감에 방해된다고 판단해 김 위원장에 대해 퇴장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고성으로 항의하다 국감장을 떠나기도 했다.

의원들은 재심사청구 처리 지연과 심사관 전문성 문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문제, 방송 제작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문제, 포스코 협력사 ㈜포운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문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였다.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보 개방 연구용역과 내부 기강 문제, 용산공원 토양 오염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문제, 댐 주변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 층간소음 신고 처리 미흡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문제, 그 밖에 주방 오물분쇄기의 불법성,

소각장 입지 선정, 국립공원 내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훼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0월 21일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 낙동강 녹조 방지 및 수질관리 대책,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관련 법 위반 여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과 K-택소노미 기준 적정성 문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불법매립과 의류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철새서식지 보호 대책과 야생동물의 불법사용 및 판매 문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표준용기와 재활용 가능 빨대 사용 필요성, 기상특보통보체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SPC그룹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 사고 관련 안전관리 미비 문제, 더케이 호텔 영업 종료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으며 그 밖에 일본 덴소그룹의 한국와이퍼 고의 청산 의혹 문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후 사후관리 문제, 고용노동부 지원금 사업의 성과 미비와 부정수급 관리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로 되었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관련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과 탄소중립문제가 크게 조명되었다.

하.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간사 최인호, 김정재)

집값, 낙하산 인사, 산하기관의 부정 비리,
감사원 자료제출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국

토교통부 등 31개 소관 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파행하였으나,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 논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평온하게 감사가 진행되었다.

10월 4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위원들은 공공주택의 공급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이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사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과 질 제고 및 시설 개선”등과 관련한 지적이었다.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재취업이나 친인척 특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혁신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관련 저가입찰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건설현장 사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임대료 체납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되는 입주민에 대한 대책과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공공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및 지역적 편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0월 6일(목)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초광역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통분야에서는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민자도로

관리 강화, 심야택시난 해소, 도로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구역의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미진하므로 투자 유치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 정익희 HDC현대 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합리적 개선,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현장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10월 7일(금)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 통행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휴게소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졸음쉼터 확충과 도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리콜 시정률을 제고하고, 자체수입원 개발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수납원 처우 개선과 내부 복무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11일(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및 코레일 자회사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열차 탑승 내역의 자료제출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통합 운영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철도의 정시성 확보 필요성과 고속철도차량 시장 교란 방지 방안, 국내 관련 산업 보호 방안 등 시장구조와 관련한 지적이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는 신안산선 대심도 공사비 비용의 재추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터널의 방재시설 보완 및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에스알에 대해서는 철도교통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개선과 악성 환불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12일(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재건축 · 재개발 관련 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및 보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보증료 할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는 민간과의 업무 영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드론맵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연되었던 여래휴양단지사업이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0월 21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출석요구할 일반증인으로 9월 28일 채택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출석요구는 철회하였고, 일반증인 4명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10월 14일 지방 1반은 경기도(경기도청 회의실), 지방 2반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 대한 감사를 대한 실시하였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과 관련하여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도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주거빈곤 형태를 고려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재개에 관한 질의 등 수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반지하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간 의견 대립을 고려하여 대체매립지 확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였다.

또한, 신당역 서울교통공사 직원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개인정보 보안과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직원 채용·보수 관련 규정,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17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및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국정감사 중에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증인을 추가 채택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임원 성과급 과다지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에 대한 출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분쟁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조류 충돌문제 및 악성민원인의 협박성 게시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임직원 채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는 직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박물관의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0월 21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출석요구할 일반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추가된 일반 증인은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로 지난 주말 카카오 택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및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종합감사(10. 21.)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10월 19일(수) 경기도 화성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과 드론자격시험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10월 21일(금)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였다.

오전 10시에 지난 10월 12일 출석을 요구한 정수일(구룡디앤씨 대표) 증

인이 불출석을 통보해왔으나, 불출석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10월 21일(금)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증인이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의결을 하였다.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 제기한 주요 현안과 소관 기관들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한편,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교통분야에서는 감사원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의 자료제출 건에 관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에 대한 주요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카카오T 통신장애로 인한 택시기사 등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위법 · 부당한 업무 집행이 없었는지 신문을 실시하였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게이트 정쟁이 이어졌다.

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간사 진성준, 송언석)

이태원 참사 용어논란, ‘웃기고 있네’ 메모 파문으로 파행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국회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인권위 국감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의 진정 사건과 북한 인권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되었다.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 응급환자 발생 대비 훈련 및 대응체계 마련, 보좌직원, 인턴, 공무직 근로자, 국회방송 프리랜서 등의 처우개선, 미래연구원 혁신 필요성,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내실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위헌 심사 강화, 현장감사 등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 필요성, 의원회관 출입 보안 등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국회도서관에 전자책 납본 제도의 도입을 당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등 쟁점사항에 대한 균형있는 분석을 요구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에는 탈원전과 한전 적자 관련 조사회답에 관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운영위는 11월 3일로 예정됐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태원 참사 수습을 고려해 11월 8일로 연기했다.

11월 8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인 및 진상의 조속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보고·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문제, 대통령실의 대응 조치, 안전관리메뉴얼 및 재난안전통신망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선물 받은 풍산개의 위탁 관리와 관련한 질의, 채권시장 자금경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질의,「중대재해처벌법」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함박도 관할권과 관련한 질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의, 북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운용과 대통령 관저 기동대 배치 등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쓴 모습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다섯 글자의 글씨가 큰 논란이 됐다.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두 수석은 회의장에서 퇴장당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결국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정회했다가 오후 8시 30분경 두 수석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다음 속개됐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근조리본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무료변론 문제가 집중되었다.

너.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 간사 유정주, 정경희),

장관 퇴장 논란으로 의사진행
여성가족부 기능 이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중 소극적인 정보공개 지적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마약 예방 종합 대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장(본관 550호)에서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알려진 여성가족부 기능 이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소극적인 정보 공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부족, 의견 수렴 절차의 형식적인 진행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양성평등가족본부로 변경되는 개편안에 대하여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 현재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확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 당초 대통령 공약인 부처 신설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젠더 갈등 심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응, 기존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유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 키즈 존 확산 추세 등 출산 가정 차별 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파악, 양육비 이행관리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노력, 양육비 이행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신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해 태풍·

폭염·장마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공정률 제고, 마약류 의약품의 손쉬운 구매 환경 개선,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마약 예방 종합 대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외에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의 지속적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지원기관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27일 오전 10시 서대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지난해(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쟁점이었다.

2. 일자별 국정감사 활동(모니터 보고, 언론보도 중심)

가. 10월 4일(화) :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북한의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소식 속
윤정부 첫 국감, 제21대 국회 세번째 국감, 외교부 국감 파행으로 시작
버르장머리, 책상치기도 발생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등을 둘러싸고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 놓아 맞불작전을 펼쳤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법제사법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외교통일위) 등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

했다. 법사위는 야당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 지연 개의했고, 외통위는 팽팽한 여야 신경전 끝에 30분여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전(前) 정권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 정부가 패소한 '론스타 사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교육위), 매년 의무적으로 쌀 생산물량을 격리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에서도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진 국감장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즉각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지칭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며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 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말씀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 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도 "언제부터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 며 "이만희 간사의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다. 사과하셔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

금” 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으며 이후 두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나. 10월 5일(수) : 기재위 등 5개 상임위원회

5개 상임위 달랑 국정감사, 보복위와 문체위 국감 첫 시작 국정감사
부자감세 · 노란봉투법 · 윤석열차' 쟁점
행안위, 국감 재개 10여 분만 정회...'이재명 먹튀 방지법' 설전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대립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먹튀 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당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 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

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야당은 ‘대기업 편향’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다. 10월 6일(목) : 정무위 등 9개 상임위원회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법원 여당 비대위 인정 속
법무부(검수완박), 방통위원회(비속어방송) 국정감사 시작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 법원의 집권여당(국민의힘) 비대위체제 인정결정 속에서 3일차 국정감사 진행되었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극한 대립이 있었다.

과방위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여야 충돌이 있었다.

국방위에서는 10월 5일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군 당국 질책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여야가 대립 중인 현안을 놓고 공방했다.

정무위에서는 론 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시기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론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여야는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수사 등 검찰과 감사원의 사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전임 정부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에 정권 차원의 명백한 보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 10월 7일(금) :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법사위 파행 장외 공방, 개소리·혀깨물고 죽지 등 막말 속 '이재명·김건희 수사', '북송사건' 놓고 격돌 권영세 “북 7차 핵실험 땐 9·19 합의 파기?” 묻자 “최악 상황선 검토” ‘광주판 성폭행’ 발언에 행안위 국감 ‘발칵’ …여야 간 고성 국수본부장 "성남FC 후원금 50억에 대가성 있다는 진술 확보" 교육위의 국가교육좇 국감은 17일로(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10월 7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강제북송사건’ 등을 두고 대립했다.

국정감사가 없는 법사위는 10월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간 국정감사에서 불참해 파행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놓고 여야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책임공방을 벌였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위는 현지에서 감사를 하였지만 인터넷 의사중계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 중립성 공방이 일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야

당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처분’을 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민주당은 경찰의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 대표 장남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에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었다.

이외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쟁점이었다.

외교통일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에서 ‘북한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두고 공방이 전개되었다. 특히 검찰에서 이와 관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를 연이어 수사하는 등 쟁점이 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질의도 많았다.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한국은행이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197억 달러가량 시중에 매도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한은의 입장표명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해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김제남 원자력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환노위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링센터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예보정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에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직원들의 횡령과 부적격 자금대출, 개인정보유출 등이 쟁점이 되었다.

국방위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는데, BTS병역논란이 이슈화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국가범죄 시효폐지도 크게 조명되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감에서는 백경련 질병청장의 주식 문제와 최근 수사중인 마스크 로비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교육위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증인 논란이 계속되었다. 의원간 '개나줘라' 식 막말로 파행하기도 하였다.

마. 10월 11일(화) :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보좌진 갑질 보도, 이재명 '친일국방발언' 에 대한 논란 속
가상화폐 '이더리움' 대북지원 논란과 감사원 감사 정쟁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가 오후부터 국감 시작

국회는 대체휴일인 월요일이 지나고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 갔다. 여야간 정쟁이 첨예한 가운데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었다.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에 대해 '대통령실 하명 의혹'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조사'를 내세워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문제 삼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의 '회전문 인사'

를 내세워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이 유 사무총장의 문자를 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었는데 파행을 하다가 오후 감사위원 출석 하에 감사가 진행되었다.

정무위원회는 5대 은행장(NH농협・하나・신한・우리・KB국민)을 증인으로 불러 은행 내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기금 운용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는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을 벌였고, 낙하산 논란 인사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4대강보 개방에 따른 피해와 농어민 배상, 청와대 활용방안 및 관리주체, 디지털 포용정책 등이 쟁점이 되어야 여야 공방이 있었다.

바. 10월 12일(수) :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원회

오세훈 "'대북 코인' 연루 의혹, 문제 시 수사 요청"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이준석 수사・신당역 대처 등' 도마

10월 12일 국회는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대북코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세청의 MBC세무조사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맞섰다.

기재위에서는 감사원의 자료요청, 국세청의 MBC, YTN 세무조사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라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구속되고 나서 쌍방울 김모 회장, 아태교류협회 안모 대표, 이재명 대표의 석연치 않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 라며 “아태협 지출 내역을 보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용처도 빈번하게 누락돼 있다” 고 지적했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코인’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대북코인’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7월 미국 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강현정) 크립토서울 대표가 지난 2018년 6월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 이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 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TBS 지원 중단과 관련해 질의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TBS 폐지 또는 지원 중단에 대한 서울시장의 소신과 의견을 밝혀달라” 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사실이다. 특정 정당,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며 “시의회는 TBS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영호남 국립대와 교육청을 상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 10월 13일 :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

12일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 속 국민의힘, '보수 심장' 대구서 첫 현장 비대위 개최 보도
여야, 文표적감사 논란 · 김건희 의혹 · 전현희 사퇴 · MBC 편향성 논란
與 "MBC 사장 · 방문진 이사 전원, 대국민 사과 · 사퇴 촉구"
박홍근 "공수처 수사 이전에 최재해 · 유병호 자진사퇴해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검수원복 시행령이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박성제 MBC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해경을 상대로 당시 위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 과장과 윤 대통령의 사적 인연을 들며 해경이 수사 종료 및 월북 판단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며 안건조장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회의 불참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양측의 고성이 오가자 소병훈 위원장은 오전 한 차례 정회를 선포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등판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여야의 공방을 피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전 위원장을 거취를 놓고 각각 '사퇴'와 '표적감사'를 내세우며 맞붙었다.

아. 10월 14일(금) :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김문수 고발…여 "사상 자유"
야 "국회 모욕" 충돌로 환노위 파행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중간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정감사 점수는 D 학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 속에 파행을 겪었다.

10월 14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야당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환노위 차

원 고발을 요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 고발 관련 여야 간사 협의 경과를 문의하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을 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도 강요할 수 없다.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원청에 대단히 관대하고 하청·재하청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사. 10월 17일(월) : 환경노동위 등 10개 위원회

'카카오 먹통 사태' 과방위 국감 증인에 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채택
KBS 사장, 자사 간부 '대북코인' 보유 논란에 "감사 진행 중"
다수의 횡포 등 고발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3주차에 접어든 10월 17일 “국감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 은폐,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남은 국감 기간 문재인 정부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서 과방위는 플랫폼기업 총수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민주당은 10월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 고발 건 의사일정 추가와

의결을 기립 표결로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다수결이면 되는 건가” 라고 강하게 반발하다가 전원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을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 요청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의사일정 추가와 의결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5인은 의사일정 추가에는 반대 표결했고, 의결에는 전원 퇴장해 기권했다.

차. 10월 18일(화) : 행정안전위 등 9개 상임위원회

팬덤 정쟁 가속화, 김정은 최고 존엄 발언으로 파행까지

국회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행안위는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파행도 하고, 고성도 오갔고, 집단퇴장도 하였다.

행안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두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이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반장의 편파진행에 항의한다면서 퇴장하기도 하였다.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했다. 군사법원에서 기동민 의원이 김정은 최고존엄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으로 파행이 되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횡령・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관한 공방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에서는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되었다. 유투브로 생중계되었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차’ 논란 등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되었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산업업체와 육군종합정비창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시찰을 하였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멕시코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체코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카. 10월 19일 : 교육위 등 7개 상임위원회

연이은 북한 포 사격에 연평도 긴장.."2시간 동안 포성"
검찰의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과 '유동규 뒷돈' 혐의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 소식 속 민주 "檢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국정감사 중단”

북한이 어제 오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9 · 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NLL 해상 완충구역에 연이어 포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19일 낮 12시 30분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포탄들은 9 · 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10월 18일 밤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한 시간 뒤인 저녁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또 10월 14일에는 오전 1시 20분과 오후 5시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560발 넘는 포격을 벌였다.

국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별

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서울대 감사에서는 직위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 수령과 조민씨의 대학원 학적 등 조 전 장관 관련 논란을 비롯해 입학전형 공정성 논란, 대학 내 연구부정 및 비위 행위 등이 다루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을 감사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감소와 저출생 문제, 저소득층 지원,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감사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출입은행과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월성 원전을 현장시찰하며 우주·항공 정책 및 원자력 발전 현장을 점검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소백산 기상대,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대한 현장 시찰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실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감사진행 중이었던 4개 상임위원회는 5시경에 감사를 중단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앞에 집결하여 검찰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타. 10월 20일(목) :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원회

민주, 의총 열어 檢압수수색 대응책 논의…국감 보이콧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의총에서 참여결정, 법사위는 불참 법사위 파행 현장 '뭐가 구려서'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죄를 안지었다고 확인하든지' 산자중기,부패척결 민생국감 손팻발, 檢 사정 드라이브에 정국 급랭…국감 파행 · 연말 정기국회 암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합몰된 국정감사장 설훈 "이런 사태 예견…이재명 당 대표 출마 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례 · 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월 19일 오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면서 당사 진입을 가로막는 데 대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최대 화약고가 되어 결국 반쪽 국감으로 조기 종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고,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방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을 감사했다. 다행히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압수수색 대응 방안과 '국감 보이콧' 여부를 논의한 결과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파. 10월 21일(금) :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민주 이재명 대표, 오전 11시 특별 기자회견…檢수사 관련 대장동 특검제안,
불법 대선자금 8억 의혹' 李측근 김용 구속심문 시작
제주까지 가서 싸운 행안위, 대부분 상임위 종합 국감, 카카오 화재 질타

국회는 10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했다.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대상 국정감사가 여야의 최대 격전장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목이 쏠린 재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여야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 결정을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10월 20일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보이콧을 이어 가지는 않았다. 여야당이 모두 참여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사

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교육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했다. 공정위 국감에선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가, 권익위 국감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 문제가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이 쟁점이 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감을 했는데, 경기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파행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했다.

하. 10월 24일 :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

10. 24. 국제연합(UN) 창립일 軍, NLL침범 北상선에 경고사격…北 "南함정에 10발 위협사격" 속 민주당, 檢 당사 압색에 `국감 중단` 선언…긴급 의총 개최 "오후 복귀" 법사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공방 국방위, 서해 공무원 피격 책임문제로 갑론을박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고, 결과 국정감사는 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부터 국정감사가 정상화되었다.

10월 24일 과방위 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박성하 SK C&C 대표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과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에 카카오 사태와 관련

한 책임을 추궁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포럼 참석과 부산엑스포 유치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저녁 늦게 출석했다.

국방위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 도발과 함께, 오늘 새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것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최대 화약고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상황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원장 등이 구속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 정당한 감사'라고 맞섰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환노위가 민주당 주도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위증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여야를 망라한 질타가 있었다. 강동석 SPL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등이 카카오 사태 관련 증인신문을 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야당

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 공사 등을 쟁점화되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확산과 금융시장 불안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재현되었다. 여당은 최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전 정부 책임을 추궁하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해외 순방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반격했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방무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 지속 여부,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실패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이 국감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Ⅴ.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2022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2022년도 국감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원회	17개 상임위원회	제20대 국회 3차년도(2018년) 국정감사부터
감사위원	298인	국무위원 겸임(박진, 권영세, 추경호)의원, 수감의원(정찬민) 국감 못함 사실상 294명
피감기관	783개 (역대 2위 최대)	제20대 국회 4차년도(2019년) 788개 후 최다
감사일수	145일(계획 146일)	현장시찰까지 포함한 일수
감사기간	21일	지난해(2021)와 같은 21일 / 겸임위는 별도 진행

1. 2022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 --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2022. 10. 4. 국무조정실 등 국감 개시발언에서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022. 9. 1. 제4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를 통해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동안 헌법 제47조제1항 및「국회법」 제4조에 따라 집회되는 정기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및 국정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률안 등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어 같은 날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

장)[2] '이 4번째 의안으로 의결되었다.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2022. 10. 4.(화)부터 10. 24.(월)까지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 실시하기로 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11월 3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감사를 하기로 하였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10월 29일 뜻하지 않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11월 3일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11월 8일 연기 실시하였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298명

감사위원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외교통일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방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기획재정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외교통일위) 등 **298명**이었으나, 국무위원을 겸임한 **박진** 외교투부장관(기획재정), **권영세** 통일부장관(국토교통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명 등은 국정감사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중인 정찬민 의원(환경노동위)도 한 번도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각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원보다 1명 준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으로 가장 적었다.(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찬민 의원 때문에 15명이 감사를 하였음)

---

2) **제안이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에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임.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은 169명(2021년도 169명, 2020년도 174명)으로 전체감사위원의 56.71%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15명(2021년도 103명, 2020년도 103명)으로 38.59%였다(국민의당과 통합으로 의원수 늘어남),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 무소속(6명) 등 비교섭은 14명(2021년도 23명, 2020년도 22명)으로 4.69%(무소속 국회의장 제외)였다.

국정감사 중 사보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대장동' 사건 관련 여야 당의 전략적 사·보임이었다. 2022년도에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이 사·보임하는데 그쳤다.

≪참고 2021년도 국회의원 사·보임 현황 (10월 18일과 19일 국정감사)≫

정당	위원회	사임	보임	기준 연월일
더불어민주당	정무	민형배	한정애	2021-10-18
	교육	박찬대	이형석	2021-10-18
	행정안전	이형석	박찬대	2021-10-18
	행정안전	한정애	민형배	2021-10-18
국민의힘	정무	박수영	김기현	2021-10-18
	외교통일	김기현	이명수	2021-10-18
	행정안전	이명수	박수영	2021-10-18
더불어민주당	정무	한정애	민형배	2021-10-20
	교육	이형석	박찬대	2021-10-20
	행정안전	민형배	한정애	2021-10-20
	행정안전	박찬대	이형석	2021-10-20
국민의힘	정무	김기현	박수영	2021-10-20
	외교통일	이명수	김기현	2021-10-20
	행정안전	박수영	이명수	2021-10-20

3.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2021년도 745개)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2022년 9월 27일 제40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56개 기관에 대한 본회의 의결대

상기관이 확정되어 총 783개 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14개 기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개 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개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7개 기관), 교육위원회(6개 기관), 보건복지위원회(5개 기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승인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2021년 9월 16일 제39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43개 기관에 대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이 확정되어 총 745개 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2020년도에는 9월 24일 45개 대상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이 이뤄졌고 총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2019년도에는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2개가 승인되어 총 17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88개 기관이었음≫

가장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위원장 정정래)가 83개 였다(2021년도와 2020년도 과방위는 82개였음) 그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이 78개 기관이었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이 75개 기관이었다. 가장 적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로 3년 연속 29개 기관이었다.(겸임위 제외).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 위원회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기관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운영	8	-	-	1	9
법제사법	74	-	3	1	78
정무	7	-	37	1	45
기획재정	23	-	6	-	29
교육	20	17	23	6	6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	-	65	9	83
외교통일	28	-	5	1	34
국방	61	-	5	1	67
행정안전	6	10	7	14	37
문화체육관광	27	-	32	10	6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	28	7	4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	-	57	-	60
보건복지	10	-	32	5	47
환경노동	48	-	27	-	75
국토교통	3	2	28	-	33
정보	5	-	-	-	5
여성가족	1	-	5	-	6
계 (기관수)	338	29	360	56	총계 783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2년도 국정감사 수첩(2022. 9. 27)

≪참고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 위원회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기관수) 계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운영	8	-	-	1	9
법제사법	74	-	3	1	78
정무	8	-	38	1	47
기획재정	23	-	6	-	29
교육	19	17	23	5	6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	-	64	9	82
외교통일	25	-	5	1	31
국방	61	-	5	1	67
행정안전	6	8	7	12	33
문화체육관광	21	-	26	4	5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	23	8	3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	-	55	-	58
보건복지	10	-	31	-	41
환경노동	48	-	27	-	75
국토교통	3	2	28	-	33
정보	5	-	-	-	5
여성가족	1	-	5	-	6
기관수(계)	329	27	346	43	총계 745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1년도 국정감사 수첩(수정본 2021. 10. 15)

＜참고 :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 위원회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기관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운영	8	-	-	1	**9**
법제사법	72	-	3	1	**76**

구분 / 위원회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정무	8	-	37	1	**46**
기획재정	23	-	6	-	**29**
교육	19	17	23	5	**6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	-	64	9	**82**
외교통일	25	-	5	-	**30**
국방	58	-	5	-	**63**
행정안전	5	10	7	13	**35**
문화체육관광	23	-	27	6	5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	23	9	**3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	-	41	-	**44**
보건복지	4	-	17	1	**22**
환경노동	46	-	24	-	**70**
국토교통	3	3	25	-	**31**
정보	5	-	-	-	**5**
여성가족	1	-	5	-	**6**
계 (기관 수)	**317**	**30**	**312**	**46**	**총계 705**

자료 : 국회사무처 의사국, 2020년도국정감사수첩(2020. 10. 8), 4쪽

4.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국감 51회

국정감사의 병폐 중 하나가 과다하게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제외한 일정 중에서도 무려 51회(2021년 51회, 2020년 55회, 2019년도 69회. 2018년도 58회, 2017년도 44회)나 한번에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의 경우에는 10월 18일 하루에 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하였다.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국방부 등 2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에 하였다(지난해에는 파행으로 감사를 못함).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의 경우에는 10월 14일 개인정보위원회 등 2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

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0월 18일 국립박물관 등 2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였다.

10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2022-10-04	법제사법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	국회	10:51	22:53	12:02:00
2022-10-04	교육	교육부 등	7	국회	10:03	22:06	12:03:00
2022-10-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	정부세종청사(세종)	10:04	22:21	12:17:00
2022-10-04	외교통일	외교부 등 5개 기관	5	국회	10:04	24:46:00	14:42:00
2022-10-04	국방	국방부 등 29개 기관	29	국방부(서울용산)	10:16	22:12	11:56:00
2022-10-05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국회	10:04	22:10	12:06:00
2022-10-06	법제사법	법무부등	5	국회	10:06	23:32	13:26:00
2022-10-06	국방	합동참모본부	8	합참(용산)	10:03	22:20	12:17:00
2022-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7	국회	10:07	23:23	13:16:00
2022-10-07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3	국회	10:03	20:47	10:44:00
2022-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5	국회	10:01	18:48	8:47:00
2022-10-07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6	국회	10:09	18:58	8:49:00
2022-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국회	10:00	19:54	9:54:00
2022-10-11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10	국회	10:05	18:09	8:04:00
2022-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촌진흥청	5	농촌진흥청사(전주)	10:07	15:59	5:52:00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2022-10-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	16	한국전력공사(나주)	10:36	18:35	7:59:00
2022-10-11	환경노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국회	10:02	19:40	9:38:00
2022-10-11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	8	국회	10:04	20:43	10:39:00
2022-10-12	교육	부산대학교 등 5개 기관	5	부산대학교(부산)	10:05	12:37	2:32:00
2022-10-12	교육	전남대학교 등 6개 기관	6	전남대학교(광주)	10:01	12:37	2:36:00
2022-10-12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	국회	10:06	19:37	9:31:00
2022-10-12	환경노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국회	10:01	23:45	13:44:00
2022-10-12	국토교통	한국부동산원	9	국회	10:03	20:09	10:06:00
2022-10-13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5	국회	10:06	22:11	12:05:00
2022-10-13	교육	경북대학교 등 6개 기관	6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	10:00	12:41	2:41:00
2022-10-13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14	국회	10:04	19:20	9:16:00
2022-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경찰청	7	국회	10:22	19:52	9:30:00
2022-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국회	10:09	19:31	9:22:00
2022-10-14	법제사법	대전고등법원 등	19	대전고등법원(대전)	10:23	12:33	2:10:00
2022-10-14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 13개 기관	13	대전고등검(대전)	15:04	17:36	2:32:00
2022-10-14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6	국회	10:24	19:37	9:13:00
2022-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6	국회	10:04	17:46	7:42:00
2022-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림청	5	수목원(세종)	10:07	18:04	7:57:00
2022-10-14	산업통상자원중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국회	10:04	19:19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벤처기업						
2022-10-14	환경노동	한국수자원공사	12	국회	10:03	21:16	11:13:00
2022-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한국마사회 등	7	국회	10:10	19:19	9:09:00
2022-10-17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등	12	국회	10:02	22:36	12:34:00
2022-10-18	법제사법	서울고등검찰청 등	11	국회	10:18	22:57	12:39:00
2022-1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등	53	기초과학연구원(대전)	10:01	16:23	6:22:00
2022-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	24	국회	10:04	16:58	6:54:00
2022-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	수협(서울송파)	10:22	18:37	8:15:00
2022-10-19	기획재정	한국수출입은행 등	5	국회	10:05	17:41	7:36:00
2022-10-19	교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8	국회	10:03	17:10	7:07:00
2022-10-19	문화체육관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4	국회	10:03	17:23	7:20:00
2022-10-19	보건복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	국회	10:10	17:03	6:53:00
2022-10-20	국방	육군본부 등	11	계룡대	10:00	19:06	9:06:00
2022-10-21	법제사법	서울고등법원 등	16	국회	10:14	18:31	8:17:00
2022-10-21	국방	해군본부 등	6	계룡대	10:00	13:00	3:00:00
2022-10-21	국방	공군본부 등	5	계룡대	14:24	16:20	1:56:00
2022-10-25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등	6	국회	14:06	22:28	8:22:00
2022-11-02	국회운영	국회사무처 등	5	국회	17:43	23:40	5:57:00

※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함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시간	감사종료시간	감사시간
10월 01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7	대법원	10:14:00	20:20:00	10:06
10월 01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7	국회	10:05:00	22:23:00	12:18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시간	감사종료시간	감사시간
10월 0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국회	14:04:00	23:59:00	9:55
10월 01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5	국회	10:07:00	17:46:00	7:39
10월 0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국회	10:11:00	22:32:00	12:21
10월 05일	교육위원회	국가평생교육원	12	국회	10:17:00	19:38:00	9:21
10월 0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8	정부세종청사	10:10:00	21:19:00	11:09
10월 07일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8	국회	10:04:00	20:33:00	10:29
10월 0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	국회	10:03:00	19:32:00	9:29
10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안전위원회	7	국회			
10월 0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11	국회	10:09:00	17:23:00	7:14
10월 0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7	국회	10:07:00	22:49:00	12:42
10월 08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18	국회	10:15:00	19:03:00	8:48
10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13	국회			
10월 0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국회	10:07:00	16:39:00	6:32
10월 08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17	국회	10:08:00	16:55:00	6:47
10월12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5	국회	10:05:00	19:38:00	9:33
10월12일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9	국회	10:15:00	19:45:00	9:30
10월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16	국회	10:04:00	22:05:00	12:01
10월12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국회	10:06:00	21:20:00	11:14
10월12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8	한국철도공사	10:04:00	19:39:00	9:35
10월 13일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	국회	10:06:00	19:48:00	9:42
10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5	국회	10:08:00	19:51:00	9:43
10월 13일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10	육군본부	10:02:00	18:01:00	7:59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7	국회	10:08:00	18:13:00	8:05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시간	감사종료시간	감사시간
10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국회	10:04:00	18:58:00	8:54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11	국회	10:07:00	23:14:00	13:07
10월 14일	4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4	국회	10:04:00	19:27:00	9:23
10월 14일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5	공군본부	10:04:00	17:53:00	7:49
10월 14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6	해군본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13	국회	10:08:00	19:32:00	9:24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6	국회	10:09:00	17:41:00	7:32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국회	10:03:00	18:32:00	8:29
10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국회	10:04:00	18:52:00	8:48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9	국회	10:06:00	19:17:00	9:11
10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16	국회	10:11:00	18:13:00	8:02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국회	10:08:00	19:00:00	8:52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12	국회	10:02:00	19:50:00	9:48
10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12	국회	10:03:00	18:15:00	8:12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7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10:32:00	17:34:00	7:02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국세청	8	대구국세청,부산본부 세관	10:08:00	17:38:00	7:30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53	대전	10:08:00	16:33:00	6:25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국회	10:03:00	18:50:00	8:47
10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12	국회	10:09:00	18:34:00	8:25
10월 19일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14	국회	10:05:00	20:19:00	10:14
10월 19일	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13	국방과학연구소	10:03:00	12:36:00	2:33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14	국회	10:10:00	18:08:00	7:58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시간	감사종료시간	감사시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국회	10:08:00	17:58:00	7:50
10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	국회	10:04:00	18:06:00	8:02
10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6	국회	10:12:00	18:20:00	8:08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6	국회	10:03:00	18:53:00	8:50

≪참고 2020년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감기관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법제사법	대법원(법원행정처)	6	10.7.(수)	국회	10:20	22:24	12:04:00
정무	국무조정실	5	10.7.(수)	국회	10:00	22:18	12:18:00
교육	교육부	7	10.7.(수)	국회	10:02	21:23	11:21:00
과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0.7.(수)	국회	10:03	22:42	12:39:00
국방	국방부	28	10.7.(수)	국방부	10:04	21:18	11:14:0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9	10.7.(수)	국회	10:08	19:49	9:41:00
국방	합동참모본부	8	10.8.(목)	합동참모본부	10:05	19:52	9:47: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6	10.8.(목)	국회	10:05	23:41	13:36:00
법제사법	법무부	5	10.12.(월)	국회	10:08	22:08	12:0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5	10.12.(월)	국회	10:01	22:14	12:13:00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8	10.12.(월)	국회	10:09	19:17	9:08: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한국농어촌공사	5	10.12.(월)	국회	10:06	18:32	8:26:00
환경노동	기상청	16	10.12.(월)	국회	10:01	17:17	7:16:00
법제사법	대전고법/고검	17	10.13.(화)	국회	10:21	18:55	8:34:00
교육	평생교육진흥원	12	10.13.(화)	국회	10:03	18:08	8:0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	5	10.13.(화)	국회	10:03	18:16	8:13:00
행정안전	소방청	9	10.13.(화)	국회	10:03	19:30	9:27: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10.13.(화)	국회	10:03	19:51	9:48:0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기업							
환경노동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19	10.14.(수)	국회	10:00	20:43	10:43:00
정무	국민권익위원 회	5	10.15.(목)	국회	10:03	19:24	9:21:00
국방	공군본부/ 해군	11	10.15.(목)	본부	10:03	19:57	9:54: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한국전력공사	13	10.15.(목)	국회	10:05	23:40	13:35:00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8	10.15.(목)	국회	10:02	18:46	8:44:00
환경노동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22	10.15.(목)	국회	10:02	21:23	11:21:00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	8	10.15.(목)	국회	10:03	21:52	11:49:00
법제사법	대구고법/고 검	15	10.16.(금)	국회	10:12	19:13	9:01:00
국방	육군본부	10	10.16.(금)	육군본부	10:00	15:36	5:36:00
문화체육관 광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7	10.16.(금)	국회	10:09	19:29	9:20: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7	10.16.(금)	국회	10:14	20:43	10:29:00
법제사법	서울고검	11	10.19.(월)	국회	10:22	22:03	11:41:00
정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4	10.19.(월)	국회	10:02	19:15	9:13:00
기획재정	한국수출입은 행	5	10.19.(월)	국회	10:03	19:50	9:47:00
교육	충남대학교/ 대전교육청	8	10.19.(월)	충남대	10:00	16:26	6:26:00
교육	<2반>경북대/ 대구교육청	9	10.19.(월)	경북대	10:01	17:44	7:43:00
문화체육관 광	국립중앙박물 관	12	10.19.(월)	국회	10:09	18:19	8:10: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8	10.19.(월)	국회	10:10	20:29	10:19:00
환경노동	한국수자원공 사	11	10.19.(월)	국회	10:00	21:25	11:25:00
국토교통	한국감정원	8	10.19.(월)	국회	10:04	19:49	9:45:00
법제사법	서울고법	16	10.20.(화)	국회	10:16	18:15	7:59:00
기획재정	<1반>광주지	7	10.20.(화)	광주지방	10:32	18:00	7:28:0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방국세청			국세청			
기획재정	<2반>대구지방국세청	8	10.20.(화)	대구경북본부	10:00	17:33	7:33:00
교육	<1반>전남대/광주교육청	10	10.20.(화)	시교육청	10:00	17:46	7:46:00
교육	<2반>부산대/부산교육청	8	10.20.(화)	시교육청	10:00	16:12	6:12: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53	10.20.(화)	대전	10:05	15:59	5:5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부산항만공사	6	10.20.(화)	국회	10:08	17:56	7:48: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석유공사	11	10.20.(화)	국회	10:02	20:00	9:58:00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11	10.20.(화)	국회	10:01	21:00	10:59:00
보건복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7	10.21.(수)	국회	10:02	19:16	9:14:00
교육	서울대학교	7	10.22.(목)	국회	10:02	19:34	9:32:00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16	10.22.(목)	국회	10:07	21:29	11:22:00
농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10.22.(목)	국회	10:07	18:28	8:21:00
행정안전	강원지방경찰청	7	10.23.(금)	국회	10:05	17:46	7:41:00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6	10.27.(화)	국회	10:04	18:48	8:44:00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6	10.30.(금	국회	10:04	18:10	8:06:00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유투브) 생중계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의 외교부 국정감사 생중계를 시작으로, 10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11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까지 15회 국정감사 생중계를 실시하였고, 생중계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녹화중계를 실

시하였다.

또한, 유투브 생중계를 실시하여 하루에 4개 위원회에서 생중계를 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국정감사가 끝난 하루 후인 2022년 10월 26일 12시 45분 현재를 기준으로 국회 영상회의록은 106개가 올라와 있었다. 2022년 12월 9일 제400회 본회의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해서는 128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2022년도 화상회의록을 통해 영상 모니터링이 대부분 가능하였으나,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 2반의 서울시 국정감사 등과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청, 도경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12월 9일 정기회가 끝나는 날까지 올라와 있지 않았다.

≪2022년도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현황≫

2022년 10월 26일 기준

구분	영상회의록수
외부 국정감사	18
국회내 국정감사	88
계	**106**
자막 포함회의록	18
자막수어 포함회의록	11

참고로 2021년도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국정감사, 10월 5일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등을 비롯해 10월 21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의 교육부 종합감사,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등 14회 국정감사(2020년도에는 15회, 2019년도는 총 13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다.

2021년도에는 11월 24일 기준으로 **139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의 경우에는 1일차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어 있는데, 10월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영상회의록까지 올라와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20개(겸임위 2개위원회 3개 포함)의 영상회의록(2017. 12. 1.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67개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대부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년도에는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152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거의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2020년도에는 11월 8일 기준으로 **149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현장시찰을 제외한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 시간은 1240시간 38분

2022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3])은 1240시간 38분이었다. 2021년도 대선 국정감사시 1210시간 7분보다 겨우 30시간 많아졌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인 2018년도 국정감사가 1447시간 44분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200시간 이상 줄었다.

≪제21대 국회 연도별 국정감사 시간 현황≫

구분	1차년도(2020)	2차년도(2021)	3차년도(2022)
감사시간	1317시간 36분	1210시간 7분	1240시간 38분

올해 국정감사에는 10개 상임위원회의 10월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전 국정감사 파행이 감사시간이 줄어든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고, 10월 19일 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단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

위원회	위원장	감사의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시간

3) 국회공보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위원회	위원장	감사의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시간
국회운영위원회	주호영	28	9	2	27:49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18	78	10	96:22
정무위원회	백혜련	24	45	11	100:05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26	29	9	88:41
교육위원회	유기홍	16	66	7	75:3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20	83	11	96:02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21	34	12	80:52
국방위원회	이헌승	16	67	11	73:16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22	37	10	100: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16	69	9	59:4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19	40	10	86: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30	60	10	76:42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24	47	8	82:27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16	75	10	100:11
국토교통위원회	이민기	30	33	9	88:16
정보위원회	조해진	12	5	4	-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17	6	2	8:22
계		355	783	145	1240:38

참고로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전부터 국정감사 중에 여야당이 공히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가 떨어진 점이 있었다.

제20대 국회말인 **2019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인** 1297시간 08분보다도 87시간 정도 줄었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1307시간 35분이었고, 2016년도 1216시간 43분이었다. 2016년도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는 기승전 조국감사로,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많았다.

2020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4])은 1317시간 36분으로 2019년도 감사

4)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회공보상의 오전 국정감사시작시간은 수정하였으나, 대부분 국회공보 표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시간(국회공보 기준)인 1297시간 08분보다 20시간 18분 정도 많았다. 2018년도 1447시간 44분보다 많이 저조하였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1307시간 35분이었고, 2016년도 1216시간 43분이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는 기승전 조국감사로,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많았다.

≪참고 2021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중식, 이동, 휴식시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3:32	문화체육관광	65:44
법제사법	107: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78:31
정무	101:2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91:03
기획재정	92:37	보건복지	76:19
교육	70:54	환경노동	86:5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8:27	국토교통	89:37
외교통일	65:01	여성가족	8:08
국방	62:03		
행정안전	102:45	계	**1210:07**

≪참고 : 2020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중식, 이동, 휴식시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19:49	문화체육관광	66:37
법제사법	114: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97:21
정무	106:4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96:06
기획재정	102:30	보건복지	77:51
교육	77:58	환경노동	98: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9:16	국토교통	105:03
외교통일	83:14	여성가족	8:44
국방	67:15		
행정안전	96:26	계	1317:36

≪참고 2019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휴식기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4:04	문화체육관광	55:18
법제사법	97: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84:1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정무	84:3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111:4
기획재정	92:36	보건복지	85:57
교육	59:12	환경노동	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9:5	국토교통	110:33
외교통일	92:24	여성가족	9:01
국방	57:45		
행정안전	112:42	계	1297:08

7. 지방자치단체 국감 : 2개 위원회 6일간 10개 시·도 대상

이슈 : 서울시 - 신당동, 경기도 - 이재명, 제주도 - 제주 4·3

10월 12일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행정처분 절차와 상암동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관련 내용, 교통방송(TBS)의 재난방송 부실 대응 의혹, 공공임대주택 확산 등이 조명되었다.

10월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이 15회 언급되는 등 태양광사업 등 박 전 시장당시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조명이 많았다. 최인호 간사는 고인에 대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고인이 된 시장님에 대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정치공세성 질의를 계속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과하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10월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16회 언급되는 등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해 84회 거론되었고, 자료제출 논란으로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

오영환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문진석 위원　정치 공세하는 것 아냐, 지금 국감하는 것 아니잖아요.
천준호 위원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　하여튼 이재명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다, 난리야……
조은희 위원　공무원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김교흥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하고 있어, 자료 요구만 해야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	감사반	감사반장	지자체	단체장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이슈/특이사항
10-12	행정안전(통합)	이채익	서울시	오세훈	시 청(서울)	10:03	17:47	7:44	안심소득 제도, 주거 취약자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과 공무원 정원과 조직관리, 민간 사업자 선정 관리 수도권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
10-14	행정안전(1반)	이채익	경상남도	박완수	도 청(창원)	10:08	12:43	2:35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우주항공청 유치
10-14	행정안전(2반)	김교흥	충청북도	김영환	도 청(청주)	10:01	12:31	2:30	도지사 공약 실천 방안 확보 문제, 관내 환경오염 방지 대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리 문제,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문제, 오송 바이오단지 추진
10-14	국토교통(1반)	김민기	경기도	김동연	도 청(수원)	10:01	16:36	6:35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 중첩규제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SOC사업,공공임대주택 공급,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1기 신도시 재건축

감사일	감사반	감사반장	지자체	단체장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이슈/특이사항
10-14	국토교통(2반)	김정재	서울시	오세훈	시 청(서울)	10:00	16:48	6:48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사업 재개 등 수해 대책 반지하가구의 주거문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수도권 매립지,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절차, 신당역 직원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개인정보 보안과 안전확보, 직원 채용·보수 관련 규정,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
10-17	행정안전(1반)	이채익	울산시	김두겸	시 청(울산)	10:02	12:48	2:46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 협력 강화 필요성, 울산광역시 재정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있는 재정관리
10-17	행정안전(2반)	김교흥	경상북도	이철우	도 청(안동)	10:06	12:38	2:32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 원전 및 수소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농업의 발전 등 경북 발전에 관한 사항과 태풍 피해 방지 및 대응, 지방의료원 위탁 문제, 대구경북 광역환승체계 등 도민

감사일	감사반	감사반장	지자체	단체장	장소	시작	종료	감사시간	이슈/특이사항
									안전 및 후생복지
10-18	행정안전(통합)	이채익	경기도	김동연	도 청(수원)	10:04	18:07	8:03	기회소득의 합리적인 개념 정립과 방향 설정,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 광역교통사업 추진,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지역사랑상품권
10-20	행정안전(1반)	이채익	대전시	이장우	시 청(대전)	10:31	13:03	2:32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 국가균형발전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재정정책 수립과 이행 필요성
			세종시	최민호					
10-20	행정안전(2반)	김교흥	광주시	강기정	시 청(광주)	10:32	14:40	4:08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개최, 복합쇼핑몰 건립, 수소 트램 설치, 광주시 군공항 이전 광주 학동·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아동학대 동행출동 문제, 청소년쉼터 확대 문제 등 시민안전과 후생복지
10-21	행정안전(통합)	이채익	제주도	오영훈	도 청(제주)	10:08	12:35	2:27	4·3 특별법/ 보상 지역어보전정책

참고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2번 이상 국정감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곳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였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2개 광역도(충남, 전북)와 광역시(인천, 대구)를 2번 실시하였고, 지방분반을 나눠서 부산시와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에 자료 제출논란부터 시작하여 질의태도나 방법 등에 있어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경기도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계속 이어졌다.

≪참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자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행정안전 (22)	인천시	**박남춘 시장**	10.12(화)	국회	10:11	16:46	6:35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	10.12(화)	국회	10:11	16;46	6:35	해양 대기질오염 저감 대책
행정안전 (22)	대구시	**권영진 시장**	10.13(수)	국회	10:04	16:31	6:27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 대구 지역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응 대구시 북구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건립 갈등 문제 군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계획, 칠성시장 개시장 운영 갈등, 취수원 이전 다변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10.13(수)	국회	10:04	16:31	6:27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 등 시군 갈등 조정 문제 전 순창 부군수의 부동산 관련 투기·특혜 의혹 저조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해법
행정안전 1반(12)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10.15(금)	도청	10:00	12:14	2:14	지방인구소멸 2월 문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균형뉴딜 투어 1호'행사 과정에서의 과잉 의전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 광주 군 공항이전,나주 부영CC잔여부지 특혜 문제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
행정안전	부산시	**박형준**	10.15(금)	시청	10:00	13:10	3:10	해운대구 엘시티 문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자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2반(10)		**시장**						제 /엘시티 관련 사과논란 일시파행
행정안전	경기도	**이재명 지사**	10.18(월)	도청	10:05	19:48	9:43	대장동 사태 / 파행
행정안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	10.19(화)	시청	10:07	19:09	9:02	대장동 사태 / 일시 파행
국토교통 2반(15)	경기도	**이재명 지사**	10.20(수)	도청	10:06	19:09	9:03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파행
국토교통 1반(14)	서울시	**오세훈 시장**	10.20(수)	시청	10:00	18:15	8:15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 등 주택 정책/ 파행

≪참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시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국토교통 (30)	부산광역시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10.13.(화)	시청	11:01	17:30	6:29:00	가덕도 신공항 관련 (신공항 검증)
행정안전 (22)	서울특별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10.15.(목)	시청	10:09	16:53	6:44:00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 반값 재산세
행정안전 (22)	경기도	**이재명 지사**	10.19.(월)	도청	10:04	16:43	6:39:00	이재명 대선주자 검증
행정안전 (22)	강원도	**최문순 지시**	10.20.(화)	국회	10:03	18:25	8:22:00	레고랜드 의혹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						청주특례시 관련입장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대책, 청년일자리
국토교통 (14)	<1반>서울특별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10.20.(화)	시청	10:02	19:49	9:47:00	아파트가격 전세대책
국토교통 (16)	<2반>경기도	**이재명 지사**	10.20.(화)	도청	10:02	21:52	11:50:00	'국민의짐' 논란 기본주택론
행정안전 (22)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10.22.(목)	국회	10:10	18:17	8:07:00	대전 세종통합론
	대전광역	**허태정**						대전 세종통합론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시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시	**시장**						유성복합터미널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전남 광주 통합론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						직무수행평가저조, 선거개입논란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장의 말이 회자되어 경각심을 주거나 이슈화되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위원들의 촌철살인과 답변자들의 답변도 있었다.

올해에는 의원들의 막말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피감기관에서는 촌철살인이라고 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다 걸게요'와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회의록 및 언론보도 종합)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2.10.4	**김교흥**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 정부'라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제를 요청하자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이에 반발해
2022.10.4	**권성동**	과기정통부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끔 쓰면 어떡하라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사말에서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다시금 넷크래커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발언하자
2022.10.4	**송석준**	언론에서 봤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많은 어린이집이 폐업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언론에서 봤다'고 답하자
2022.10.5	**강기윤**	니나 가만히 있으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을 향해 '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왜 품평하느냐'고 하면서 '좀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자.
2022.10.5	**조해진**	법인세 인하 논쟁이 여름철 장마처럼 참 지루하기도 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인세 인하 등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2022.10.6	**주철현**	뺄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해수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수부장(葬)' 결정을 두고
2022.10.6.	**박성중**	시선까지 관리하세요? 본인이 전지전능한줄 아세요? (그런줄) 아시냐고요. 내꺼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중립적 의사진행'을 요구했다가 발언이 막힌 상황 속 정 위원장이 '자료 보세요, 위원장 보지 말고. 계속 째려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라고 하자
2022.10.6	**김회재**	백아연이라는 가수가 '이럴거면 그러지 말걸' 이런 노래가 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 불참을 언급하며
2022.10.6	**김영배**	허수아비도 아니고 깡통안보 상황에서 국감이 무슨 소용인가	국방부 측이 한미일 해상 방공훈련 진행 사실을 국방위원들에게 오전 국감장(국방위)이 아닌 오후 문자메시지 통해 알리자
2022.10.6	**한동훈**	의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 자료와 관련해 '영어를 잘하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액세스(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질의하자
2022.10.5	**이흥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도 중소병원 화재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며 질책하고 '재발할 경우 소방청장이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2022.10.7	**하태경**	아마 김정은, 김여정 등도 밤새 네이버 검색하고, 찾고, 댓글 달고 있을지 모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터넷 프로젝트 필요성을 말하는 과정 중 북한 상위층 1만~2만명은 인터넷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2022.10.7	**권성동**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정의당 의정 활동,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경력 등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재단 이사장을 역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022.10.7	**허은아**	한우협회 이사장에 채식	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주의자가 온 겁니다	단 이사장의 탈원전 신념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022.10.7	**유기홍**	살펴만 보지 말고 답을 해달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이 말을 덧붙이며
2022.10.7	**전용기**	중3 과학 교과서랑 기상청 해설서 요약본이 다를 게 없어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중 기상청 3개월 전망 해설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질의하며
2022.10.7	**권영세**	그러면 김 의원님은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탈북선원 북송'에 대해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지적하자 '법률적 판단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틀 조사하고 바로 북한에 연락해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며
2022.10.7	**문정복**	개나 줘버리라고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언쟁하며
2022.10.7	**정정래**	제가 평화론자인데 왜 웃습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고성·끼어들기 자제를 요청하며
2022.10.7	**강민정**	여당이 거의 인격살해 버금가는 짓을 했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표절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2022.10.7	**정경희**	이재명 의원 석사 논문 표절 문제된 가천대 총장도 불러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인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해외연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에 야당이 연수 일정과 출장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수하며
2022.10.11	**조수진**	착하게 사는 길의 시작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언급하며
2022.10.11	**박범계**	가만히 계세요! 쯧.	법사위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 계획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해명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2022.10.11	**김윤덕**	청장님, 정신 차리세요	문화재청 직원들이 고유 사무를 미룬 채 청와대 개방행사에 동원돼 단순 관광객 안내 업무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문화재청장이 답변하자
2022.10.11	**송기헌**	증인들이 모두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마이크가 위원들의 오른쪽에 있어야 질의가 편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좌석 왼쪽에 설치된 마이크로 인해 질의의 불편함을 토로하며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2.10.11	**장철민**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 되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이 한국철도공사·SR에 최근 5년간 공직자 7000여 명의 탑승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도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2022.10.12	**윤건영**	제가 졸지에 간첩이 됐다가 파렴치한이 됐다가 그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국감장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사자로서 심경을 토로하며
2022.10.12	**노웅래**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든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환노위 국감에서 벌어진 이른바 '윤건영 종북' 발언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이 사과했으나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2022.10.12	**조해진**	언론 권력 측면에서는 예외, 성역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론 투명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2022.10.12	**오세훈**	프레임 씌우기 하지 마십시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님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겁니다'라고 지적하자
2022.10.13	**권성동**	잘 된 발언입니다, 왜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청래 의원이 말조심을 해달라고 하자 언쟁이 벌어지며
2022.10.17	**안병길**	보따리 싸실 생각 있나. 사퇴하실 생각 있냐고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5억원 상당 골프장 회원권, 경마사고 문제 등 '방만 경영' 문제 지적하며
2022.10.17	**이주환**	과하다고 사과 4번이나 했고, 사과를 허리까지 숙여서 한 걸 봤다. 무릎 꿇어야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자 김 위원장을 옹호하면서
2022.10.17	**정청래**	기업이 아무리 이익이 중요하지만 몰상식한 일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맵모빌리티의 카카오 겨냥 광고를 지적하며
2022.10.17	**류성걸**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마약 신흥국'이라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관세청 등 국감에서 마약 적발건수 등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2022.10.17	**박대수**	기자분들 계시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자
2022.10.18	**장제원**	저도 무척 역겹거든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장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저를 감사하는 것인지, 그런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고 하자 민주당 측은 장 의원을 향해 '역겹다'고 반응, 그러자 장 의원은 "나는 더 역겹다"고 되받아침
2022.10.18	**조승래**	개인도로를 국가도로로 지정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2022.10.18	**김의겸**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문재인 정권 수사를 비판하며, 자신이 기자로 활동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모 차장검사가 한 발언이라며
2022.10.18	**기동민**	웃자고 얘기하니까 죽자고 달려드는 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이 전날(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2022.10.20	**윤재갑**	주호영도 빨갱입니까?	농해수위 국감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 대회에 축하 전문을 보낸 사실을 지적하자
2022.10.20	**김원이**	영혼이 맑아, 아주 그냥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애보트사에 발송한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관련 협조 요청'에 관한 공문이 너무 솔직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김 의원은 '기업이 해외 영업비밀에 속하는 해외 납품가격을 (그냥) 알려주겠느냐'고 언급
2022.10.20	**강훈식**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 아니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감 첫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국감 마지막날까지 자료제출이 거부되고 있다며
2022.10.20	**이양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날치기를 날치기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날치기가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2022.10.20	**송석준**	근데 본 의원은 단말기로 볼 수가 없어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소관기관 일반현황 자료가 왜 배부가 안 되느냐'고 송 의원이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단말기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하자.
2022.10.20	**김도읍**	뭐가 구려서 이 기회를 마다합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색 시도에 반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자
2022.10.21	**김성주**	안산 김씨 족보를 뒤져봐야 압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가 김건희 여사 조부의 6·25 참전 여부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2022.10.21	**민형배**	세간에서 국민대학교를 ’국힘대학교’ ’건희대학교’ ’국민학교’ ’별점 1.1점’ ’논문 위조 맛집’ 이렇게 부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주궁하면서.
2022.10.21	**송석준**	권익위판 국정농단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2022.10.21	**권칠승**	이런 확률은 우주를 다시 만드는 확률과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2022.10.21	**장동혁**	(224 대 0) 현수막이 2022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이 이 대표 의혹 관련 압수수색 건수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 건수를 비교한 현수막을 내건 데에 대해 반응하며
2022.10.21	**김남국**	반말하고 삿대질 했을 때 많이 참았습니다. 진짜 많이 참았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난타전을 벌일 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말과 삿대질을 했다고 비판하며
2022.10.21	**조수진**	법원의 영장 발부는 혹시 대통령실과 조율합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며
2022.10;21	**김의겸**	나는 심장만 타격했지, 김의겸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	법사위 국감에서 최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당사(민주연구원은 민주당사 내 위치)를 실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2022.10.24	**홍성국**	정말 찬란한 무지와 무능, 무책임, 요즘 용어로 추앙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감에서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혼란을 초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2022.10.24	**장제원**	학생이요, 학교에 자꾸 지각하면 퇴학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2차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22.10.24	**한동훈**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은 뭐 거시겠어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7월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가량과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2.10.24	**우상호**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김치도 겨우 구해먹었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감에서 '각국의 물가 상승 속 해외 근무 외교관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10.24	**고민정**	예의를 지키라고요?	과방위 종감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예의를 지키라"고 언급하자 이에 답변하며

2021년도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 그때그때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반박이 되지요." 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하였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와의 친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동규는 그런 정도 역량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감사위원보다는 피감기관 장의 발언이 많이 회자 되었는데 11월 4일 노영민 위원장의 '살인자' 발언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7번 윽박' 등은 논란이 되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9년도에는 김종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내가 조국이냐!' 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어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화천대유하셨습니까?' 라는 한가위 명절 덕담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 5일 기획재정부 첫 날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어 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민심을 전한다면서 "명절에 가장 유행했던 덕담인데요,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천화동인 하세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도 하였다.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회의록 등을 통해 모니터위원들이 선정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10월19일	**김도읍**	어제 이재명 지사 혼자서 130분 떠들었어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에게 서영교 위원장이 충분히 답변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10월21일	**이종배**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의 삶은 무한합니다.	문 정권의 임기는 끝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가는 길이 정도가 아니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당부하면서
10월 5일	**김회재**	특검주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이 아니고 주마절각(走馬切脚)입니다. 달리는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특검주장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10월 5일	**박형수**	제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국감장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 위원장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국감 사회 안 보실 겁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팻말 논란으로 인해서 위원장이 회의진행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10월 5일	**박홍근**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해야지요. 정쟁은 정쟁대로 하시고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0월 5일	**장혜영**	국정감사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행정부 앉혀놓고 입법부끼리 싸우는 자리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까 봐 참 겁이 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교섭단체로서 여야의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비판하며
10월21일	**조해진**	이대로 가면 지방은 소멸한다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대학교가 위축 되고 있다며,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지방도 소멸하게 도니다면서
10월21일	**강득구**	모든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에 '균등하게'를 추가하며
10월21일	**김남혁(김해대학교 학생)**	우리 한번 봅시다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지방대학 차별 및 소멸위기에 대한 답변 중 발언기회를 얻어서 의원님과 교육당국과의 대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다며
10월21일	**김병욱**	혹시 독도에 가 보셨나요?	교육위원회종합감사에서 올해 6월에 처음가 봤는데 '아, 진짜 여기가 소중한 우리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꼭 한 번씩 여기 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0월 1일	**윤영덕**	제가 먼저 할게요, 저 피켓.	교육위원회의 첫국정감사에서위원장의 감사개시발언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석 푯말에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0월 1일	**강득구**	임용대란, 임용절벽 현실화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교육위원회 첫국정감사에서 최근교대생들은 임용대란을 넘어 '임용재난'이라는 표현까지쓰고있다며,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10월 1일	**안민석**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오늘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전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10월 5일	**김철민**	국감장이여 이게 뭐하는 장이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고, 10월 1일 파행과 관련해서 책임공방이 길어지자
10월5일	**안민석**	첫째는 말하는데 끼어들기하지 말자.고함지르기하지말자. 정시에 좀개의하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의 피켓싸움과 감정싸움이 전개되자 국정감사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과 여야간사 즉 삼부가 합의를 하자면서
10월5일	**이학영**	계시면 큰일 납니다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정(0시10분경)을 넘겨 국정감사 진행을 하다가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라고 묻고, 없다고 하자, 안도하면서
10월6일	**유경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전에 부총리에게 질의시간이 7분, 5분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절제된 답변을 요청하면서
10월6일	**배준영**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총리에게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물으면서 이번 정권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드린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며
10월6일	**박형수**	아무 것도 못 하겠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총리에게지역화폐 발행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법에 따라 통제를 하는 것에 질의하자 부총리가 지방자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때문이라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10월6일	**양향자**	눔프(NOOMP)현상 아시지요? ‘not out of my pocket’	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 수가 2013년 541만 명에서 2019년 70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납세 대상자 1917만 명 대비 36.8%를 차지하고 있다며
10월20일	**양경숙**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필품 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많이 가벼워지고 있고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며
10월20일	**김영진**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위원장 대리를 하면서 서일준 의원이’추가 질의는 제가 내일 또 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10월20일	**장혜영**	국회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국회이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종합국감에서 마무리한 말씀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발언기회를 얻자, 마이크를 잡은 이유를 설명하며
10월 1일	**정희용**	많은 기사에서 ‘휴대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을 던졌는데 못 찾았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휴대폰 위치추적기술 현황과 이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며
10월 1일	**변재일**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정책을 가리기 위한 고집이라고 질타하니) 임혜숙 장관이 종합검토를 하겠다고 하자.
10월 19일	**유상범**	우리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또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기한을 위원장이 정해주지않으면 혼란이오니까 위원장이 자료제출기한을 정해달라며
10월 19일	**조수진**	그게 군사기밀이라고요?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1년 전에 서해공무원피격사망사건의정확한 실종지점이 군사기밀이라는 장관의 답변을 듣고
10월19일	**권성동**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몇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법제사법위원회군사법원국정감사에서장관이 7번이나 사과할 정도로 군내에자살사고 등 비극적사건이 많았다면서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는질의에 앞서
10월21일	**조수진**	장관님, 이 말 믿어도 되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박성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박범계장관이대장동사건 관련' 의혹이 한 톨이라도있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자 이어 질의를 하며 이말을확인하면서
10월21일	**김용민**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장동사건과 관련하여서 '돈이 누구에게갔는 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10월21일	**전주혜**	무슨 무슨 날짜에 출입자가있었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제사법위원회종합감사에서 권순일대법관실 출입자명단 제출관련에 대법원이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0월21일	**김영배**	본인이시지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수처인사문제 관련질의를 하면서 공수처인사위원장이 공수처장이라는 답변에 대해
10월8일	**윤한홍**	이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이 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국감에서 특정단체 소속 법관들의 승진을 거론하면서 대전고법원장에게 특정단체에 가입되지 않아 대법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질의 하자(국정감사장에서 웃음소리 나옴)
10월12일	**김용민**	헌법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헌법교육을 강조하자, 선출직공무원들의 헌법교육이 필요하다며
10월12일	**김영배**	헌재 기다리시니까 진행하시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등국정감사에서는이재명 전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대납의혹관련 여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국감진행을 주문하며
10월12일	**최기상**	지도 역할을 하는 별빛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국정감사에서 공동체가 그 길을 찾는 역할를 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10월12일	**조수진**	호랑이꼬리밟은 사람,호랑이 꼬리갖고 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국정감사에서박지원 국정원장은 야권의 유력대선후보에게 '자료 다 가지고 있다', '입 다물어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라', '잠자는 호랑이 꼬리밟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며
10월14일	**소병철**	제 입으로는 그 단어를 오늘 처음 써요, 검수완박.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법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등 국정감사에서 용어를 만들자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수국신' 이 돼야 된다며,
10월14일	**전주혜**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권력수사 뭐가 있었습니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송기헌의원과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야당 의견 제기능을 이렇게 무시하십니까?'라고 하면서
10월15일	**이수진**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소액재판제도가 저절로 바뀝니까?	법사위원회의 서울법등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한 법원차원의 노력을 주문하며
10월15일	**김남국**	서울가정법원장님 출석해 계시지요?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법등 국정감사에서 인천가정법원장을 찾았으나 없자,서울가정법원장도 된다면서 불렀으나대답이 없자.
10월12일	**박용진**	한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계속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후보 경선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지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각오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면서 (배진교 의원의 제의로 박수를 받음)
10월12일	**권은희**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무덤으로 끌고가는 행위에다가 이해충돌방지를장식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7일	**정청래**	어디에 제약받지 말고 내키는 대로 춤추고 잘 살아라, 청년들이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국정감사에서 BTS의 유엔 공연을 상영고, '퍼미션투댄스(Permission to Dance)'곡명을 해설하면서
10월21일	**이광재**	우리는 과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함께생각해봅시다'라는 책자를 주고, 감사개시발언을 하면서
10월21일	**김경협**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석기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질의를 하자 '말을 좀 가려서 하자'고 하였다가 야당의 반발을 사자
10월20일	**조태용**	우리 한국이 한반도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사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며,'평화협정은 미북간에 해야된다고 하는북한의 말도 안되는 오랜 주장에 말려들게된다'는데 경각심을 주면서
10월 13일	**이수진(비)**	다시 종감 때 봐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영주댐 모니터링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에게 질의하다가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하자
10월12일	**박대수**	안했지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2018년도 10월 1일 0 대성에너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2인 1조 작업 등 산업안전규칙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항목별로 확인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하면서
10월12일	**노웅래**	문제가 없으면 국감 뭐 하러 받아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분쟁 진정사건 처리기간이 길다는 취지의 질을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10월14일	**송언석**	왜 이렇게 힘든 나라를 만듭니까? 반성하세요.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소관 9개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2020년 7월임대차법적용하면서부터 전세지수 월세지수가급등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을 질타하면서 국토교통부 주토실장을 찾으며
10월14일	**허영**	이게 최선입니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소관 9개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의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서 이해관계인을 제척, 기피, 회피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1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10월 19일	**김회재**	대장동이 서울시에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패널을 준비하여 대장동 관련 답변을 하자 질의에 앞서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다며
10월 19일	**이헌승**	과연 누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판단으로 맡겨 주시고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여야간에 의사진행발언과 고성이 오가자,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두자며
10월 19일	**김윤덕**	하나는 국회법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의 답변도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10월 19일	**이재명**	유동규는 그런 정도 역량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이 영상을 보이며 '유동규는내말이 곧 이재명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셨습니까, 이 당시에'라고질의하자
10월19일	**심상정**	무제한의 답변이나 이런 것 들이 주어지면 또 이후에 반박할 시간이 없어요.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답변이 길어지자, 여야간의 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시간논쟁이 벌어지자, 의사진행을하면서
10월19일	**조응천**	지금 똑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2감사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과정의당에서 편파진행 불공정진행이라면서 항의를 하자
10월22일	**송옥주**	마이크는 아니고요 그냥 질의를 하세요.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의원이 마이크가 중단되어 '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라고묻자 사실상 거절의 의사표시로
10월22일	**양이원영**	장관의 자리는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라고요!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의원이 데이트폭력등 신종범죄에 대해서 질의하자, 여가부장관이여가부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라고 하자송옥주 위원장이 질책을 하자 '하소연'이라고 장관이 말하자
10월22일	**김미애**	미국은 어땠습니까?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는 뉴욕주검찰이 독립된 조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를 했는데,우리나라는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지자체장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했다면서
10월 1일	**김한정**	검찰 조사 저지하는 국민의힘이 의심스럽다' 하면 좋겠습니까	정무위원회의국무조정실등국정감사에서피켓논란과관련한의사진행발언을통해피켓을떼고국정감사에집중하자면서
10월6일	**이용호**	'지원자'라는게 어플라이(apply)한다는뜻이 아니고 혜택자입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산아 의료비지원예산이 1/5로 줄었들었다면서
10월6일	**신현영**	의료계에서는 의료 소통의 쏘리 웍스(Sorry Work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질의를하면서 처장에게 '보상보다는 뭔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정부가 원원할수 있는 진실말하기와 진정한 공감이 우선 돼야 한다'며
10월26일	**임이자**	아휴,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주택정책과관련해 김밥집 메뉴판보다도 더 자주바뀌었다는 질의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며
10월26일	**윤호중**	2시간에 한 번씩 정회를 하라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 국정감사에서 방역지침에따라 정회선포를 하면서
10월26일	**서일종**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감독하는 거예요?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지시사항이 잘 안지켜지고 있다며 대장동수사의 문제점을지적하던중 운영위원장이 '실체적진실을 예단하고 질의하시는 것아닌가요"라고 하자
10월22일	**장경태**	저는 '같을 여'를 써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등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자에 대한 한자를 물으면서 장관이 '계집여'라고 답하자
10월21일	**한기호**	이러면 저를 몰아 내시겠습니까?	국방위의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피켓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목에 피켓을 걸면서

≪참고 2020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언론보도내용 등 종합)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1월 4일	**노영민 비서실장**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장	박대출의원이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지 질의하자
10월 16일	**김은혜 의원**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례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사 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은 A씨의 사례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해법을 구하며
10월 16일	**양경숙 의원**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대사가 떠오른다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성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13일	**강기윤 의원**	밥이 상해도 그 안의 탄수화물 절대량은 똑같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겠나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단백질 함량에 문제가 없어 백색입자 발견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답변에
10월 8일	**서범수 의원**	조금 많은 게 아니죠. 537대입니다. 그렇죠? 537대. 그러면 동원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광화문 경찰차 차벽 설치와 관련하여 동원 차량이 언론의 300대 보다 조금 더 많다는 청장의 대답에 대해
10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제가 만류… 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	남편 이일병씨의 보트 구입 외유에 대해 이태규 의원이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에 대해 답하면서
10월 15일	**김용판 의원**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서울시도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평양시 지원에
10월 15일	**허종식 의원**	전교 1등들이 몰랐겠느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과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	법사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관 사퇴 여론이 점점 증가한다는 취지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10월 19일	**김진애 의원**	존경하는 빼고 얘기하셔도 돼요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 기소 관련 결재라인을 확인하며
10월 8일	**윤희숙 의원**	장관님, 전셋집 구하셨어요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전셋집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 8일	**김주영 의원**	영끌, 줍줍' 아시죠?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	요즘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라면서 "처음엔 젊은 층에서 재미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슬픈 단어였다" 라며
10월23일	**김영호 의원**	눈 큰 비둘기형 장관이 됐음 좋겠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종합감사	여야 의원들이 비둘기, 부엉이를 언급하며 선절을 벌이자
10월 23일	**박진 의원**	비둘기 보고 매가 되라곤 하지 않겠다. 대신 눈 크게 뜨고, 볼건 보는 부엉이는 되라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종합감사	여당 의원들이 비둘기를 거론하며 이인영 장관에게 덕담을 건네자
10월 16일	**양경숙 의원**	너나 잘하세요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은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것'이라며
10월 16일	**안병길 의원**	전화번호는 전달했지만 지시는 없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메모는 부장에게 전달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10월 16일	**주철현 의원**	솔직히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여당 의원조차 펀드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NH투자증권을 질타하며
10월 12일	**윤호중 법사위 원장**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 여야 의원 간 거친 공방이 계속되자
10월 12일	**전주혜 의원**	장관님, 여기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 받은 카톡과 관련해 질의를 하며
10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말 이것은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법 절차에서 허용된 범위 내 정당한 휴가, 병가라 위법과 불법이 없는 간단한 사건'이라 규정하며
10월 13일	**김희국 의원**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위의 부산시 국정감사	220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10월 12일	**조명희 의원**	시나리오 없이 12시간 내에 우리 다 죽어요.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	인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한국이 방사능으로 뒤덮인다며
10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7번이나 윽박질렀죠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27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자
10월 13일	**김병욱 의원**	친일단체로 전락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	교육위의 교육부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3개 전범기업에 2년간 57억원을 투자한 것을 지적하며
10월 13일	**김성주 의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구매했다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국정감사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이자 필로폰 중독자 사이에선 마약 대체재로 쓰이는 의약품을 구매했다며 당근마켓의 부실관리를 지적
10월 13일	**모종화 병무청장**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답변하면서
10월 13일	**윤석헌 금감원**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	기재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사전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장		사	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10월14일	이치범 주말레이시아 대사	말레이시아 내 북한 사람은 없는 상황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이후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를 묻자
10월 8일	**권성동 의원**	지금 추리 소설 쓰는 거 같아요. 추리 소설	농림축산식품위의 해경 국정감사	의원들이 물으면 수사 책임자로서 확신에 차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답변해야 국민들이 해경청의 발표를 믿고 신뢰할 텐데 잘 모른다 추정한다고 답변한다며
10월 8일	**주호영 의원**	문재인 케어 나는 이 이름 좋게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국정감사	재원 대책 없이 고갈되고 나면 문재인 케어 아니라 문재인 미스가 된다며
10월 8일	**박성중 의원**	대한민국 방송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불행하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YTN 주식 매각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며
10월 8일	**이용빈 의원**	관종 뜻 아세요, 똥손 아세요?“	과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구잡이식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지적하며
10월 8일	**전주혜 의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명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그 중 5명이 '우국민' 인사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면서
10월 8일	**최승재 의원**	계란 한판이 얼만인지 아시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식자재마트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
10월 7일	**임이자 의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낙연'이시네요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송옥주 환노위원장이 임이자 의원을 호명한다는게 실수로 이낙연으로 잘못 말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10월 7일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준비가 대단히 부실하다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문체부 국감 이틀 전에 의원실로 찾아와 USB 30개 한꾸러미를 의원실 책상에 던지고 갔다며
10월 7일	**서범수 의원**	야당이 부르면 안 온다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대응 관련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보고한 것과 관련, 진영 장관이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10월 7일	**신원식 의원**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고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지적하며
10월 7일	**김영진 의원**	약간 야멸찬 국감인 듯하다.	농림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사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취지인데라며
10월 7일	**김상희 부의장**	마스크 씁시다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발언할 때 비말이 많이 튀니 불편해도 되도록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며, 박성중 의원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게 해달라고 하자.
10월 7일	**주호영 원내대표**	K방역 누가 이름을 지은 것인가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10월 7일	**김진애 의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 판사 카르텔 아니냐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비판하며

9. 국정감사중(시작전 포함)위원회 전체회의 45회(2021년도 32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도중 위원회 전체회의가 45회 열렸다.

국정감사 도중 가장 많은 회의를 한 것은 정무위원회로 8회 실시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의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을 위한 회의였는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중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었다.(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정감사와 별도로 위원회가 열린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10월 19일 전체회의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의 경우에는 5회 중 2회는 국정감사가 아닌 비공개 업무보고 때문에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국정감사 도중 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주로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의 변경이나 출석요구 등을 위한 회의였다.

이번에는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에서

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회의가 열렸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에서는 불출석증인과 기관증인의 고발을 위한 회의도 열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의 경우에는 장관(부총리 이주호)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회의가 1번 열렸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의 경우에는 장관(조규홍)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1번(2022.10. 4)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경우에는 회의가 없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1	과학기술	5	문화체육	4
법제사법	0	국방	1	산업통상	2
정무	8	외교통일	0	보건복지	5
기획재정	2	행정안전	2	환경노동	4
교육	2	농림축산	5	국토교통	4

2021년도 국정감사의 시작 전 또는 국정감사 도중에 위원회 회의를 연 경우는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32회였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등 4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다.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0	과학기술	3	산업통상	3
법제사법	1	외교	1	보건복지	3
정무위원	3	행정안전	2	환경노동	6
기획재정	0	농림축산	4	국토교통	2
교육	1	문화체육	3	계	32

24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국회	대통령	연도	국회의원 정수 (감사위원)	상임위	총 감사일	대상 기관 (실시)	현장 시찰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김대중	1999	299 (298)	16	183	352	18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김대중	2000	273 (272)	16	188	357 (355)	23
	김대중	2001	273 (269)	16	187	402 (392)	31
대선	김대중	2002	273 (271)	17	159	365	17
	노무현	2003	273 (271)	17	170	399	24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노무현	2004	299 (298)	17	190	457 (356)	31
	노무현	2005	299 (295)	17	174	461	16
	노무현	2006	299 (296)	17	180	510	40
대선	노무현	2007	299 (298)	17	160	488	20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이명박	2008	299 (298)	16	168	478	32
	이명박	2009	299 (289)	16	168	478	25
	이명박	2010	299 (271)	16	166	514	26
	이명박	2011	299 (295)	16	157	563 (556)	30
제19대 국회 / 대선 (2012.05.30.~2016.05.29.)	이명박	2012	300 (299)	16	163	559	27
	박근혜	2013	300 (297)	16	169	628	24
	박근혜	2014	300	16	163	672	11
	박근혜	2015	300	16	161	708	21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박근혜	2016	300	16	161	691	22
대선	문재인	2017	300	16	163	701	27
	문재인	2018	300 (297)	17	168	753	24
	문재인	2019	300 (296)	17	159	788	20
제20대 국회 (2020.05.30.~2024.05.29.)	**문재인**	**2020**	**300 (299)**	**17**	**137**	**705**	**8**
	문재인	**2021**	**300 (296)**	**17**	**135**	**745**	**8**
	윤석열	**2022**	**300 (298)**	**17**	**145**	**783**	**16(15)** 감사병행 5회 불포함

* **원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및 조사 통계자료집 및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였음(계획과 시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현장시찰은 국정감사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같은 날 반이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나, 오전 또는 오후에 시찰을 하고 국감 진행, 정보위 포함)
2022년도 감사일수 계획은 146일이었으나, 실시는 145일임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2022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의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국회사용일수	감사시간	영상회의록수	현장시찰	의원출석률
국회운영	주호영(국)	28	9	2	2	27:49:00	3	0	100%
법제사법	김도읍(국)	18	78	10	9	96:22:00	13	0	100%
정무	백혜련(민)	24	45	11	9	100:05:00	10	1	96.25%
기획재정	박대출(국)	26	29	9	7	88:41:00	8	0	93.27%
교육	유기홍(민)	16	66	7	5	75:33:00	6	0	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청래(민)	20	83	11	7	96:02:00	8	0	93.89%
외교통일	윤재옥(국)	21	34	12	3	80:52:00	3	0	98.41%
국방	이헌승(국)	16	67	11	2	73:16:00	8	5	93.75%
행정안전	이채익(국)	22	37	10	3	100:13:00	18	1	99.24%
문화체육관광	홍익표(민)	16	69	9	7	59:44:00	7	2	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병훈(민)	19	40	10	6	86:03:00	10	2	1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윤관석(민)	30	60	10	7	76:42:00	8	2	99.58%
보건복지	정춘숙(민)	24	47	8	7	82:27:00	8	0	98.96%
환경노동	전해철(민)	16	75	10	7	100:11:00	9	0	93.75%
국토교통	이민기(민)	30	33	9	6	88:16:00	8	1	95.83%
정보위원	조해진(국)	12	5	4	1	-	-	1	-
여성가족	권인숙(민)	17	6	2	1	8:22:00	1	1	100%
계		**355**	**783**	**145**	**89**	**1240:38:00**	**128**	**16**	**97.68%**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400회 본회의 종료일인 2022. 12. 9. 기준임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의 출석의원수 기준 통계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경우 중 1번만 출석해도 출석으로 표시됨) (현장시찰 참석여부는 표시가 안됨)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2021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진행시간	시찰횟수	국회사용일수	영상회의록수	감사위원평균출석률
국회운영	윤호중(민)	28	**9**	2	23:32:00	0	2	**3**	100.0%
법제사법	박강온(민)	18	**78**	10	107:10:00	0	8	**13**	99.4%
정무	윤재옥(국)	24	**47**	10	101:20:00	0	10	**10**	97.1%
기획재정	윤후덕(민)	25	**29**	9	92:37:00	0	7	**12**	90.8%
교육	조해진(국)	16	**64**	7	70:54:00	0	7	**7**	86.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원욱(민)	20	**82**	9	88:27:00	1	8	**10**	98.3%
외교통일	이광재(민)	20	**31**	12	65:01:00	0	5	**5**	94.8% (재외공관포함)
국방	민홍철(민)	17	**67**	10	62:03:00	3	3	**8**	79.4%
행정안전	서영교(민)	22	**33**	10	102:45:00	0	6	**19**	93.5%
문화체육관광	이채익(국)	16	**51**	8	65:44:00	2	6	**7**	9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태흠(국)	19	**36**	10	78:31:00	0	10	**10**	94.2%
산업통상지원중소벤쳐기업	이학영(민)	29	**58**	8	91:03:00	0	8	**8**	95.7%
보건복지	김민석(민)	24	**41**	8	76:19:00	0	8	**8**	98.4%
환경노동	박대출(국)	16	**75**	10	86:56:00	1	7	**9**	93.8%
국토교통	이헌승(국)	29	**33**	9	89:37:00	1	4	**8**	96.9%
정보	김경협(민)	12	**5**	4	-	1	2	**0**	-
여성가족	송옥주(민)	17	**6**	1	8:08:00	0	1	**1**	100.00%
17개	**17인**	**352** **(340)**	**745**	**137**	**1210:07:00**	**9**	**102**	**138**	**94.59%**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1. 11. 23. 기준임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 기준임.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진행시간	시찰횟수	국회사용일수	영상회의록수	감사위원평균출석률
국회운영	김태년(민)	28	9	2	19:49:00	0	2	3	100.00%
법제사법	윤호중(한)	18	76	11	114:29:00	0	11	14	100.00%
정무	윤관석(민)	24	46	10	106:40:00	0	10	10	100.00%
기획재정	윤후덕(민)	26	29	9	102:30:00	1	6	12	99.57%
교육	유기홍(민)	16	64	7	77:58:00	0	5	13	10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원욱(민)	20	82	9	99:16:00	1	8	9	100.00%
외교통일	송영길(민)	21	30	9	83:14:00	1	9(8)	11	96.43%
국방	민홍철(민)	17	63	10	67:15:00	2	3	9	99.26%
행정안전	서영교(민)	22	35	10	96:26:00	0	7	15	100.00%
문화체육관광	도종환(민)	16	56	8	66:37:00	1	7	7	9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개호(민)	19	37	10	97:21:00	0	10	10	96.84%
산업통상지원중소벤쳐기업	이학영(민)	30	44	8	96:06:00	0	8	8	96.67%
보건복지	김민석(민)	24	22	8	77:51:00	0	8	8	100.00%
환경노동	송옥주(민)	16	70	10	98:17:00	1	7	9	93.75%
국토교통	전선미(민)	30	31	10	105:03:00	1	5	10	100.00%
정보	전해철(민)	12	5	4	20:52:00	1	2	0	97.22%
여성가족	정춘숙(민)	17	6	2	8:44:00	1	1	1	100.00%
17개	17인	356	705	137	1329:44:00	10	109	149	98.44%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0. 11. 15. 기준임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진행시간	순감사시간	시찰횟수	국회사용일수	영상회의록수	감사위원평균출석률
국회운영	이인영(민)	28	9	2	24:04	19:19	0	2	3	100.00%
법제사법	여상규(한)	18	76	11	97:46	75:32	0	3	14	98.81%
정무	민병두(민)	24	45	11	84:3	69:39	1	9	10	95.00%
기획재정	이춘석(민)	26	29	10	92:36	65:50	1	6	12	78.99%
교육	이찬열(바)	16	91	8	59:12	61:55	1	3	13	95.6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노웅래(민)	20	82	12	119:5	77:39	1	10	10	95.00%
외교통일	윤상현(한)	22	31	15	92:24	32:17	0	4	4	87.34%
국방	안규백(민)	17	64	11	57:45	49:22	5	2	8	96.26%
행정안전	전혜숙(민)	22	32	11	112:42	84:36	1		20	97.19%
문화체육관광	안민석(민)	16	75	10	55:18	37:50	3	7	7	95.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황주홍(평)	18	34	10	84:1	60:09	0	9	10	90.0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쳐기업	이종구(한)	28	61	11	111:4	66:43	1	10	10	99.29%
보건복지	김세연(한)	22	45	10	85:57	73:26	1	7	9	93.94%
환경노동	김학용(한)	19	71	12	103	77:10	2	8	10	99.38%
국토교통	박순자(한)	30	32	10	110:33	73:54	0	4	11	98.18%
정보	이혜훈(바)	11	5	3	16:56	16:56	1	0	0	93.18%
여성가족	인재근(민)	17	6	2	9:01	6:20	1	1	1	100.00%
17개	17인	354	788	159	1314:04	948:37	19	85	152	94.93%
참고	1. 외교통일위의 경우 해외공관국감시간 포함하였고, 순감사시간에서는 제외한 것임 2. 행정안전, 국방, 정보위원회의 회의시간은 국회공보시간을 참고하였음 3.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19. 11. 29. 기준임									